

2021

정책연구 2021-04

전라북도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

연구진 나정호 · 하의현 · 정호중

Jeonbuk Institute



정책연구 2021-04

전라북도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



연구진 및 연구세부분담

연구책임자	정 호	연구위원	연구총괄, 제1장, 제5장, 제6장
공동연구자	의 현	부연구위원	제3장 2절 일부, 제4장 2절 일부
	정 호	중	전문연구원 제2장 일부, 제4장 1절 일부

자문위원	권 혁 준	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
	김 승 철	영남대학교 무역학부 교수
	김 중 화	강원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
	김 충 재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김 형 섭	군산대학교 해양생명응용과학부 교수
	마 창 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정책연구실장
	박 병 주	경남연구원 스마트도시교통연구실장
	박 상 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어항연구실장
	원 승 환	군산대학교 국제물류학과 교수
	정 달 상	한국농수산대학교 어류양식학과 교수
	정 원 조	울산연구원 전문위원
	채 동 렬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최 지 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지연균형·관광연구실장

연구관리 코드 : 20JU33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연구요약

- 이 연구는 전라북도 새만금해양수산물 조직개편에 따른 해양수산물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됨.
 - 해양수산업정책은 관련 법·제도에 의거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지역별로 유사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전라북도 해양수산물 특성화 요인을 발굴하고, 조직개편 취지에 맞는 전문성 강화방향을 제안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음.

- 전라북도 해양수산물발전, 타 지역 해양수산물발전, 조직경쟁력 등을 중심으로 문헌검토 및 시사점을 도출
 - 전라북도 해양수산물발전을 위한 다양한 계획이 수립되었고, “수산물식품산업”, “해양레저·관광산업”, “해운항만물류산업”, “미래해양산업” 등 선택과 집중 필요
 - 전라북도 해양수산물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이 제안되었지만 조직구조의 한계, 인력부족 등으로 실제 이행사업이 부족
 - 해양수산업분야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지역보유자원의 특화전략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아이템 선정 경쟁, 지역 해양자원의 미래산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이 추진
 - 조직경쟁력 관련 선행연구에서 타 지자체와 국가예산확보 경쟁원리, 정책경쟁력 요소, 조직경쟁력과 구성원 전문성 제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 전라북도 해양수산업무는 “수산업”, “수산물기술연구개발”, “어촌복지증진·소득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음.
 - 정부 해양수산업정책 추진방향은 “수산업 경쟁력 강화”, “항만·어항 사회간접자본 확충”, “어촌지역 활력제고”, “해양환경관리 강화”로 귀결
 - 해양수산업정책업무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추진하며, 정책사업의 진화·지속성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전라북도 해양수산의 차별적인 특화전략을 설정하고 한정된 조직·인적자원을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함.
 - 기존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고도화 전략, 바다자원의 유사성과 모방 용이성 대응전략, 전라북도 해양수산 브랜드정책사업 개발 등이 필요
 - 정책사업의 성과는 관계자 자발적 참여, 지속성이 관건이며, 한정된 행정자원 보완 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사례연구 시사점을 도출한 결과 지역 여건에 따라 조직구조에 차이가 있으며, 조직구조의 경직성을 탈피하기 위한 임시조직, 지원조직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지역산업 경쟁력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대부분 지자체는 해양수산업, 항만물류산업, 해양환경보전 등을 주된 범위로 해양수산조직을 통합하고 있음.
 - 정부정책에 대응하고, 지역특화자원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 임시조직, 지원조직 구성 등 다양하게 대응
 - 다양한 분야의 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TF 설치·운영을 추진하지만 실질적 성과달성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

- 전라북도가 주도하는 해양수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안으로 “전문성 강화”, “특성화 강화”, “참여 강화” 등 3가지 추진전략을 제안
 -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전라북도 해양수산조직 세분화”, “전라북도 해양수산조직개편 단계적 추진”, “전라북도 해양수산 공무원 전문성 강화” 등이 필요
 - “수출주도 수산식품산업”, “탄소중립 갯벌생태환경 보전”, “기초역량강화 + 권역별 특성화 산업”, “농산어촌 지역소멸 대응전략 주도” 등을 특성화 강화방향으로 제안
 - 참여 강화를 위하여 “전라북도 해양수산발전포럼 운영”과 “해양수산 지역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였음.

■ 목 차 | Contents

제1장 서론	3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3
2. 연구목적	7
제2장 선행연구	11
1. 전라북도 해양수산분야 연구동향	11
2. 해양수산정책분야 연구동향	21
3. 경쟁이론과 조직경쟁력	30
4. 선행연구 시사점	35
제3장 전라북도 해양수산정책업무 현황과 과제	41
1. 해양수산 업무의 특성	41
2. 전라북도 해양수산 조직개편	48
3. 전라북도 해양수산정책업무 성과제고 과제	59
제4장 사례연구	71
1. 지역 해양수산조직 운영사례	71
2. 지역자원특성화와 임시조직운영사례	97
3. 사례연구 시사점	103

제5장 전라북도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방안	109
1. 전라북도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방향	109
2. 전라북도 해양수산 특성화 방향	115
3. 전라북도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방안	120
 제6장 결론	 143
1. 연구요약	143
2. 정책제언	146
 참고문헌	 153

표목차 | Contents

〈표 2-1〉 전라북도 해양수산분야 연구동향	11
〈표 2-2〉 「전라북도 해양수산 지역현안문제 발굴」 제안연구과제 종합	12
〈표 2-3〉 「전라북도 해양산업 육성방안 연구」 제안사업 종합	13
〈표 2-4〉 「전라북도 어촌공간 활용방안 연구」 제안사업 종합	14
〈표 2-5〉 수산정책 관련 연구동향	21
〈표 2-6〉 전국시도연구원 수산정책 관련 정책연구동향	23
〈표 2-7〉 해양항만정책 관련 연구동향	24
〈표 2-8〉 전국시도연구원 해양항만정책 관련 연구동향	25
〈표 2-9〉 해양레저·관광정책 관련 연구동향	26
〈표 2-10〉 전국시도연구원 해양레저·관광정책 관련 연구동향	27
〈표 2-11〉 수산기술 R&D, 미래정책 관련 선행연구	28
〈표 2-12〉 전국시도연구원 수산기술 R&D, 미래정책 관련 연구동향	29
〈표 3-1〉 전라북도 해양수산조직업무체계	51
〈표 4-1〉 부산광역시 해양수산조직업무체계	72
〈표 4-2〉 인천광역시 해양수산조직업무체계	75
〈표 4-3〉 울산광역시 해양수산조직업무체계	76
〈표 4-4〉 경기도 해양수산조직업무체계	77
〈표 4-5〉 충청남도 해양수산조직업무체계	80
〈표 4-6〉 전라남도 해양수산조직업무체계	83
〈표 4-7〉 경상남도 해양수산조직업무체계	85
〈표 4-8〉 경상북도 해양수산조직업무체계	89
〈표 4-9〉 강원도 해양수산조직업무체계	92
〈표 4-10〉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조직업무체계	94
〈표 4-11〉 충청북도 해양수산조직업무체계	96
〈표 5-1〉 전라북도 해양수산 특성화 방향 조사결과	117

그림목차 | Contents

〈그림 2-1〉 「전라북도 수산식품산업 발전방안 연구」 중장기 발전전략 종합	16
〈그림 2-2〉 「군산항 물동량 증대방안 연구」 정책사업제안 종합	17
〈그림 2-3〉 「군산항 벌크화물 연계산업 육성방안 연구」 중장기 육성전략 종합	18
〈그림 2-4〉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방안 연구」 제안과제 종합	19
〈그림 2-5〉 군산항 중장기 활성화 전략 제안	20
〈그림 2-6〉 마이클 포터의 5가지 경쟁 요인	31
〈그림 3-1〉 해양수산발전 2030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49
〈그림 3-2〉 전라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 조직도	52
〈그림 3-3〉 해양수산정책업무 추진과정과 대응범위	63
〈그림 4-1〉 부산광역시 해양수산물류국 조직도	73
〈그림 4-2〉 인천광역시 해양항공국 조직도	76
〈그림 4-3〉 경기도 농정해양국과 철도항만물류국 조직도	78
〈그림 4-4〉 충청남도 해양수산국 조직도	81
〈그림 4-5〉 전라남도 해양수산국 조직도	84
〈그림 4-6〉 경상남도 해양수산국 조직도	87
〈그림 4-7〉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조직도	90
〈그림 4-8〉 강원도 환동해본부 조직도	93
〈그림 4-9〉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조직도	95
〈그림 5-1〉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 전문성 강화·특성화 지원방향 제안	125
〈그림 5-2〉 전라북도 해양수산 단계적 조직개편 방향 제안	127
〈그림 5-3〉 전라북도 해양수산 경쟁력 강화요소	129
〈그림 5-4〉 전라북도 삼락농정포럼 추진체계	136
〈그림 5-5〉 전라북도 해양수산발전포럼 구성·운영 제안	137
〈그림 6-1〉 전라북도 해양수산 경쟁력 강화 전략 제안	145

1

장

서론

Jeonbuk Institute

-
1. 연구배경과 필요성
 2. 연구목적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가. 정부 주도의 해양수산정책

- 해양수산정책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함.
 - 해양수산에 관한 기본법인 「해양수산발전기본법(법률 제16570호)」은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계획수립, 사업범위, 의무이행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세계 공통의 해양자원은 특정인의 소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양수산발전계획 수립 및 이행을 국가가 주도함.
 - 해양은 자원의 보고로 현재의 이용과 미래세대를 위하여 보전해야 하며 생활의 터전, 물류수송경로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국가 주도 해양수산정책은 자원을 조화롭게 활용하여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지역 간 정책사업의 유사성을 극복해야 함.
 - 해양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은 정부가 설정한 범위, 목적에 부합해야 하므로 남용을 예방할 수 있어 미래세대를 위한 해양자원 보전 효과가 있음.
 - 해양수산발전을 위한 정부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해양자원의 유사성으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독특한 정책개발 및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나. 해양수산정책 추진과정과 대응

-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사업에 공모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국가해양수산발전정책에 대응하고 있음.
 - 보편적으로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 특화자원과 경쟁요소를 발굴하여 제안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음.

- 일부 지자체에서 신규 사업을 제인하더라도 사업예산 확보를 위한 국화설득, 예산확보, 지자체 공모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됨.
- 정부사업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수산정책업무성과가 평가되는 현실은 지역정책 유사성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정부예산 확보여부, 규모가 지자체의 정책성과로 평가되는 문화가 조성되어, 실제 해당 예산의 집행과 현장여건 개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짐.
 - 어촌뉴딜300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공모를 통한 사업대상지 선정은 차별 없는 정책추진의 강점이 있지만, 지역 해양수산정책의 유사성을 초래함.
- 해양수산정책사업 추진절차와 방법의 틀을 변경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현 상황에 대응하는 전라북도 해양수산정책사업의 성과 개선방안 검토 필요
 - 해양수산정책사업의 형성과 추진방법은 예전과 동일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지만, 전라북도는 조직개편에 따라 정책대응과정에 변화가 생김.
 - 수산분야의 정부정책사업은 수산정책과가 전담하고, 해양분야는 해양항만과가 담당하는 체계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정부사업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

다. 지역해양수산정책 유사성과 전라북도 차별화 요소 발굴

- 해양수산분야에 한정하여 각 지자체의 정책을 살펴보면 대부분 유사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지자체의 해양수산분야 정책사업이 유사한 이유는 해양수산 환경, 해양수산부 정책사업의 유사성 등에 기인
 - 지자체의 해양수산발전정책 범위는 수산업, 수산과학기술, 어촌복지증진 등이며, 해양수산 공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신규 사업 발굴에 한계
 -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해양수산정책업무는 대부분 정부계획에 대응하여 추진하거나, 기존 사업관리 등에 한정됨.

- 전라북도는 수산업, 내수면어업, 갯벌자원, 해양관광자원 등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핵심요소를 중심으로 고도화 전략의 수립·추진이 필요함.
- 김, 바지락 등 수산물, 내수면생산의 강점, 천혜의 갯벌자원, 해양관광자원 등을 지역 해양수산 차별화 요소로 활용
- 타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지역별 특산물, 관광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현재 발굴한 차별화 요소의 고도화를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음.

라. 해양수산업 경쟁력 제고의 결정적 요소 “참여”

- 해양수산분야의 정책사업은 정부예산을 확보한 지역의 행정주도로 추진되며 사업의 성과는 현장에서 결정
- 전북도와 관련 시·군의 해양수산과 행정에서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지만 실제 추진은 현장의 관계자, 기업, 주민 등의 참여를 통해 가능
-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행정조직’에서 시작하지만 실제 성과는 ‘현장의 참여자’에 의해 결정됨.
- 전라북도 해양수산 정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 내부의 운영전략 수립과 더불어 현장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전략 필요
- 현재 업무담당자와 현장 관계자(기업, 주민 등) 점점 네트워크 중심의 업무성과 장점을 활용하고, 한계점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마련
- 행정력 부족의 한계를 단기적 극복할 수 있는 전략으로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발적인 협조 유도방안 검토

마. 전라북도 해양수산업발전을 위한 조직개편

- 2020년 7월 전라북도 조직개편의 결과 새만금해양수산물 수산정책과, 해양항만과가 신설되었음.
 - 기존 단일 조직(농축수산물국 해양수산정책과)에서 해양환경, 수산정책, 어업자원, 어촌양식, 해운항만물류, 해양레저관광 등 이질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개편으로 판단
 - 조직개편은 현행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의 시작으로 실제 해양수산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검토가 필요

- 조직개편에 따라 새만금권역 해양수산업 연계활용 방안을 포함한 전라북도 해양수산업정책의 역량 제고방안을 모색해야 함.
 - 기존 업무와 향후 업무에 대한 검토 후 최적의 형태를 구성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실제 상황 변경, 현실 업무와 업무분장 사이의 괴리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음.
 - 행정조직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은 행정조직 형태에 맞추어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속적인 트렌드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 전라북도 새만금해양수산물 신설은 전라북도 해양수산업 경쟁력 제고의 기회요인으로 지속적인 경쟁력 제고, 고도화를 위한 전략 모색이 필요
 - 수산정책과, 해양항만과로 전문화된 부서구분은 담당업무 성과를 개선하여, 전라북도 해양수산업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새만금해양수산물 신설과 조직개편의 성과가 지역 해양수산업 발전 및 어촌 활성화,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고도화 전략 마련 필요

2. 연구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전라북도 조직개편에 따른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 구체적으로 전라북도 해양수산정책사업 추진 주체인 전라북도와 관련 시·군이 현행 방식보다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전라북도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방향을 설정하고, 적합한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여,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방안 구상

- 전라북도 해양수산발전이 대한민국 해양수산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주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전라북도 해양수산발전과 국가 해양수산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여, 전라북도민이 지역 미래성장동력으로 “해양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함.
 - 전라북도 해양수산업 종사자(기업, 민간, 주민 등)의 성과개선을 지원하여, 관련 분야의 일자리 창출, 창업 등을 유도하며, 해양수산업 지속 가능성을 높임.
 - 지역 여건에 적합한 경쟁요소를 발굴, 차별화하여 안정적인 해양수산업의 생태계를 조성, 해양수산분야 일자리 창출, 신규창업 등을 유도함.

2

장

선행연구

Jeonbuk Institute

-
1. 전라북도 해양수산분야 연구동향
 2. 해양수산정책분야 연구동향
 3. 경쟁이론과 조직경쟁력
 4. 선행연구 시사점

제 2 장 선행연구

1. 전라북도 해양수산분야 연구동향

가. 해양수산(수산정책과)

- 전라북도 해양수산발전을 위하여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특성화, 활성화 전략 등 다양한 정책연구가 수행됨.
- 최근 5년간 해양수산 전반, 수산식품산업, 어촌공간, 항만물류(군산항), 내수면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라북도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 활성화 전략을 연구함.
- 수산식품산업, 어촌공간, 군산항, 내수면산업 등 특성화 전략 연구는 해양수산 전반의 발전전략에 입각하여 지역 자원 연계 특성화 전략을 모색한 것으로 판단

〈표 2-1〉 전라북도 해양수산분야 연구동향

분야	수행년도	수행기관	연구제목
해양수산 (수산정책)	201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라북도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2017	전북연구원	전라북도 해양수산 지역현안문제 발굴 연구
	2017	전북연구원	전라북도 해양산업 육성방안 연구
	2018	전북연구원	전라북도 어촌공간 활용방안 연구
	201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라북도 해양수산발전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201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라북도 내수면 어업육성 및 6차 산업화 계획 수립 용역
	2019	전북연구원	전라북도 수산식품산업 발전방안 연구
항만물류 (해양항만)	2020	한국기계연구원	전북형 첨단 스마트 양식 시스템 구축
	2018	한국종합물류연구원	전라북도 항만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
	2018	전북연구원	군산항 물동량 증대방안 연구
	2019	전북연구원	군산항 벌크화물 연계산업 육성방안 연구
	2020	전북연구원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방안 연구
	2021	전북연구원	군산항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

자료: 참고문헌에 출처를 표기함.

- 수산정책과가 담당하는 해양수산 전반에 대한 연구는 최근 5년간 8건 추진되었으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7)의 “전라북도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전라북도 해양수산발전종합계획 성격이 있음.
- 해당 과업에서 제시한 64개의 분야별 사업에 대해서 도내·외 전문가, 관계자가 우선순위를 선정한 결과에 따라 후속 연구(실행계획)를 추진
- “미래성장엔진 해양수산업”, “휴먼웨어 투자와 활용을 통한 공간과 자원의 융·복합

기반 구축”, “지속 가능한 해양생태환경 조성”, “안심·안전한 연안 환경 조성”, “맛과 맛이 있는 연안 만들기”, “살고 가고 싶은 어촌 만들기”를 대분야로 제안

- 전라북도의 해양자원, 변화하는 트렌드, 4차 산업혁명 기술도입 등 여건을 반영하여 분야별 다양한 정책 사업을 제안

○ 전북연구원(2017)이 수행한 “전라북도 해양수산 지역현안문제 발굴 연구”는 전북씨그랜트센터 출범에 따라 연구협력 제안목적으로 추진

- 해양수산공무원, 수산인, 전문가 등 의견을 반영하여, “해양수산”, “해양생명바이오융합”, “새만금공간활용”, “어촌문화관광” 등 4개 분야에서 과제를 발굴함.
- 전라북도 해양수산 현안을 중심으로 지역현안문제의 과제화 작업을 추진하였으며, 우선순위 평가결과 총 6개의 연구 사업을 제안함.

〈표 2-2〉「전라북도 해양수산 지역현안문제 발굴」 제안연구과제 종합

구분	제안과제명
해양수산	전라북도 해양생태환경 변화와 수산자원의 현황조사
해양수산	전라북도 수산식품산업화 방안 연구
해양수산	수산자원 성장을 방해하는 병원균에 대한 원인분석과 해결방안
해양수산	유향 축제식 양식장 활용방안 연구
해양수산	전라북도 로컬씨푸드 실태와 개발방안
해양수산	서해안 수산양식시설 현대화에 따른 외해양식 적합 어종과 시설 제안
해양수산	수산자원 복원을 위한 어미 산란장 조성 연구
해양수산	수산물의 합리적인 판매체계 구축방안 연구
해양생명바이오	갯벌자원기반 고령친화형 기능성 식품소재 개발
해양생명바이오	전라북도 해양수산모니터링을 위한 드론 활용방안
새만금공간활용	새만금 공간을 활용한 전라북도 해양수산 발전방안
새만금공간활용	해양에너지 거점으로서의 새만금 활용방안 연구
새만금공간활용	새만금 지역 어패류 치매 시범 양식장 운영방안 연구
새만금공간활용	새만금 해양수산인의 해양수산업 유인방안 연구
어촌문화관광	어촌 정주환경 및 삶의 질 개선 방안
어촌문화관광	살아보고 느끼는 어촌미을체험 여가환경 조성
어촌문화관광	어촌 공유사무실 도입방안
어촌문화관광	전라북도 어촌 6차 산업화 방안 연구
어촌문화관광	전라북도 어촌관광자원의 해양레저·스포츠 산업화 방안
어촌문화관광	관광 체험 중심의 어촌 특성화 방안 연구

자료: 전북연구원 (2017). 전라북도 해양산업 지역현안문제 발굴 연구. 전북씨그랜트센터, 73.

- “전라북도 해양산업 육성방안 연구”는 「전라북도 해양산업 육성조례」에 따른 해양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행(나정호 외, 2017)
- 연구결과 전라북도의 행정조직 여건을 고려하여 “수산식품산업”, “해양레저산업”, “항만물류산업”, “미래해양산업” 등 4개 산업의 전략적 육성 필요성을 주장
 - 집중육성이 필요한 산업별로 “인프라 조성”, “기존 인프라 활성화”, “연구개발” 등을 구분하여 세부사업을 제안

〈표 2-3〉 「전라북도 해양산업 육성방안 연구」 제안사업 종합

산업	구분	내용
수산식품산업	인프라구축	1. 수산식품 가치향상 클러스터 조성
		2. 수산식품 콜드체인 구축
	산업활성화	1. 전라북도 로컬씨푸드 개발
		2. 수산식품 연구개발 지원
		3. 전라북도 특화 수산식품 선정 및 육성
		4. 지역축제 연계 요리경연
	연구/지원	1. 해가람 브랜드가치 증대방안 연구
		2. 전라북도 수산식품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3. 수산식품경영컨설팅 지원
		4. 수산식품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
해양레저산업	인프라구축	1. 해양레저안전교육센터 조성
		2. 레저어업단지 개발
		3. 삼각행복길 조성
		4. 새만금 해양복합테마공원 조성
	산업활성화	1. 전라북도 해양레저연계 투어프로그램 개발
		2. 4계절 해변 프로그램
		3. 해양레저창업공모전
	연구/지원	1. 해양레저 홍보단 운영
		2. 해양레저산업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
해운항만물류산업	인프라구축	1. 새만금신항만 건설 및 1단계 부두 활성화
		2. 상왕등도항 해경선부두 건설
	산업활성화	1. 포트세일즈 활동 고도화
		2. 전라북도 해운항만물류산업육성 협의회
		3. 스마트친환경 항만경쟁 대응
		4. 새만금잼버리2023 연계 크루즈부두운영
	연구/지원	1. 군산항 현안문제 해결방향 연구
		2. 포트세일즈 활동 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3. 전라북도 해운항만물류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
미래해양산업	인프라구축	1. 전라북도 해양생명바이오연구센터 설립
		2. 새만금 해양바이오부티산업클러스터 조성
		3. 새만금 해양융합성생물자원 실증배양단지 조성
	연구/지원	1. 해양산업 관련 데이터 축적 및 관리
		2. 미래해양산업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

자료: 나정호 외 (2017). 전라북도 해양산업 육성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146.

- “전라북도 어촌공간 활용방안 연구”는 해양수산업 전진기지인 어촌공간을 정주 여건 개선, 수산식품산업 활성화, 어촌관광 거점으로 공간 가치창출 방안을 제 안함(나정호 외, 2018).
- 어촌공간 가치를 재해석하여 수산업과 관광 등 다양한 목적의 활용방안을 제안하였 고, 2019년 어촌뉴딜 300사업이 추진되면서 정부 정책방향과 일치성이 높아짐.
- “개방과 도전의 어촌”, “참여와 협력의 공동체”, “지속과 보전의 바다” 등 3가지 전 략에 맞추어 총 10개의 정책 사업을 제안

〈표 2-4〉 「전라북도 어촌공간 활용방안 연구」 제안사업 종합

전략	사업	기간
개방과 도전의 어촌	바다청년창업지원	2019년~2023년
	전라북도 어촌 경영컨설팅 지원단	2019년~2023년
	전라북도 열린 어항공원 조성	2020년~2023년
참여와 협력의 공동체	열린 어촌 공동 업무 공간 조성	2019년~2023년
	전라북도 열린 어촌 빈집 리모델링	2020년~2023년
	어촌 활성화 공모전	2019년~2023년
	어촌 예술인 공간 조성	2021년~2023년
지속과 보전의 바다	열린 어촌 도전의 바다 홍보단 운영	2020년~2023년
	전라북도 바닷가 모니터링	2021년~2023년
	전라북도 어촌자원 발굴단 운영	2019년~2023년

자료: 나정호 외 (2018). 전라북도 어촌공간 활용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146.

- “전라북도 해양수산업발전 실행계획 수립”은 해양수산업발전기본계획(2017) 내용 중 군산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등 4개 시·군에서 추진 가능한 핵심사업의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9d)
- 군산시 “개야도 섬 6차 산업화”, 김제시 “전북형 내수면 클러스터”, 고창군 “어촌 에코뮤지엄”, 부안군 “스마트 바다목장”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별 현 장조사와 실행전략을 구상

- “전라북도 내수면 어업육성 및 6차 산업화 계획 수립 용역”은 내수면어업에 강점이 있는 전라북도의 고도화 전략을 구상(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9e)
 - “지역특화 양식품종 경쟁력 강화”, “소비자 참여형 6차 산업화”,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맞추어 세부 사업을 제안
 - 내수면어업에 강점이 있는 전라북도는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혁신적 체질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산업기반을 마련하고, 유통체계 개선과 소비자 수요창출, 적극적인 내수면 생태계 보호 등 필요

- “전라북도 수산식품산업 발전방안 연구”는 “전라북도 해양산업 육성방안 연구”의 후속연구로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조성, 연구개발, 인식전환 등 정책사업을 제안(나정호 외, 2019)
 - “수산식품산업 인프라 조성”, “수산식품 연구개발”, “수산식품 인식전환 및 소비활성화” 등 전략을 세분하여 22가지의 정책사업을 제안
 - 전라북도 수산식품산업 관련해서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출시한 수산물 공동브랜드 “해가림” 브랜드 가치 향상을 토대로 지역 수산식품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비전	맛있고 깨끗하고 건강한 먹거리, 전라북도 해가람	
목표	전라북도 수산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추진 과제	❶ 수산식품산업 인프라 조성	❶ 해양권역별 수산식품 테마파크 조성 ❷ 신선물류 콜드체인 구축 ❸ 민물고기 클러스터 조성 ❹ 특산물 특화 연구지원센터 운영 ❺ 지역 특화 씨푸드거리 조성 ❻ 어촌레저체험공간 조성 ❼ 스마트양식장 조성 ❽ 수산식품 스타트업 창업 지원 공간 조성
	❷ 수산식품 연구개발	❶ 수산식품 개발 ❷ 수산종자 R&D ❸ 수산식품 조리법 개발 ❹ 염생식물, 해조류 활용 건강식품 개발 ❺ 수산식품 관련 전·후방산업 모태펀드 개발 ❻ 고부가가치 품종 스마트 양식기술 개발
	❸ 수산식품 인식전환 및 소비활성화	❶ 해가람 프로젝트 ❷ 단체급식 수산식품 소비연계 협약 ❸ 국제수산식품박람회 참여지원 ❹ 전라북도 수산식품경영권선택 운영 ❺ 로컬씨푸드 이용 활성화 ❻ 전라북도 바다세프명인, 어촌마을 연계프로그램 개발 ❼ 전라북도 지역 먹거리 개발 ❽ 전라북도 어촌맛지도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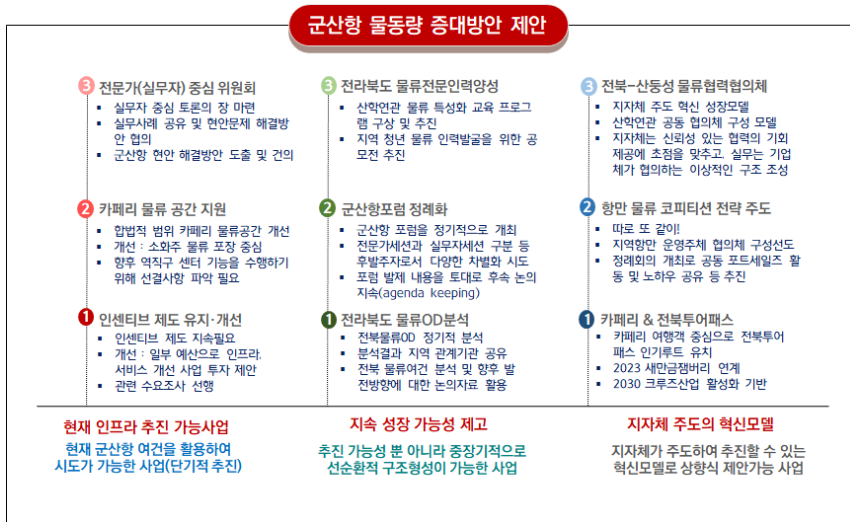
자료: 나정호 외 (2019). 전라북도 수산식품산업 발전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114.

〈그림 2-1〉 「전라북도 수산식품산업 발전방안 연구」 중장기 발전전략 종합

- “전북형 첨단 스마트 양식 시스템 구축”은 첨단기술이 수산양식분야에 도입되는 추세에 대응하여 양식기술연구개발 전략 구상(한국기계연구원, 2020)
 - 수산양식기술의 첨단화라는 정부정책기조에 맞추어 전라북도 전략 품종을 발굴하고, 해당 품종의 양식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 수립
 - 아쿠아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전북형 첨단 스마트 양식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관련 기술을 수출하는 고도화 전략을 제안

나. 항만물류(해양항만과)

- 해양항만과가 담당하는 분야는 항만물류 분야의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으며, 상대적으로 해양레저관광, 해양환경 분야의 연구가 부족함.
- 항만물류 분야는 전라북도의 유일한 수출입 관문인 “군산항”을 대상으로 활성화 전략을 다양하게 모색
- “전라북도 항만발전종합계획 수립용역”(한국종합물류연구원, 2018)은 군산항, 새만금 신항만, 마리아항만, 국가관리연안항 등 전라북도 전체 항만을 대상으로 연구함.
- 일부 사업은 제4차 전국무역항기본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기반으로 전라북도 항만물류정책계획의 구체화 필요



자료: 나정호 외 (2018). 군산항 물동량 증대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그림 2-2〉 「군산항 물동량 증대방안 연구」 정책사업제안 종합

- “군산항 물동량 증대방안 연구”는 현재 군산항 인프라를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는 정책사업을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추(나정호 외, 2018).
- 현재 인프라를 활용하여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군산항 인센티브 제도의 유지·개선”, “카페리 물류 공간 지원”, “전문가 중심 위원회 운영”을 제안
- 지속 성장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군산항 물류OD분석”, “군산항 포럼 정례화”, “전라북도 물류전문인력양성” 사업을 제안

- 지자체 주도의 혁신성장모델로 “카페리 & 전북투어패스”, “항만 물류 코퍼티션 전략 주도”, “전북-산동성 물류협력협약체” 운영 등을 제안

○ “군산항 벌크화물 연계산업 육성방안 연구”는 종합항만인 군산항에서 처리되는 벌크화물 물동량 증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나정호 외, 2019)

- 벌크화물 물동량은 적극적인 화물유치 활동 성과로 달성되지 않고, 배후 산업단지에 서 활용하는 수입원료가 증대되어야 하므로 연계산업 발전전략을 모색
- 벌크화물 연계산업 육성을 위하여 “특화산업발전기반 조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보편적인 정책 사업을 제안

비전	전라북도 특화산업발전의 관문, 군산항	
목표	전라북도 특화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 조성	
추진 과제	① 특화산업발전 기반조성	① 군산항 준설공사 ② 전라북도 특화산업단지 조성 ③ 전라북도 특화산업 전시관 운영 ④ 군산항과 산업단지 연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②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① 군산항 해운항만산업 실태조사 ② 전라북도 특화산업 모니터링 ③ 군산항 벌크화물 수출입 연계방안 연구 ④ 군산항 벌크부두 미래 활용방안 연구
	③ 군산항 활성화	① 군산항 활성화 협의체 구성·운영 ② 대외 협력모델 개발 ③ 군산항 인센티브정책 유지·개선 ④ 군산산업단지 연계산업 유치

자료: 나정호 외 (2019). 군산항 벌크화물 연계산업 육성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91.

〈그림 2-3〉 「군산항 벌크화물 연계산업 육성방안 연구」 중장기 육성전략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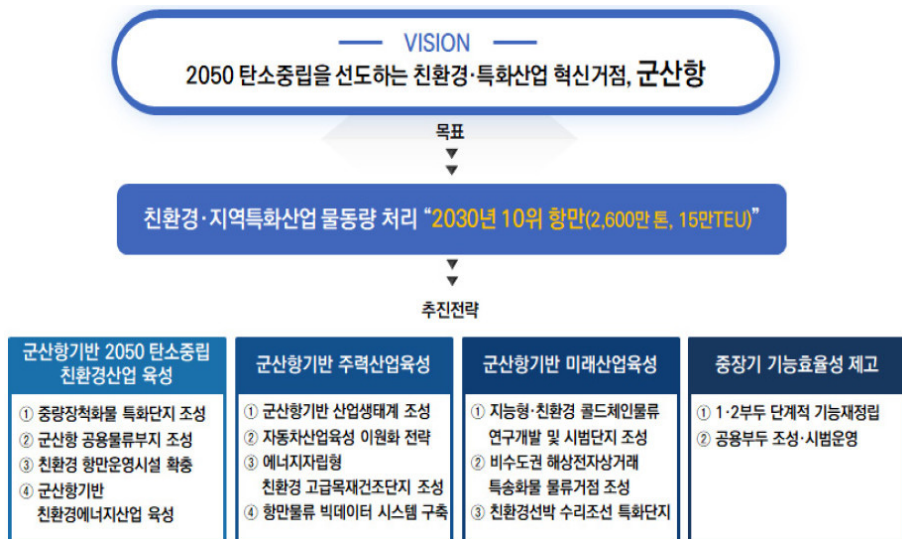
-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방안 연구”는 군산항 물동량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당위성을 모색하고, 지자체의 화물유치 지원방안을 제안(전북연구원, 2020a)
 - 군산항 물동량 창출을 위해서 해상전자상거래 통관장 조성 필요, 콜드체인 거점 등 인프라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결과를 제시
 - 현재 여건을 활용하여 물동량 유치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산항 물류정책위원회”가 주도하는 거버넌스 체계 필요성을 제안

핵심목표	추진전략	세부과제
1 현 여건 활용 군산항 화물유치	1 군산항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전문화	1 군산항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2 서해안권역 항만 협력 거버넌스 구성 3 군산항 비즈니스 지원센터 조성
2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 효과 개선	2 군산항물류정책 위원회 운영	1 군산항 포럼 정례화 2 화물유치지원제도 특성화 3 전라북도 이탈 화물유치
3 인프라 조성 신규 화물유치	3 기항지 중심 화물 유치효과 제고	1 전략적 화물유치 활동 추진(중국) 2 전라북도-산동성 물류협력 체계 구축 3 전략적 항로 다변화(동남아) 4 개항 간 운송 서비스 유치
4 전라북도 산업경제 활성화 기여	4 군산항 산업단지 특성화·차별화	1 전라북도 주요 산업 물류 모니터링 2 미래 유망 산업 연구 개발 3 전기자동차 생산 거점 고도화 4 중고자동차 수출복합단지 조성
5 군산항 지속 발전 가능성 제고	5 인프라 조성으로 신규화물유치·일자리 창출	1 내륙 운송 연계 거점 조성 2 전자상거래 통관 체계 조성 3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4 군산항 홍보관 조성
	6 미래 산업 발굴 지역 산업 혁신	1 지능형 콜드체인거점항만 조성 및 운영 2 전라북도 물류전문인력양성

자료: 전북연구원 (2020a).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방안 연구. 군산시, 155.

〈그림 2-4〉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방안 연구」 제안과제 종합

- “군산항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군산항 2030 비전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됨(전북연구원, 2020b).
- “군산항 활성화 TF(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굴한 12가지 전략과제 중 3개 전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 발굴
- 군산항 미래성장동력으로 “군산항 기반 2050 탄소중립 친환경산업 육성”, 군산항 특성화 전략으로 “군산항기반산업 육성 Two-Track 전략”, 군산항 항만기능 재정비의 “중장기 단계적 기능조정 추진”을 제안



자료: 전북연구원 (2020b). 군산항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용역. 군산지방해양수산청, 129.

〈그림 2-5〉 군산항 중장기 활성화 전략 제안

2. 해양수산정책분야 연구동향

가. 수산정책

- 최근 5년간 온나라 정책연구, 해양수산부, 광역·기초지자체 등이 발주한 수산 정책 관련 연구문헌을 조사함.
- 수산정책 분야의 연구는 대부분 정책목표를 “수산업, 어민 소득증대”, “지속가능성 제고”, “기후 변화 등 글로벌 변화 대응”에 맞춤.
- 수산물 가치 창출, 수출 및 국내 저온유통체계 등 판로확대, 공익형직불제, 재해보험 제도 등 어민, 수산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정책방안이 제안
 - 농수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농축수산물 복합유통단지, 저온유통체계 조성 등 수산물 유통체계 선진화와 판로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전략이 적극적으로 검토
-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어촌 과소화 예방정책, 일자리 창출 정책 등과 연안생태환경 보호, 모니터링 정책 사업 제안
-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세계적인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동참하기 위한 거시적 관점의 정책을 구상

〈표 2-5〉 수산정책 관련 연구동향

수행년도	수행기관	연구제목
2019	통일농수산	평화시대 지속가능한 남북농수산협력 방향 설정 연구
2019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을 위한 정책 전환 방향 연구
2019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개선방안 마련 연구
201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상풍력 사업의 해양수산 분야 영향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 연구
2019	보험개발원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손해를 개선방안 연구
201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 방안 연구
2019	유플스	양식수산물 전략품목 육성사업 추진체계 개선방안 마련 연구
2019	한밭대학교산학협력단	노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20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종형 공공 농축수산물 복합유통단지 기본방향 및 타당성조사
201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백서(2017-2018) 발간 연구용역
2018	한국해양정책학회	충남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2018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방향정립 용역
2017	한국해양정책학회	해양수산 주요정책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 연구
2017	한국행정학회	서천군 해양수산분야 조직강화를 위한 조직설계 연구
2017	한국행정학회	해양수산 행정권한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체계 연구
2017	한국정치학회	국내외 정치지형 변화에 따른 해양수산 정책방향 설정 연구
2017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수산부문 기후변화대응체계 기반 구축 연구
2017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제1차 부산수산업·어촌발전계획
2017	성균관대 산학협력단	삼척시 연안 생태환경 모니터링 및 수산자원 복원 모델화

수행년도	수행기관	연구제목
2017	한국연안환경생태연구소	자율관리어업이 수산자원회복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2017	남양엔지니어링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017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청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2017	전북경제연구원	전주 농수산물 도매시장 활성화방안 및 시설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
201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권역별 수산물 수출가공단지 조성을 통한 수출가공산업 육성 방안 마련
2016	국제경영원	해양수산 ODA 사업의 체계적인 확대를 위한 협력모델 개발
201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라남도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
201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물 정부비축사업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201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중국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진입 절차 대응방안
201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6년도 해양수산물 규제비용 총량제 비용편익분석
2015	더비엔아이	해양수산 일자리 동향 파악 및 고용 활성화 연구
2015	아쿠아인티내셔널	해와수산물 인증제도 국내 적용방안 연구
2015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라북도 연안 수산자원조사 연구용역
201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안산시 연안 수산자원 서식 및 생태환경 실태조사 용역
2015	송실대학교산학협력단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및 제도화 방안 정책연구용역
201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 등록규제 적정성 검토용역
201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중장기발전방향 및 지원금액 산정기준 연구
201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 구조개선 방안
201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기자재산업 실태조사 및 육성방안 연구

자료: 참고문헌에 출처를 표기함.

○ 전국시도연구원의 수산정책 관련 정책연구동향은 지자체 추진가능사업과 선도적 정부제안사업 발굴에 집중하고 있음.

- 지자체 추진가능사업은 지자체 출연연구기관 특성상 지자체와 관계 시·군이 직접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또는 기존 사업의 성과개선 전략을 제시함.
- 선도적 정부제안사업 발굴은 현재 정부정책사업은 아니지만 글로벌 트렌드, 세계 경쟁환경변화에 따라 지역 특화자원의 국가전략화를 정부에 제안함.
- 수산분야의 지역특성화 효과와 당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책연구기관과 지역출연연구기관 연구자가 공동 연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수산정책분야의 지역 출연연구기관 정책연구는 지역특성과 요소를 발굴하고, 지역발전에 연관성이 있는 산업과 융·복합 전략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음.

- 수산업, 수산식품산업이 독자적으로 성공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전·후방산업, 연계산업 등을 발굴, 융·복합 전략을 수립하는 연구가 많음.
- 지역 해양수산 여건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하여 지역별 해양수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지자체가 있음.

- 표적시장을 설정하여 해당 시장과 지역의 수산물, 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는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

〈표 2-6〉 전국시도연구원 수산정책 관련 정책연구동향

구분	발행년도	저자	연구제목
인천연구원	2018	김운수, 이명화	인천시 수산업 실태분석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대구경북연구원	2017	권혁준	경북 수산자원조성 첨단기술 적용을 위한 기초 연구
	2016	권혁준	경북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연구
	2015	정희훈 외	한·중 FTA에 따른 지역 농수산업 부문의 영향과 대응전략
부산연구원	2019	이선영 외	서부산권 수산업의 6차산업화방안 연구
	2016	이선영, 강민주	부산 수산업 미래전문인력 양성 방안
	2015	장정재 외	부산 수산업의 중국시장 진출 확대방안
	2015	이선영, 강민주	부산 수산기재산업 육성방안
울산연구원	2019	변일웅 외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방안 기초연구
	2018	정원조	울산형 양식산업 육성 방안 연구
광주전남연구원	2019	박은옥	어장환경 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감축 최소화 방안
	2019	김현철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활성화 방향
강원연구원	2018	김종재, 전만식	강원도 내수면 수산자원의 다목적 활용을 위한 기초 연구
	2017	김종재	강원도 수산업의 기후변화 적응과 대응 방안
	2016	김종재	강원도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충남연구원	2019	김종화	북한 수산업 현황 및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2018	신우석, 윤영관	충청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추진연구
	2017	박영제 외	기후변화에 따른 충청남도 수산업 실태 및 대응 방안
	2017	김진영	충청남도 해양수산의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
	2016	김종화	충남 수산물 유통, 가공, 수출산업 발전방안 연구
	2016	신동호	천북수산물가점단지 조성사업 가공분야 활성화방안
	2015	강미야 외	한중 FTA 농림수산물분야 대응방안 연구
	2015	권영현	충남 수산물 공동브랜드 추진방안에 대한 방향 설정
전북연구원	2019	나정호 외	전라북도 수산식품산업 발전방안 연구
	2019	나정호, 정호중	전라북도 수산물 안전과 수산업의 지속발전
	2018	나정호 외	전라북도 어촌공간 활용방안 연구
	2017	나정호 외	전라북도 해양산업 육성방안 연구
	2017	나정호 외	전라북도 해양수산 지역현안문제 발굴
경남연구원	2017	채동렬, 손희곤	경남 수산가공산업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과제 도출
	2016	채동렬 외	경남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과 과제
	2015	김진영, 채동렬	경상남도 수산업의 기후변화 적응현황과 대응방안
제주연구원	2020	좌민석	코로나19에 따른 제주 수산업의 동향과 수산물 소비촉진 방안
	2019	좌민석, 조성환	추자도 수산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방안 연구
	2019	좌민석, 김지현	2019년 수산물 유통 관측 조사 용역
	2018	좌민석, 박상우	제주지역 품질위생형 수산물 산지위판장 조성방안 연구
	2018	안경아	제주특별자치도 농림수산물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 방안
	2018	한승철	제주 농수산식품의 ASEAN 수출시장 동향 및 시사점
	2018	좌민석	북한 수산업의 실태와 제주, 북한 수산분야 협력방안
	2017	한승철, 한병우	청정 제주 수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조사 연구
	2017	좌민석, 한석중	제주지역수산업의 6차산업화를 위한 기초연구

자료: 참고문헌에 출처를 표기함.

나. 해양정책

- 해양항만정책연구는 해운항만물류, 마리나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고, 항만의 가치가 물류거점에서 지역민 친수공간으로 확장됨에 따라 해양레저 거점, 마리나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
- 해운항만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항만 본연의 기능인 물류거점 역할을 중심으로 활성화 방안 제시
- 항만운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해운항만물류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친환경 항만 운영을 위한 전략 등이 검토
- 기존 항만물류산업의 중심지를 대상으로 국가항만정책제안을 위한 연구와 지역항만의 거점화를 위한 인프라, 조직, 운영전략 제안 연구가 수행

〈표 2-7〉 해양항만정책 관련 연구동향

수행년도	수행기관	연구제목
2019	해양환경공단	항만배출원 관리기준 마련 및 정책 활용 방안 연구
2019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스마트 해상물류 구축을 위한 선박항민육상 간 서비스 연계 효율화 방안 연구
2019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경북 항만 100년 기념사업 기본구상 연구용역
201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18	한국항만운송노동연구원	스마트 항만 육성방안 연구
201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인프라 경쟁력 수준 평가 및 개발 기준 마련연구
2018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군산항 근대 항만역사관 건립 타당성조사용역
2018	한국법제연구원	항만법령 전부개정 방안 연구
2018	한국항만기술단	항만건설공사 작업일수 산정방식 개선 연구
201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항만물류전문인력 양성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201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실태조사 및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
201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동북아 항만간 협력관계 촉진 방안 연구용역
2018	한국산업관계연구원	공항만 상시출입자(차량) 검색업무 위탁방안 및 위탁운영비 산출을 위한 타당성 연구
2016	한국종합물류연구원	전라북도 항만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
2016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	중앙과 지방간 항만관리 역할분담 연구
2016	항만협회	마리나항만시설 안전점검 지침 연구
2016	한국항만협회	국제 항만기술 연구동향조사 및 기술정보 구축 용역
2016	한국법제연구원	항만법령 체계정비 방안 연구용역
201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동북아 항만간 협력관계 촉진방안 연구용역
2016	지방공기업평가원	(가칭)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2015	한국교통연구원	항만배후도로 지원기준 정비 연구

자료: 참고문헌에 출처를 표기함.

- 전국시도연구원의 해양항만정책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지역거점 항만을 중심으로 물류기능과 친수기능 제고를 위한 정책제안사업을 제시
- 지자체가 보유한 지역거점 항만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대형항만을 보유한 지자체와 중소형 항만을 보유한 지자체의 연구 추세에 차이가 있음.
- 대형항만은 동북아물류거점, 스마트항만, 복합물류전략 등 국가항만정책과 부합한 지역 연계전략을 구상하고, 노후화, 지역주민 민원 등 대응전략 검토
- 중소형항만은 국가항만정책에 맞는 지역항만과 산업의 특성화 전략을 검토하고, 물류역량이 상대적으로 약한 지자체는 항만공간을 활용한 신산업 발굴과 해양신산업 발굴 및 육성전략을 제안

〈표 2-8〉 전국시도연구원 해양항만정책 관련 연구동향

구분	발행년도	저자	연구제목
인천연구원	2020	윤혜영, 정민선	인천형 시민참여 항만재생 프레임 구축방향 연구
	2019	윤하연, 강동준	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관리방안 연구
	2019	강동준, 이명화	인천시 물류 스타트업 육성방안 연구
	2019	김운수, 이명화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2018	김운수, 이명화	연안여객 선사 및 항로의 운영효율성 분석 연구
	2018	강동준, 이명화	수도권 거점 소형(레저) 선박 검사센터 조성 기초연구
	2018	김운수 외	인천점검, 도약을 위한 제언 - 해양항공물류 분야
	2017	기윤환	인천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구상
	2017	김성우	2016년도 환경관리해역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평가 연구
	2017	김운수 외	도서지역 해상교통 접근성 향상방안 연구
	2017	기윤환, 김주희	인천해안지역 친수공간 접근성 확보 방안
	2017	강동준, 이명화	공항만 도시 인천: 쿠테이너 화물 처리에 따른 인천항의 지역기여도 분석
	2017	조상운 외	항만 역세권 연계 도시재생 활성화방안(1)
	2017	최태림	공항만 도시 인천: 공항과 항만의 재정기여 분석
	2016	조상운 외 8	인천 내항·개항장 일대 현안 진단 및 공간 재생 전략
	2015	김운수	한중FTA체결에 따른 인천항 물동량 영향분석과 대응방안
	2015	최병국 외	국제여객터미널, 송도신항 개발에 따른 인천서부 교통인프라 증대방안
	2015	김운수	인천신항 항로중심으로 선박대형화에 대응해야
대구경북 연구원	2018	권혁준	경상북도 해양바이오 신소재산업 육성 방안
	2018	이동형	경북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부산연구원	2020	장하용 외	부산 스마트 항만(Smart Port) 연관산업 육성방안 연구
	2019	허윤수 외	해양신산업 육성전략 : 동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2018	허윤수 외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중앙권한 지방이양에 관한 연구
	2017	장하용	해양분야 국제기구 부산 유치 전략 마련
	2017	안영철	부산시 해양조선 산업지도를 통한 정책연구
	2017	최윤찬 외	부산 조선/해양기자재 산업 사업다각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2016	장정재 외	중국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성과와 부산의 대응방안
	2015	허윤수	부산 해양산업 클러스터 기업 유치 방안
울산연구원	2019	정원조	재해안전항만 구축 방안 연구:울산 해양오염사고 대응 매뉴얼 개선

구분	발행년도	저자	연구제목
광주전남 연구원	2018	김동주	전남 해양공간계획 도입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2019	조응래, 박충훈	평택·당진항 발전협력체계 구축 방안
	2018	조응래, 이수행	평택항 물류 활성화 방안
강원연구원	2017	김석중	속초해양산업단지 종합보세구역 발전방안
충남연구원	2018	김중화, 목소리	충남 신해양도시 조성을 위한 탐색적 연구
	2018	김중화 외	서천군 해양산업 발전 기본계획
	2018	김진영	충청남도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2018	신우석 외	항만 내 수 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대전항을 중심으로
	2017	김중화 외	충청남도 해양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2017	김중화 외	보령시 해양항만 발전 기본계획(2017~2030)
	2017	윤종주 외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 모델 개발
	2015	김경태	충남 마리나항만 개발 기본구상 및 활성화 대책
	2015	김형철 외	충청남도 SOC 분야별 현황 수준 검토 및 시사점
전북연구원	2020	나정호 외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방안 연구
	2019	나정호 외	군산항 벌크화를 연계산업 육성방안 연구
	2018	나정호 외	군산항 물동량 증대방안 연구
	2017	나정호 외	전라북도 해양산업 육성방안 연구
경남연구원	2016	박병주	경남 항만의 특성화 강화 방안
	2015	김진근, 이정수	불황기 조선해양산업 정책방향
제주연구원	2018	좌민석	제주도 해양치유산업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

자료: 참고문헌에 출처를 표기함.

○ 해양레저·관광정책 관련 연구는 해양관광의 트렌드에 해양레저스포츠가 부각되면서 국민의 여가공간으로 바다를 활용하기 위하여 검토

- 기존 해양레저스포츠 거점단지 중심으로 활성화 전략을 검토하고 있으며, 바다환경 유사성에 따라 비슷한 사업이 제안

〈표 2-9〉 해양레저·관광정책 관련 연구동향

수행년도	수행기관	연구제목
2019	영산대학교 산학협력단	해운대구 해양레저 상품개발
2019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남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2018	한국도시재생기술연구원	부안군 해양관광 발전계획 수립 용역
201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저변확대를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2017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해양관광진흥지구 개발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 연구
2017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산시 천수만 지역 해양관광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2017	한국경제개발연구원	부산해양관광진흥 실행계획
2017	한국산업정책연구원	국민체육 해양레저스포츠 테마파크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16	강원발전연구원	강원도 해양레저관광발전 마스터플랜 연구
2016	한국관광개발연구원	새만금 해양레저 선도사업 추진방안 연구
2016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여수시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자료: 참고문헌에 출처를 표기함.

- 전국시도연구원의 해양레저·관광정책 관련 연구는 지역 해양관광거점을 중심으로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정책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
- 서해안권역의 지자체는 갯벌을 특화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해양레저관광의 거점 단지를 보유한 지자체는 다양한 해양레저 프로그램을 추진함.
- 여촌체험마을중심의 여촌관광과 해양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해양레저스포츠, 낚시 등이 전통적인 해양레저·관광정책으로 평가되며, 바다자원의 유사성, 모방가능성이 높아 비슷한 관광 프로그램이 많음.
- 해양레저·관광정책의 핵심은 다른 영역 연구와 달리 정책제안사업의 저변에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음.

〈표 2-10〉 전국시도연구원 해양레저·관광정책 관련 연구동향

구분	발행년도	저자	연구제목
인천연구원	2019	강동준 외	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
	2017	심진범, 김지선	인천시 섬 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실태 분석 연구
	2017	김창수, 홍승연	인천 개항장 도시서사지원 활용방안
	2017	황희정	(강화갯벌 예코 프로젝트) 갯벌이 살아나는 관광
	2016	김창수, 윤진현	인천시 해양설화의 콘텐츠화 방안연구
	2016	김운수, 이명화	인천시 해양레저산업 육성계획 연구
부산연구원	2020	지창환 외	부산시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대응방안: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중심으로
	2019	박경옥 외	부산지역 체험형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
	2019	김태만 외	해양인문학진흥센터 조성 구상 연구
	2016	최도석 외	부산 해양공간 개발 기본구상
	2016	조우정 외	해양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수요분석 및 수요자 중심의 정책 연구
	2015	최도석, 엄혜민	부산지역 해양낚시레저파크 조성 방안
	2015	김성국 외	해양문화콘텐츠 중심도시 부산의 가능성
경기연구원	2019	이상훈 외	가평군 산악·수상관광 활성화 방안
	2018	지우석, 박경철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방안 마련 연구
충남연구원	2018	김경태 외	충남의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2016	이인비	대전-원산도-태안간 국도77호선 개통에 따른 해양관광활성화 방안
	2015	김경태	해양레포츠 대회 실태 조사 및 개최방향 수립
	2015	김경태	영목항 나들목 주변 해양관광거점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전북연구원	2018	나정호 외	전라북도 여촌 공간 활용방안 연구
경남연구원	2019	김태영	남해안 해양관광특별권역 활성화 기반 구축 계획
	2018	채동렬	경남 여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촌문화콘텐츠 발굴 및 활용방안
	2015	채동렬	여촌관광단지 및 해양낚시공원 활성화 방안
제주연구원	2019	최영근	제주형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
	2018	문순덕, 김석윤	제주해양문화자원 활용 방안 연구
	2015	김태윤	해양국립공원 조성을 위한 기초 연구

자료: 참고문헌에 출처를 표기함.

다. 미래해양수산업

- 미래해양정책은 해양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신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 하겠다는 정부정책에 맞추어 미래자원 연구개발에 집중
 - 수산물 어종별 양식기술, 수산물 안전성 검사 기술개발, 수산물 품질을 유지하면서 안전한 관리·유통을 위한 인프라 시설 등 연구개발이 많음.
 - 정부정책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의 스마트화 도입, 미래 신산업 발굴 등을 위한 기초 연구개발은 국책연구기관(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수행하고 있음.

〈표 2-11〉 수산물 R&D, 미래정책 관련 선행연구

수행년도	수행기관	연구제목
2019	넥스트아이앤아이	해양수산 R&D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201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 미래전략 수립 연구용역(해양수산 스마트화를 중심으로)
201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 수조경제 기술 활성화방안 연구
2018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체계 마련
2018	한국법제연구원	수산물 안전성조사 효율화 방안 연구
2018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산물 안전관리 효율화 방안
2018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각국의 관리제도 조사
2018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입수산물 유사어종(이매패류) 과학적 판별법 개발
2018	식품안전정보원	농수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2017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농축수산물 생산자 위생관리 교육훈련 효율화 연구
2017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산물 생산해역 오염원 등 안전관리 개선방안
2017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산물 유래 인수공통 위해요소 안전관리 방안
2017	에스디엔지니어링	해양수산분야 재난관리 효율화를 위한 기획연구
2017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입수산물 유사어종(갑각류) 과학적 판별법 개발
2017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입수산물(갑각류)의 관능검사 기준 개선 및 검사 적용 연구
2016	에스디엔지니어링	해양수산분야 자연재난 피해 통계자료 구축방안 연구
2016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위한 조직 역량제고 방안
201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산업기술센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16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입수산물(연체류)의 과학적 관능검사 기준개발 및 검사적용에 관한 연구
2016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입수산물 유사어종(복어류) 과학적 판별법 개발 연구
2015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얼음막 처리한 냉동수산물의 냉동전후 중량차이 연구
2015	푸드유텍	수입수산물 선진관리체계 기반구축 방안 연구
2015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입수산물 유사어종 과학적 판별법 개발 연구
2015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환경친화적 수산화지방산 생산 자생 미생물자원 발굴-3차년도

자료: 참고문헌에 출처를 표기함.

- 전국시도연구원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미래해양정책을 구상하며, 해양치유산업, 해양플랜트, 바이오 등 미래유망산업과 수산기술의 선진화 연구를 수행함.
- 해양수산분야의 미래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기 보다는 지역미래전략 구상에 해양수산분야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음.
- 헬스케어, 항노화 등 해양치유산업이 중요산업으로 인식됨에 따라 해양치유산업 중 심지로 발전하기 위한 지역거점화 전략을 수립함.
- 수산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수산자원 안정화, 양식산업 고도화로 어민소득증대, 국민 먹거리 확보 등을 위한 기초연구가 수행됨.

〈표 2-12〉 전국시도연구원 수산기술 R&D, 미래정책 관련 연구동향

구분	발행년도	저자	연구제목
대구경북연구원	2017	권혁준	경북 수산자원조성 첨단기술 적용을 위한 기초 연구
	2016	김용현	경북의 미래와 지역발전전략
부산연구원	2020	양진우	동북아해양수도 비전 및 전략
울산연구원	2015	황진호	국가 미래성장동력 육성계획에 따른 울산 지역산업 발전 방향
광주전남연구원	2016	김동주 외	전남 해양수산 융복합 벨트 정책과제 구체화
강원연구원	2018	김충재, 박재형	강원도 동해안의 해양헬스케어 추진 방향
충북연구원	2020	충북연구원	넥스트 노멀 시대, 충북의 대응전략
충남연구원	2020	윤종주 외	해양오염물질 발생원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수립 연구용역(2차년도)
	2020	신우석 외	충남 온실가스 감축역량 강화를 위한 해양연안 부문 적용확대 방안
	2015	정종관	격렬비열도와 인근유무인도서의 자연생태환경을 연계활용한 해양자원화 방안
경남연구원	2017	채동렬, 함미경	미래 식량안보 대응을 위한 수산업의 역할과 경남의 대응전략
	2016	채동렬, 이우신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경남 양식산업 선진화 방향
	2016	채동렬, 감지혜	해양항노화-웰니스 융·복합산업 육성방안
	2016	김진근 외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해양플랜트 기술인력 확보 방안
	2015	김진근	해양플랜트기자재 동반 R&D사업 제안

자료: 참고문헌에 출처를 표기함.

3. 경쟁이론과 조직경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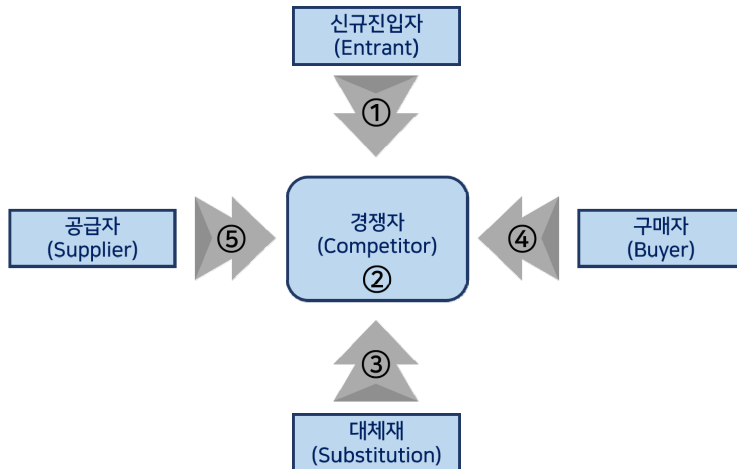
가. 경쟁이론

- Michael E. Porter(1985)의 경쟁우위 연구에서 경쟁요인을 도출할 수 있으며, 기업이 보유한 자원, 역량 등을 고유한 성공 요인으로 인식함.
 - 경쟁은 “혁신”, “단합적인 기업문화”, “선순환 구조” 등 기업성공에 기여하는 경영활동의 적절성을 결정함.
 - 경쟁전략은 경쟁이 발생하는 산업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기 위하여 수익성과 지속가능성 등 경쟁우위요소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음.
 - 최적의 경쟁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장기 수익성이 있는 산업”과 “산업내 상대적 경쟁 위치”를 결정해야 함.

- 경쟁전략을 수립할 때 기업과 산업 환경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산업내 구조는 업계구조 주체 분석법을 제시
 - 업계구조 구성주체는 경쟁자, 공급자, 신규 진입자, 구매자, 대체재 등 5가지이며, 경쟁의 강도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으로 판단
 - 경쟁이 심하지 않고 산업의 매력도가 높은 시장을 선택하여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방식으로 5가지 경쟁 요인을 기반으로 산업구조분석법(Five Forces Model) 개발

- 산업구조분석으로 경영자원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 신규 시장진출을 판단할 수 있으며, 자사제품 방어력을 높이고, 효과적인 신규시장 진입전략 수립
 - 신규 진입자 위협: 진입 장벽이 낮을 경우 신규 진입이 용이하여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여 수익을 압박할 가능성 내포
 - 산업내 기존 경쟁자 경쟁: 기존 동종업계 간 경쟁의 강도가 높을 경우 가격, 생산, 홍보 등 다양한 부문에서 경쟁이 이루어져 수익을 압박할 수 있음.
 - 대체재의 위협: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있을 경우 자기 제품에 대한 가격 압박을 받을 수 있음.
 - 구매자의 교섭력: 공급 과잉, 상품의 매력도 저하 등으로 구매자가 교섭력에서 우위를 선점할 경우 고객이 가격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음.

- 공급자의 교섭력: 공급자의 수요 과잉, 매력도 높은 상품의 독점권리 등으로 공급자가 교섭력에서 우위에 있을 경우 공급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



자료: Michael E. Porter (1985). 「Competitive Advantage」. The Free Press.

〈그림 2-6〉 마이클 포터의 5가지 경쟁 요인

나. 조직경쟁력

- 이 연구는 조직개편 성과 극대화를 통한 지역 해양수산경쟁력 제고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로 조직경쟁력의 개념과 제고방안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함.
- 공공부문의 조직경쟁력 개념, 결정요인 등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으며, 학자 간 다양한 의견이 제기(김경대 외, 2020)
 - 조직경쟁력은 “한정된 자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다른 조직에 대해 비교 우위에 있는 조직 고유의 역량”을 의미(조문석, 2013)
 - 다른 조직이 모방하기 힘든 고유한 속성이자 차별화된 역량으로 경쟁우위의 개념을 도입하기도 함(홍순욱 외, 2009; 조문석, 2013).
- 조직경쟁력은 조직자원을 활용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역량을 의미하며, 조직자원은 인적자원과 업무처리절차 등이 있음(조문석, 2013).
 - 자원준거이론에 따르면 조직구성원이 경쟁우위의 원천이며, 조직경쟁력은 인적자원의 경쟁력과 고객 경쟁력으로 인식한 견해가 있음(김경대 외, 2020).
 - 다수 연구에서 조직경쟁력 구성요소로 인적자원의 태도, 역량, 고객대응능력 등을 제시하고 있음(김경대 외, 2020; 김태우 외, 2020; 김현재 외, 2020; 이해중 외, 2017; 조문석, 2013).
- 조직경쟁력과 유사한 개념으로 조직효과성이 있는데 공공조직 혁신의 성공여부 평가요소로 조직의 목표 달성을 의미함.
 - 조직효과성은 조직목표 달성정도, 외부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정도, 생산성 향상 등으로 정의하며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성과 등으로 측정함(김대건 외, 2015).
 - 합리적 체제, 자연적 체제, 개방적 체제 등 조직 분류방식에 따라 조직효과성에 대한 정의가 달라질 수 있음(박창순 외, 2020).

- 조직구조와 업무처리과정의 전문성은 오랜 기간에 걸친 학습과 경험 축적을 통하여 형성되는 고유의 경쟁력 원천이 될 수 있음(조문석, 2013).
 - 뛰어난 성과를 달성하는 조직능력을 조직역량으로 정의, 조직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정보화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김경대 외, 2020).
 - 정보화역량이 발휘되는 조직경쟁력 발생구간은 업무추진시점부터 고객행정서비스 제공까지로 해당 시간의 단축, 비용절감, 업무추진동기 민감성 제고 등 검토 필요

- 조직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구성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업무처리절차의 체계화가 필요(최용환, 2020)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전문성은 조직규모에 따라 결정되는데 규모가 큰 지자체일수록 좁고 깊은 수준의 전문성을 보임.
 - 조직 구성원의 전문성은 전문지식과 기술, 직무수행 역량 강화, 전문분야의 경험축적, 책임성과 윤리의식 등으로 측정
 - 조직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경력관제도, 개방형직위제, 인사교류 등 다양한 공무원 인사제도를 활용하거나(최용환, 2020), 팀 학습문화 조성 및 교육·훈련 등을 추진할 수 있음(이해중 외, 2020).

- 조직경쟁력 구성요소로 직무만족, 고객만족, 조직몰입 등이 있으며, 세 가지 요소를 향상시켜 조직경쟁력을 제고함.
 - 직무만족은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경험으로부터 느끼는 심리적 욕구 충족 정도를 의미하며, 업무 관심도, 업무 적합도, 성취도, 자율성 등으로 측정(김경대 외, 2020)
 - 고객만족은 주민의 서비스 욕구를 확인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행동과 태도로 정의하며, 고객요구 충족성, 대응성, 반영도 등으로 측정(김경대 외, 2020)
 - 조직몰입은 구성원이 조직에 대하여 느끼는 심리적 특성으로 조직 소속감, 일체감, 애착심 등으로 측정(김경대 외, 2020; 김태우 외, 2020)

- 조직경쟁력을 구성하는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구성원의 전문성, 자기 효능감 제고 등이 필요(김현재 외, 2020; 최용환, 2020)
 - 조직의 팀 학습행동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여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이는 조직몰입과 조직경쟁력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이해종 외, 2017).
 -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은 구성원 개인의 자기효능감을 높여서 궁극적으로 직무만족도 향상(김현재 외, 2020)
 -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전문지식 습득, 경험 축적 등이 필요하며, 공무원 조직특성을 고려할 때 법·제도에서 보장하는 인사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최용환, 2020).
 - 직무적합성과 경력정체성 제고는 조직몰입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김태우 외, 2020).
 - 직무적합성은 개인의 능력과 직무 요구간 부합을 의미하며, 경력정체성은 특별한 직업 환경에서 역할·조직정체성 등 개인에 따라 구체화되는 개념을 의미(김태우 외, 2020)

4. 선행연구 시사점

가. 전라북도 해양수산 정책연구

- **(중장기 계획 수립)** 전라북도 해양수산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전라북도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중장기 방향을 설정
 - 지역 해양수산자원의 개발과 보전, 범위 확대 등 해양수산 전 분야에 걸쳐 육성 및 활성화 전략을 수립
 - 바다를 인접한 4개 시·군(군산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의 특성화 사업으로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된 64개 사업 중 4개 사업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은 정책 추진의 실행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판단
- **(선택과 집중)** 한정된 조직구조를 고려하여 “수산물식품산업”, “해양레저·관광산업”, “해운항만물류산업”, “미래해양산업” 등 선택과 집중 전략을 수립함.
 - 2017년 전라북도 해양산업육성계획에 포함된 전략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한정된 조직구조를 고려한 효과적인 대응전략 구상
 - 집중분야에 대한 부족한 인프라 보충, 현 상황에서 단기적 추진이 가능한 활성화 사업, 미래지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 등을 제안
- **(균형적 시각의 대응전략 지원 필요)** 전라북도 해양수산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는 2017년부터 다수 수행됨에 따라서 긴급성, 중요성이 높은 분야 중심의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점차 연구범위를 확장하고 있음.
 -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해양수산에서 가장 중요한 수산업 중심의 기초 연구 수행 후 항만물류 등으로 연구범위를 확장하고 있음.
 - 상대적으로 해양레저·관광산업과 미래해양산업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며, 향후 관련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여 균형적 시각의 대응전략 지원 필요
 - 해양수산업과 스마트기술의 접목으로 스마트양식, 스마트항만물류 등 첨단산업화에 대응하고, 미개척 해양수산자원인 해양바이오산업 특화전략 수립을 검토

- **(실행력 제고 필요)** 전라북도 해양수산 분야에서 제안된 다양한 정책사업의 실행력 제고가 중요
 - 정책연구결과와 다양한 해양수산 정책사업이 제안되었지만 인력, 예산 등 가용 자원의 한계로 실제 실행까지 연결된 사업은 많지 않음.
 - 대부분 정책사업의 예산구조가 국가정책사업예산을 확보한다는 전제로 수립된 것이 원인이라 판단
 - 한정된 조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존 추진사업에 대한 후속관리보다는 새로운 정책사업 발굴 및 추진에 비중을 두고 있음.

나. 해양수산분야 연구동향

- **(지역보유자원 특화전략)** 수산정책, 해양항만정책, 미래해양정책 등으로 구분하여 정책연구동향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지역보유자원 특화전략에 집중
 - 지역이 보유한 해양수산자원의 차별적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수산세력, 거점 항만 등 산업저변 경쟁우위를 지속하려는 시도가 많음.
 - 상대적으로 지역보유자원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추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선점하기 위한 시도를 추진
- **(국가정책사업예산 확보경쟁)** 대부분 지역에서 수행한 해양수산 분야 정책사업의 예산은 국가정책사업예산을 확보한다는 전제로 수립
 - 지역별 해양수산 특성화 전략이 수립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 사업추진예산은 상위단계의 국가정책사업예산 확보로 결정되므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
 - 지역에 할당된 예산 규모는 큰 폭으로 변화되지 않을 것이며, 다양한 사업 추진보다는 지역 여건에 맞는 차별적 요소를 강화시켜나가는 전략 필요
 - 다른 관점에서 국가정책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지역 특화산업 집적지를 조성하여 민간기업, 관계자의 투자유치 등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미래해양신산업 연구개발)** 해양수산분야에서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국책연구기관 중심으로 미래해양신산업 관련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해양수산분야의 미래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양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연구개발이 필요
- 현안이슈해결이 시급한 지자체보다는 국책연구기관에서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해당 결과에 따라 지자체에 적합한 미래해양신산업에 대한 연구개발이 예상됨.
- 해양수산업의 스마트기술 접목, 미개척 해양수산 자원을 활용하는 바이오산업 등 연구개발 성과에 따라 지역 맞춤형 연구수요가 예상
- 수산기술연구개발은 지역수산기술연구소에서 추진하며 수산자원 안정화, 양식기술선진화 등 수산업 생산역량 증대로 수산인 소득증대, 국민 먹거리 확보 등에 기여

다. 조직경쟁력

- **(타 지자체와 국가예산 확보경쟁)** 마이클포터의 경쟁요인을 정책분야에 적용하면 정책경쟁력은 타 지자체와 국가정책사업 예산확보 경쟁에 비교할 수 있음.
- 경쟁이론은 산업 내 기업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신규 진입자, 경쟁자, 대체재, 구매자, 공급자 등 5가지 경쟁요인을 고려함.
- 정책사업 추진에서 경쟁은 지자체간 국가예산 확보를 통한 핵심사업 유치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음.
- 지자체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하여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요소는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며, 글로벌 트렌드, 국가정책, 타 지자체의 여건, 우리 지자체의 여건, 민간기업, 지역민(도, 시·군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정책경쟁력 요소와 범위)** 해양수산 분야 정책경쟁력의 요소와 범위를 설정하고 전라북도 해양수산 정책경쟁력 제고 전략 수립 필요
- 해양수산 분야의 지자체 정책경쟁력은 국가정책사업의 예산확보로 평가하고 있으며, 사업비 확보 이후의 실질적 추진과 지속성 유지에 한계로 작용
- 국가정책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실제 사업 추진여부가 중요한 성과로 인식되었던 현행 방식과 달리 사업비 확보 이후 실질적 추진과 지속성, 수혜자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구성원 역량강화)** 글로벌 변화 트렌드 인식역량, 지역 해양수산자원의 차별성을 높이는 기획역량, 관련 기획을 추진해갈 수 있는 지속역량 등이 필요
 -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경쟁력은 글로벌 환경변화,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변화를 인식하는 역량을 기초로 함.
 - 지자체는 지역 해양수산자원을 활용하여 국가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특성화 사업을 구상하고 보전하는 역할을 담당
 - 정책성공사례로 소개되는 사업은 대부분 사업추진 이후 관리단계에서 성공적 역량을 지속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지역주민, 정책담당자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

- **(새만금해양수산물 조직개편 방향성)** 조직경쟁력 개념에 따르면, 전라북도 새만금해양수산물 개편성과와 방향은 긍정적으로 판단됨.
 - 조직경쟁력의 비교대상을 개편 전 농축수산물식품국 해양수산정책과로 하면 인적자원 경쟁력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조직구조와 업무처리절차의 전문성·체계성이 높아짐.
 - 인적자원은 조직개편 전·후 변화가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조직개편 방향성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채용될 것으로 예상됨.

- **(조직개편 효과 극대화)** 새만금해양수산물 조직개편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인적자원의 확보와 전문화, 조직체계와 과정 전문화를 위한 업무 세분화 필요
 - 조직경쟁력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내부 인적자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 인력의 전문성 강화, 전문역량을 갖춘 인력의 총원 지속
 - 조직구조와 과정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비교우위에 있는 영역, 글로벌 트렌드와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영역을 좁고 깊은 수준으로 세분화 추진

- **(단기적 대응전략 모색)** 전라북도 해양수산정책 조직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장기적 대응방향에 적합한 단기적 대응전략 모색 필요
 - 조직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조직구성원의 전문성 강화, 정책고객수요 대응능력, 조직구조와 업무처리절차 체계화 등이 요구됨.
 - 인적자원 전문성 강화, 업무처리절차 체계화, 고객수요대응 강화 등 장기적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조직개편의 단기적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전략 모색

3

장

전라북도 해양수산정책업무 현황과 과제

Jeonbuk Institute

-
1. 해양수산 업무의 특성
 2. 전라북도 해양수산 조직개편
 3. 전라북도 해양수산정책업무 성과제고 과제

제 3 장 전라북도 해양수산정책업무 현황과 과제

1. 해양수산 업무의 특성

가. 국가주도성

1) 정부의 해양수산업 육성근거와 목적

- 정부의 해양수산업 육성정책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법률 제16570호)」에 근거하고 있으며, 10년 주기로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보전 및 개발·이용과 해양수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과 방향을 설정(제1조)
 - 해양수산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추도록 해양수산발전에 관한 기본법 성격을 규정(제4조)
 - 제6조에서 규정한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군사와 에너지 분야를 제외한 해양수산에 관한 계획 중 우선 적용함(제6조의 2).
- 해양수산업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보전·개발·이용에 관련된 산업을 의미함(제3조 제3항).
 - 수산업, 해운항만물류산업, 해양개발, 해양에너지산업,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보전·복원, 해양관광·레저산업 등 해양수산업의 범위가 넓음.
 - 해양수산업의 지식화, 정보화,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정부가 담당함.
- 정부가 해양수산업을 육성하는 목적은 국가경제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있음(제1조).
 - 해양은 자원의 보고, 생활의 터전, 물류의 통로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침(제2조).
 -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양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여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관리·보전하는 역할을 국가가 담당함.

- 해양수산업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책무는 같은 법 제5조에 규정하고 있음.
- 해양생태계 보전의무,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보전·개발·이용의 조화와 균형, 해양수산업발전에 필요한 기반 및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야 함.

2)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특성

- 해양은 대한민국 내수,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 등 주권 또는 관할권이 있는 해역과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 국제법규 등 대한민국정부와 국민이 개발·이용·보전에 참여할 수 있는 해역을 의미(제3조 제1항)
 - 해양은 자원의 보고, 생활의 터전, 물류의 통로로 대한민국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제2조)
 - 대한민국정부가 헌법에 따라 주권과 관할권을 행사하는 해역의 자원을 활용하므로 국제적 관계, 대한민국 헌법 등에 부합하도록 이용 범위, 방법 등을 설정
- 해양수산자원은 개발·이용이 가능한 해양생물자원, 해양광물자원, 해양에너지, 해양관광자원, 해양공간자원 등을 총칭함(제3조 제2항).
 - 해양수산자원을 관리·보전·개발·이용하는 해양수산업은 대한민국 헌법, 국제관계 등에 부합하도록 활용해야 함.
- 해양자원의 국제성, 미래지속성 등은 한 나라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 없으므로 대한민국 해역에서 국제적 대표성을 지닌 대한민국 정부가 통제
 - 해양기름유출사고, 해양긴급구조 등 해양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은 단일 국가의 통제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제협약에 근거하여 적정한 활용범위, 공동의무 등 규정

- 해양수산자원 활용을 통한 혜택과 미래세대, 세계적 활용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보전·개발·이용이 이루어짐.
- 해양수산자원을 이용하여 경제발전과 국민복지 증진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제주체의 창의적인 활동과 합리적 경쟁 유도
- 미래세대가 해양수산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하며, 세계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적정 수준의 관리·보전이 선행되어야 함.
- 해양자원개발은 예산규모가 크며, 해양개발방향과 범위에 대한 세계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민간이 참여하더라도 정부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함.

3) 관련 법 규정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장 해양개발과 제4장 해양수산발전 기반 및 환경조성 관련 조문에서 대부분 정부가 수행하도록 규정
- 제3장 해양개발은 제1절 해양의 관리 및 보전, 제2절 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및 이용, 제3절 해양수산업의 육성으로 구성
 - 제12조 해양의 관리, 제13조 해양환경의 보전, 제14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제15조 해양안전관리 업무를 “정부”가 하도록 규정(제3장 제1절)
 - 제16조 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등, 제17조 해양과학조사 및 개술개발 등, 제18조 해양공간의 이용, 제19조 해양개발전진기지의 개척, 제20조 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조사·연구, 제21조 국제협력의 추진, 제21조의 2 국제개발협력의 추진, 제22조 남북간 해양수산 협력 업무를 “정부”, “해양수산부”가 하도록 규정(제3장 제2절)
 - 제23조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제24조 항만시설 등의 확충, 제28조 해양관광의 진흥, 제28조의 2 해양수산분야 신산업 개발의 지원 업무를 “정부”, “해양수산부”가 하도록 규정(제3장 제3절)

- 제3장 제3절 해양수산업의 육성에서 일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한 조문이 있음.
 - 제25조 수산업의 육성, 제26조 수산과학기술의 육성, 제27조 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등 3개 조문에서 해당 업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규정
 - 해당 조문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해양수산자원을 활용하여 수산업을 육성하고, 수산과학기술연구, 어촌 활성화 등을 추진

- 제4장 해양수산물발전 기반 및 환경조성 업무는 다음과 같음.
 - 제30조 연구기관의 설치·육성 등, 제31조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32조 해양개발을 위한 정보화 촉진, 제34조 해양문화의 창달 등, 제35조 재정 등의 지원, 제36조 통계의 작성·관리 업무를 “정부”, “해양수산부”가 하도록 규정

나. 지역 해양수산정책업무 특성

1)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정책업무

- 지방자치단체의 해양수산정책업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양수산발전기
본법」 제3장 제3절 해양수산업의 육성 일부 업무를 담당
 - 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수산물 생산·유통·가공 기반을 조성하고 수산물 수출 진흥
시책을 구상(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5조)
 - 수산과학기술을 육성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지도기관, 대학 및 단체 등에서 수산과
학기술 연구·개발·보급을 지원(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6조)
 - 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소득증대 등을 통하여 삶의 질 개선을 유도하고, 국토의 균
형발전과 보전을 위한 어촌개발 등을 추진(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7조)

- 수산업, 수산과학기술 육성, 어촌주민 복지증진 등 3가지 영역은 국가 및 지
자체 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현장중심의 정책사업을 지자체가 담당
 - 국가가 세계적인 트렌드, 국제협약, 정부계획 등에 맞추어 해양수산정책추진방향을
설정하면 지자체가 지역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하는 체계
 - 해양수산정책업무는 대부분 정부정책 방향에 일치하는 신규사업 제안, 정부공모사업
대응 등으로 구성

- 정부의 해양수산정책방향에 따른 지자체의 해양수산정책업무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협력하여 추진함.
 -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기초지자체가 현장에서 정책사업을 추진
하고, 광역지자체가 지원, 중앙정부와 연계하는 형태
 - 해양수산업의 민간 종사자는 현장업무 추진과정에서 경험하는 문제점을 지자체에 제
기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도 함.
 - 민간 종사자는 오랜 기간 한 분야에서 활동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회사 경영활동에 참
여하여 산업트렌드에 민감하므로 현안문제의 실질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음.

- 지역 해양수산자원의 관리·보전·개발·이용을 조화롭게 하며, 해양수산업 성과가 지역경제, 국가경제로 순환되도록 하는 목적이 있음.
- 국가가 설정한 해양수산정책방향(관련 법, 정부계획 등)에 맞추어 지역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보전·개발·이용의 균형과 조화를 유지
- 해양수산업 종사자의 의견수렴,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보전을 담당하며, 지역 해양수산자원의 최적 활용을 위한 수산기술연구, 기술보급 등을 통해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2) 지역 해양수산자원의 특성화 지원

- 지자체의 해양수산정책업무는 대부분 해양수산업 활성화 지원이며, 입지 및 자원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특성화를 유도함.
- 대부분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은 유사한 특성, 환경을 지니고 있지만, 지리적 특성에 따른 독특한 산업구조가 형성되는 경향이 있음.
- 유사한 해양자원 특성상 수산업, 해양레저·관광, 해운항만물류 등 산업형태가 비슷하지만 지자체별 특성화 방향에 따른 다양한 전략 구상
- 갯벌관리 및 특성화를 통한 해양생태체험관광, 이색 바다환경을 활용한 스노클링, 투명카누체험 등 바다레저체험 등 자연환경 특성을 특성화할 수 있음.
- 입지조건과 배후산업·산업기반시설 등을 결합한 지경학적 여건에 따른 해양수산업의 특성화 전략 수립이 가능함.
- 해양자원의 적절한 활용과 보전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는 해양수산업의 특성상 지역산업 규모가 중요하게 작용
- 현대 경영학에서 중요하게 인식되는 혁신적인 선도자(first movers)가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지역 해양수산업 및 정책업무 담당자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신산업, 정책사업을 구상해도 신속한 모방(fast followers)이 가능

- 세계적으로 허용되는 해양수산업 범위에서 지역의 해양수산업 종사자의 규모가 지역 해양수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사례가 많음.
 - 지역 종사자가 많으면 관련 기반시설, 지원정책 등이 뒷받침되어 해양수산업 육성에 좋은 환경이 조성됨.
 - 기반시설, 지원정책이 다양한 지역은 해양수산업에 종사할 산업인력의 유입, 정착 등 지속성 관점에서 유리함.

- 지역간 해양수산업 경쟁우위를 고려하여 상대적 우위지역은 국가경쟁력 제고 관점에서 육성하고, 열위지역은 신산업 중심의 다각화 전략 검토
 - 전통적으로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이 있는 지역은 지역 역량을 최대화하여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활용하여 국가 해양수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
 - 해양수산업이 상대적 열세에 있는 지역은 자연환경, 지경학적 특성, 산업특성 등 특성화 자원을 활용하여 신산업 중심의 전략적 다각화 추진

2. 전라북도 해양수산 조직개편

가. 정부의 해양수산정책방향

- 정부의 해양수산정책은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고, 기존 우리나라 해양수산업 경쟁우위 제고와 미래신산업 육성 기초를 유지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6조에 의거한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21-2030)'에 제시된 2030 미래비전을 통하여 정부정책 방향을 살필 수 있음.
 - 국내외 여건변화, 국제관계, 국민인식 등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양수산정책의 중장기 미래비전을 수립하므로 글로벌 트렌드와 우리나라 경쟁우위 요소 등이 반영
- 대한민국의 해양수산발전 2030 비전은 “전환의 시대, 생명의 바다 풍요로운 미래”로 설정(대한민국정부, 2020)
 - 핵심목표는 “안전하고 행복한 포용의 바다”, “디지털과 혁신이 이끄는 성장의 바다”, “세대와 세계를 아우르는 상생의 바다”로 설정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은 “해양수산 안전강화”, “머물고 싶은 어촌·연안 조성”,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 “해양수산업의 질적 도약”, “환경 친화적·합리적 해양 이용”, “국제협력 선도하는 해양강국” 등 6개로 수립함.
-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2030 해양수산 목표는 다음과 같음(대한민국정부, 2020).
 - 바이오, 관광, 친환경선박, 첨단장비, 에너지 등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을 2018년 3.3조원에서 2030년 11.3조원 규모로 확대
 - 수산업 생산량을 2019년 382만톤에서 2030년 412만톤으로 확대하고 어가평균소득도 2019년 4,842만원에서 2030년 7,000만원으로 확대
 - 항만물동량은 2019년 16.4억톤(M/T)에서 2030년 20억톤(M/T)로 증대시키고, 지배선대 규모는 2019년 8,500만톤(DWT)에서 2030년 11,250만톤(DWT)으로 확대
 - 해양쓰레기량은 2018년 기준 14.9만톤에서 2030년 7.4만톤으로 절감하여 정부의 친환경정책 일관성을 높임.

비전

전환의 시대, 생명의 바다 풍요로운 미래

목표 1

안전하고 행복한 포용의 바다

목표 2

디지털과 혁신이 이끄는 성장의 바다

목표 3

세대와 세계를 아우르는 상생의 바다

6대 추진전략

1. 해양수산의 안전 강화

- ① 안심하고 일하며 누리는 해양
- ② 믿고 먹는 신선한 수산물
- ③ 재난·재해 걱정 없는 안전한 해안

2. 머물고 싶은 어촌·연안 조성

- ① 함께 잘 사는 어촌
- ② 편리하고 매력 넘치는 섬
- ③ 지역과 어우러지는 연안·항만 조성

3.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

- ① 해운·항만산업의 스마트화
- ②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 ③ 해양수산업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4. 해양수산업의 질적 도약

- ① 해양수산 신산업시장 창출
- ② 기존산업의 혁신 성장 촉진
- ③ 선순환 구조의 산업생태계 조성

5. 환경 친화적·합리적 해양 이용

- ① 탈탄소·친환경의 쾌적한 항만 실현
- ② 해양공간 활용·관리의 최적화
- ③ 해양생태계의 다양성 보존

6.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해양강국

- ① “K-해양수산”으로 국제사회 상생 견인
- ② 굳건한 해양안보로 해양영토 수호
- ③ 해양협력으로 동북아 번영에 기여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 제3차 해양수산업발전기본계획(2021-2030), 85.

〈그림 3-1〉 해양수산업발전 2030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나. 전라북도 해양수산 조직개편

1) 새만금해양수산국 조직개편

- 전라북도 해양수산정책은 과거 농축수산물식품국 해양수산정책과에서 담당하였으나, 현재 새만금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해양항만과가 담당
 - 해양수산정책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보전·개발·이용에 조화를 추구하므로 관리·보전과 개발·이용의 이질적 특성이 있음.
 - 해양수산정책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2020년 7월 업무분야, 특성에 따른 조직개편이 이루어짐.
 - 해양수산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향성을 유지하여 2021년 7월 조직개편 시 수산정책과의 양식가공유통팀이 수산물가공유통팀과 스마트양식팀으로 세분화될 예정이며, 전라북도수산기술연구소 수산물안전센터에 병성감정팀이 신설됨.
- 현재 새만금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에 3개팀, 해양항만과 3개팀, 수산기술연구소로 구성됨.
 - 수산정책과는 수산정책팀, 양식가공유통팀, 수산자원팀으로 구성되고 해양항만과는 해양환경정책팀, 항만해운팀, 해양레저관광팀으로 구성
 - 수산기술연구소는 수산연구과(총무팀, 생산연구팀, 기술보급팀), 민물고기연구센터(관리팀, 내수면육성팀, 시험개발팀), 수산물안전센터(수산물안전팀), 어업기술센터(기술관리팀)로 구성
- 수산정책과는 수산정책팀, 양식가공유통팀, 수산자원팀 등 3개 팀 24명으로 구성(2021. 6. 18. 기준)
 - 수산진흥, 어촌지도, 어촌뉴딜사업 추진,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조성, 내수면어업 진흥사업 추진 등을 수행
 - 2021년 7월 조직개편으로 양식가공유통팀은 수산물가공유통팀과 스마트양식팀으로 세분화될 예정임.

○ 해양항만과는 해양환경정책팀, 항만해운팀, 해양레저관광팀 등 3개 팀 17명으로 구성(2021. 6. 18. 기준)

- 해양공간 및 연안 관리, 어선정화선 운영, 신항만·항로 건설,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등을 수행

〈표 3-1〉 전라북도 해양수산조직업무체계

부서			담당업무
새만금 해양 수산물	수산 정책과	수산정책팀(5)	· 수산진흥 및 감사 업무 추진, 어촌체험마을 조성 및 지도, 수산단체 지도 및 어촌계 육성
		양식가공유통팀(5)	· 수산 동식물 이식업무 추진, 스마트양식 테스트 베드 조성, 수산물공동브랜드 육성, 천해양식 개발,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수산자원팀(6)	· 어촌뉴딜 300사업, 연안 바다목장, 바다 숲 조성, 해중림 조성,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어업지도선(8)	· 전북207호 운영, 어업지도선 매각업무, 불법어업 지도단속
	해양 항만과	해양환경정책팀(5)	· 해양공간 및 연안 통합관리, 해양환경오염방지, 연안습지 및 해양보호관리 등 해양생태계 보전
		어장정화선(6)	· 어장정화선 기관, 항해·갑판 관련 업무, 어장정화
		항만해운팀(3)	· 새만금 신항만 건설, 신항만 부두시설 확대, 항만 개항 및 신규항로 개설
		해양레저관광팀(3)	· 해양관광산업 자원개발 및 인프라구축 수상레저관광단지 조성, 섬 관광 활성화 추진,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직속 기관	수산 연구과 (18)	총무팀	· 연구소 종합기획, 시설 관리
		생산연구팀	· 종자생산 및 방류, 자생김 실내배양관리 및 우량품종 보존, 시험연구개발 분야 계획 수립
		기술보급팀	· 종자생산 및 방류, 수산인력육성 및 관리,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확산교육 및 지도 평가
	민물고기 연구센터 (12)	관리팀	·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시설 관리
		내수면육성팀	· 내수면 산업화 지원, 내수면 양식장 실태조사
		시험개발팀	· 내수면 시험 및 연구개발 사업 기획, 방류사업 전반 관리(방류수면 선정 등), 내수면 양식기술 교육
	수산물 안전센터 (9)	수산물안전팀	· 안전성조사, 양식장 관리 및 시료수거, 안전성 조사결과 처리, 안전한 수산식품지원 사업
	어업기술 센터(5)	기술관리팀	· 기술보급계획 수립, 수산분야 교육운영, 어촌지도자 교육, 어촌동향, 해조류양식 기술보급

자료: 전라북도청 홈페이지 (접속일: 2021. 6. 18.)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접속일 기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수를 의미함(2021년 7월 조직개편 미반영).

- 별도의 사업소로 수산기술연구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수산연구과, 민물고기연구센터, 수산물안전센터, 어업기술센터로 구성됨.
- 수산연구과와 어업기술센터는 주로 수산종자생산 및 방류사업, 종자시험·연구, 수산기술보급 및 인력육성 자원을 담당
- 민물고기연구센터는 내수면어종 시험·연구, 내수면 산업화 지원, 수산물안전센터는 안전성조사, 양식장 관리 및 시료수거 등의 수산물 품질에 대한 연구를 수행

새만금해양수산국

전라북도 1국 4과 15팀 74명

수산정책과	해양항만과	새만금개발과	새만금수질개선과
수산정책팀(5) 양식가공유통팀(5) 수산자원팀(6) 어업지도선(8)	해양환경정책팀(5) 어선정화선(6) 항만해운팀(3) 해양레저관광팀(4)	새만금기획팀(9) 새만금개발지원팀(4) 새만금관광홍보팀(4) 새만금투자유치팀(5)	수질개선기획팀(5) 하천유지관리팀(3) 오염원대책팀(3)

자료: 전라북도청 홈페이지 (접속일: 2021. 6. 18.)

〈그림 3-2〉 전라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 조직도

2) 해양수산정책업무 담당자 표적집단면접조사

- 전라북도 해양수산정책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개편이 실제 업무추진에 미친 영향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하여 표적집단면접조사를 실시
 - 표적집단면접조사는 2회 추진하였으며, 팀장그룹(6명)과 경력 5년 내외의 주무관 그룹(7명)으로 나누어 추진하였고, 별도로 전북수산물기술연구소 관계자 면접조사 실시
 - 조직개편 후 약 10개월가량 업무추진 경험에 근거한 조직개편 성과와 개선방향, 만족도 등을 조사

가) 새만금해양수산국 조직개편 효과

- **(해양수산분야 위상제고)** 조직개편 전에는 농축수산물식품국 소속으로 농업 분야에 비해 해양수산분야의 위상이 낮았으나, 조직개편 후 상대적 위상제고 인식
 - 해양수산분야의 위상이 올라가고 업무가 명확해지고, 의견 반영도가 높아져서 구성원 자긍심 고취효과가 있음.
 - 해양수산분야의 중요 정책이 지휘부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져 관련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음.
- **(해양수산정책업무 전문성 제고)**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의 전문성은 높아지고, 전문분야의 업무강도는 전보다 완화되었다는 의견이 있음.
 - 새만금해양수산국의 주요 업무가 해양수산정책사업이므로 업무체계상 전문성이 요구되며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유도
 - 조직개편 전에는 농축수산물식품 분야간 업무공유가 일부 있었으나, 조직개편 후 업무공유가 잘 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업무분장·인력보강 한계)** 1개과 6개팀을 2개과 6개팀으로 나눈 조직개편은 세부적인 업무분장과 인력보강이 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음.
 - 수산정책과와 해양정책과로 구분이 되었고, 업무 특성에 따른 세부적인 분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전문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조직개편이 되었으므로, 전문성 있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여 업무세분화 및 인력충원이 필요

- 인력은 동일한데 조직개편에 따른 추가업무를 기존 인력이 분담해야 하는 구조로 업무량이 많아졌다고 인식
- 조직개편이 되어 세분화된 업무가 증가하였지만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 단기적으로 업무 특성상 수산정책과와 해양항만과가 협력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는 상황 전달과 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나)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만족도

○ **(업무만족도 증가)** 조직개편에 따른 해양수산정책업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업무효율이 증가하고, 담당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함.

- 해양수산정책업무가 새만금해양수산국의 주요업무로 인식됨에 따라 기존업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역사회가 주목함에 따라 업무성과에 대하여 보람을 느낌.
-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이질적 업무에 대한 숙지 필요성이 완화되어 담당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

○ **(업무량 증가 우려)** 현재 조직개편이 기존인력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서 신규업무와 전문분야 업무 증대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조직개편으로 발생한 부서관리, 행정 등 신규업무를 기존 인력이 분담하는 형태로 부서 업무량이 증가함.
- 해양수산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업무가 전문화·세분화되어 기존 수행업무에 비해 업무량 증가가 예상됨.

다) 조직개편 개선방향

○ **(장기개선: 팀 세분화, 인력보강)** FGI에 참여한 응답자 모두가 팀 세분화와 인력보강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전체 조직구조의 특성상 해양수산분야에 국한된 최적의 조직개편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성에 공감
- 해양수산정책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군집되어 있는 업무를 세분화하는 과정이 요구됨.
- 다수의 전문분야가 군집되어 있는 영역을 단계적으로 세분화하여 전문성 있는 정책구상과 담당자 지정을 위한 인력 보강을 추진해야 함.

○ **(정부 해양수산정책업무 일관성 대응)** 관련 법·제도상 해양수산부의 주요업무와 조직체계에 일관성 있는 대응이 필요

- 수산업, 수산기술, 어촌복지 및 소득증대 등 영역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하고, 해당 분야의 정부주력업무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형태 구축 필요
- 국가와 지자체가 담당하는 수산업, 어촌복지 등 영역에서 지역자원을 접목한 해양수산 산 산업 전문성 강화 필요

○ **(단기개선: 업무전문성 제고방안)** 조직개편의 완성에 오랜 기간 소요되므로 단기적으로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체계 구축

- 단기적으로 신설 팀 구성, 적정 인력충원 등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시스템을 개선하되 단기적으로 업무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
- 전문가 집단과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하여 지자체가 전담하기 힘든 영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민간 해양수산업 종사자의 자발적·적극적 참여 유도

○ **(업무분장 체계화 지속)** 기존인력을 대상으로 개편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문성·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업무분장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기존 조직형태(6개팀) 유지, 한정된 인력으로 업무 분장이 되었으므로 향후 조직개편 지속에 따른 효율적 업무분장 추진

- 글로벌 트렌드 변화, 신설 법·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 및 업무분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라) 수산기술연구분야 개선방향

- **(조직개편 방향성 유지·전문성 제고)** 새만금해양수산국 조직개편 방향에 맞추어 지역해양수산기술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전북수산기술연구소의 대응 필요
 - 해양수산 정책추진의 전문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산기술연구개발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며, 지역 해양수산 자원 특성화 방향에 부합해야 함.
 - 전라북도 해양수산 특성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수산자원, 수산기술연구 등 고도화 필요
- **(특성화 자원 선택과 집중에 따른 전문성 제고)** 전통적으로 강점이 있는 내수면, 해수면 어류, 패류, 해조류 등을 중심으로 부가가치 제고 지원 필요
 - 전통적으로 강점이 있는 패류양식을 뒷받침하며, 해조류의 경우 전라북도 바다환경에 적합한 고유품종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양식산업 육성 추세에 맞추어 전라북도의 전략품종을 선정하고 해당 품종을 중심으로 스마트양식 실증, 창업 희망자(귀어귀촌) 등 지원체계 마련
- **(어촌지도업무 통합)** 수산기술연구소에서 지역 어촌지도업무를 지역별로 분담하는데 전문성 제고를 위해 통합 필요성 검토
 - 현재 수산기술연구소는 수산연구과(고창군), 민물고기연구센터(완주군), 수산물안전센터(군산시), 어업기술센터(부안군) 등에서 지역별 어촌지도업무를 수행
 - 공간적 이격에 따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거점 어촌관리를 분담하였지만, 통합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다. 전라북도 해양수산 조직개편 성과와 과제

1) 전라북도 해양수산조직개편 성과

- **(전문성 강화 시스템 개선)** 전라북도 해양수산조직개편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많음.
 - 수산정책과, 해양항만과로 조직이 확대되면서 해양수산분야 이슈노출 빈도 증대, 정책관심도 제고 등 양적성장체계가 조성되고 있음.
 - 현재 조직개편은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므로 현재의 방향성을 지속하면서 전라북도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성 강화 전략 모색

- **(업무만족도 향상)** 담당업무의 전문성과 직무몰입도가 높아짐에 따라 전반적인 업무만족도가 향상되었다고 판단됨.
 - 부서별 업무담당 범위가 세분화되면서 개별 구성원의 담당분야가 명확해졌고, 직무몰입도가 향상됨.
 - 일부 수산정책과와 해양항만과가 협력해야 하거나 명확한 업무분장에 어려움이 있는 영역은 직무몰입도 향상을 위한 세밀한 업무분장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 직무몰입도 향상은 업무 만족도 제고 효과가 있으며, 개별 구성원의 부서와 담당업무에 대한 자긍심 고취로 이어짐.

2) 전라북도 해양수산조직개편 과제

- **(팀 세분화와 이질적 업무구분)** 조직개편의 목적은 전라북도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양수산분야 전문성 강화이므로 방향성을 유지해야 함.
 -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군집형태의 팀 단위 조직을 전문 분야에 맞추어 세분화하는 작업이 추진되어야 함.
 - 해양수산자원의 관리·보전과 개발·이용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질적 특성을 가진 업무를 구분하여 실효성을 높여야 함.

- **(전문인력 확보)** 현재 인력충원이 없는 조직개편이 한계점으로 인식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인력확보 노력이 필요
 - 팀 세분화와 전문인력 확보가 동시에 충족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여건상 한계가 있다면 전략적 중요도를 판단하여 중요도와 긴급도가 높은 분야의 인력 충원 검토
 - 조직규모가 확대될수록 업무는 좁고 깊어지면서 전문성을 갖추게 되는 과정에 따라 조직업무 세분화와 인력충원을 연계

- **(해양수산 신산업 대응력 강화)** 전라북도 해양수산의 기초역량강화와 함께 해양수산 신산업에 대한 대응력 강화가 필요
 -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인 수산업, 수산기술연구, 어촌복지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해양수산 분야의 기초역량강화 지원
 - 미래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트렌드와 지역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전라북도 해양수산 특성화 전략 구상

3. 전라북도 해양수산정책업무 성과제고 과제

가. 전라북도 해양수산정책업무 인식

1) 지방자치단체의 해양수산정책업무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5조~제27조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 수산기술연구개발, 어촌복지증진·소득증대’ 업무 담당
 - 지자체는 현장 중심의 현안문제해결과 지역 해양수산자원의 관리·보전·개발·이용을 적정하고 조화롭게 할 의무를 지님.
 - 해양수산업 중 수산업과 수산기술연구개발, 어촌복지증진,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업무범위를 설정함.
- 정부의 해양수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조성 중이거나 완료된 해양수산업 관련 인프라 활성화를 위한 간접적 업무를 담당함.
 - 세계적 합의에 의한 해양수산자원의 적정한 활용이 필요한 해양수산업의 특성상 정부정책 일관성을 유지한 협력체계 구축
 - 항만건설 및 유지·관리 업무와 같이 정부가 담당하는 영역과 연계하여 해당 인프라 운영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 국가산업 경쟁력 제고를 지원함.
- 전라북도 해양수산정책업무의 범위는 수산업, 수산기술연구개발, 어촌소득증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업무와 지역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양수산기반시설 운영활성화를 지원하는 간접적 업무로 구성됨.
 - 수산업, 수산기술연구개발, 어촌복지향상과 소득증대 관련 업무는 정책방향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정책사업 발굴·제안 필요
 - 정부가 담당하는 해양수산인프라 조성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해당 인프라가 국가 산업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다양한 제안을 추진

2) 정부의 해양수산업정책업무 동향

- **(수산업 경쟁력 강화)** 「수산물수출육성법」에 근거하여 수산물수출육성정책을 수립,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수산물수출육성기본계획 수립”, “수출주도형 수산물클러스터 조성”, “전문인력 양성”, “수산물 해외진출 지원” 등 수산물수출육성정책을 추진함.
- 지능형 수산양식기술개발, 수산물 수출지원, 수산물수출육성 등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지능형 양식기술개발을 위한 “아쿠아팜 4.0”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스마트양식클러스터, 내수면 스마트양식장을 조성함.
 - 내수면어종과 스마트양식기술, 양식수 확보 등을 지원하는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 조성을 지원하여 연구시설, 양식 및 종자생산시설 등을 지원함.
- 수산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코로나19 긴급경영안정자금, 물류센터 임대료 인하, 주요 수출 대상국 전자상거래 입점 등을 지원함.
 - 수산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가공산업 육성, 수산물수출 거점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수산물수출업체를 육성함.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최근 1인·노인가구 증가, 식습관 변화에 대응한 수산물 소비트렌드에 맞는 식품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항만·어항 사회간접자본 확충)** 정부는 항만과 어항 등 해양수산업 현장인프라를 건설·관리하여 해양수산업 기반시설을 확충함.
 - 한국판 뉴딜사업 취지에 적합한 스마트항만(자동화·지능화·친환경) 건설과 스마트물류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음.
 - 해운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적선사 지원,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 육성 등을 추진
 - 지역어촌의 거점인 어촌·어항의 낙후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어촌뉴딜 300사업,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참여

- 어촌뉴딜300 사업은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맞춤형 어촌 인프라 개선사업으로 낙후된 어촌을 재생하여 접근성, 정주여건 개선, 어촌복지증진, 소득증대에 기여

○ **(어촌지역 활력제고)** 정부는 어촌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한 인프라 개선과 어업외 소득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도록 지원

- 바다와 내수면 자원, 어촌마을, 생태자원 등을 활용한 해양레저·관광산업을 통하여 어업외 소득증대 효과를 기대함.
- 어촌관광, 해양레저, 생태관광 등은 권역별 자원 특성을 고려하며 전라북도는 바다 자원, 갯벌, 내수면 등 어업외 소득사업의 원천으로 활용할 수 있음.
-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치유산업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유도

○ **(해양환경관리강화)** 정부는 지속가능한 해양수산업을 위하여 오염예방, 탈탄소화 적극대응 등 해양환경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 해양수산자원보전을 위하여 수산업 기인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생분해성 어구 보급, 폐어구 수거체계 개선, 페스티로폼 압축기 등 재활용 활성화 유도 등 추진
- 해운물류산업 관련 선박기인 오염배출원 저감을 위한 배출규제해역 설정, 육상전원 공급설비, 친환경 하역장비 이용 확대, 저유황유 등 친환경 에너지 기준 강화
-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배출 등 국민의 해양오염 우려에 적극 대응하고, 세계적인 관점에서 해양환경관리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
- 정부는 제2회 P4G 정상회의를 개최하였고, 해양특별세션에서 글로벌 탈탄소화전환을 위한 해운업 대응, 해양쓰레기·미세플라스틱 저감 등 글로벌 의제 논의를 주도
 - P4G 정상회의(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의 목적은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달성이며, 2017년 출범한 국제협약체로 제1차 P4G 정상회의는 2018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되었으며, 제2차 회의가 2021. 5. 30.부터 31.까지 대한민국에서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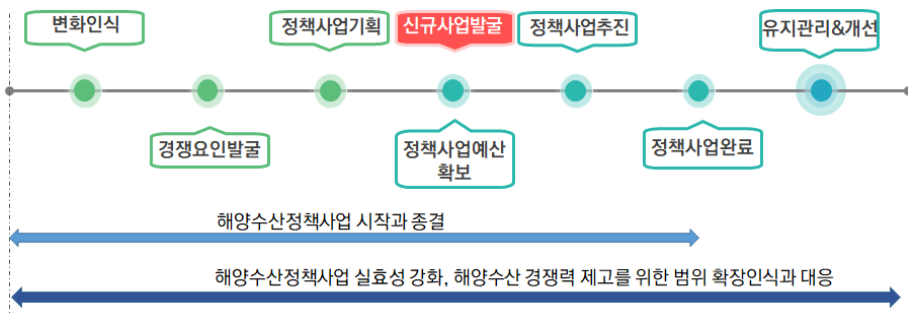
3) 해양수산정책업무 추진방식

- **(정부와 지자체 협력방식)** 해양수산자원의 적정한 이용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세계적 합의에 따라 정부가 설정한 범위에서 지자체와 민간이 협조하고 있으며 대부분 하향식(top-down)으로 추진
 - 정부 주도업무에 대해서 지자체는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지역 특화 해양자원과 지역산업시설, 융·복합 기능자원 특성 등을 결합하여 국가 해양수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영역의 사업을 제안

- 지자체가 주도하는 해양수산정책업무는 정책사업발굴, 예산확보, 사업추진 등 일련의 절차에 따라 수행되고 있음.
 - 변화인식, 변화에 맞는 경쟁요인 발굴, 정책사업 기획, 정책사업 예산확보, 정책사업 추진, 정책사업 완료, 유지관리 및 지속적인 개선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해양수산분야의 신규사업 발굴은 추후 공모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획득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해양수산정책사업의 진화·지속성 제고)** 정책사업 특성상 완전 종결보다 지속적인 유지, 관리, 개선을 통하여 정책사업의 진화, 지속성 유지전략이 적합함.
 - 정책성과는 “정책사업 기획”과 “예산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후속 관리의 중요성 인식이 약함.
 - 한정된 조직자원, 매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여건상 지역사회의 상대적 관심도가 낮은 후속단계보다 “(신규)정책사업 기획”과 “예산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내실있는 정책사업의 추진과 전라북도 해양수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업무 범위 인식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사업 발굴을 매년 반복하다보니, 선정된 정책사업의 추진과 신규사업 발굴을 병행하는 구조에 놓임.
 - 해양수산 분야의 지속성을 위하여 신규정책사업 발굴의 중요성이 높으며, 전임자의 업무보다 새로운 성과 달성을 유도할 수 있음.
 - 한정된 조직자원, 공무원의 순환근무체계를 고려할 때, 확정된 정책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지역 해양수산조직성과측정범위를 변화인식단계에서 지속적인 유지관리, 개선 단계까지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기존 조직구조를 유지하면서 조직성과측정범위를 확장하는데 한계가 있음.
 - 현 조직여건을 유지하면서 정책사업 추진관리체계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절실함.



〈그림 3-3〉 해양수산정책업무 추진과정과 대응범위

나. 전라북도 해양수산정책업무 특성화 방향 설정

1) 전라북도 해양수산 특성화 전략

- 수산업, 수산기술연구개발, 어촌소득증대·복지향상과 관련하여 전라북도는 기초역량강화와 특성화 전략 수립이 필요함.
 - 기초역량강화는 전통적인 수산업에 기반한 지역 수산업 발전, 어촌경제 활성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해양수산자원 맞춤형 수산기술연구개발을 의미함.
 - 특성화 전략은 지역 해양수산자원 특성, 지경학적 입지 특성,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라북도 지역산업과 융·복합 가능영역을 연계한 해양수산 신산업, 지역특화산업을 발굴·육성하는 것을 의미함.
- 수산업 기반의 기초역량과 특성화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전라북도 해양수산조직개편에 따른 전문성 강화가 필요
 - 지역 특화자원에 따른 맞춤형 수산기술연구개발, 특산물 중심의 안전성, 병성검사 등이 수행되어야 함.
 - 어촌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은 수산업 기반의 판로 확보, 수산식품산업육성 등 수산업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구상
 - 어촌뉴딜 30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인프라 개선과 어촌거주자 역량강화를 통한 어촌관광, 해양레저, 치유산업 등 어업외 소득증대 지원방안 설계
- 전라북도 해양수산 특성화 전략 구상을 위한 특성화 자원발굴과 융·복합 가능 연계산업 육성방안 마련
 - 해양수산업의 특성상 가능한 범위가 산업 전반에 합의를 이루고 있으며, 신규 사업이 발굴되더라도 유사한 환경과 여건상 규모가 큰 지역이 모방하기 쉬움.
 - 단순 모방이 힘들고,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전라북도 특성화 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성화 자원발굴과 융·복합 가능 연계산업 육성전략을 구상해야 함.

2) 전라북도 해양수산 차별적인 특화전략 필요

- **(기존 특성화 분야 고도화 전략)** 전라북도는 갯벌 자원, 내수면 어업 등에서 타 지자체와 달리 차별적 우위요소를 지니고 있음.
 - 차별적 우위요소를 보유하고 있지만 유사한 자원을 보유한 인접 지자체와의 경쟁, 해당 자원을 활용한 산업의 지속성 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
 - 기존 특성화 분야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 비해 전라북도가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으므로 적합한 고도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바다자원의 유사성과 모방 용이성 대응전략)** 해양수산 정책사업의 특징은 바다자원의 유사성에 따라 대부분 지자체에서 비슷한 사업을 추진
 - 바다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도 모방이 용이하여 차별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 해양수산분야의 독특한 정책사업을 발굴하더라도 모방이 쉬워서 단발적 정책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개선과 인접분야 융·복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전라북도 해양수산 브랜드정책사업 개발)** 전라북도 해양수산 특화자원과 지역 균형발전을 결합한 “전라북도 해양수산 브랜드정책사업”을 개발 필요
 - 전라북도 해양수산 브랜드정책은 전라북도에서만 추진이 가능하거나, 선점 후 모방이 어려운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결집할 필요가 있음.

3) 전라북도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트랙 전략

- **(정책사업 추진체계의 점진적 개선)** 현행 해양수산 정책사업 추진체계를 유지하면서 점진적 개선이 필요함.
 - 현행 방식은 정부정책을 수립하고 해당 정책에 맞는 세부사업에 지자체가 공모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추진
 - 대부분의 해양수산 정책사업이 하향식으로 추진되므로 현행 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현 체계에서 점진적 변화(evolution)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사업의 적용범위 확대, 지속적인 유지, 관리, 개선 등 구상

- **(정책사업 추진체계의 혁신적 변화)** 현행 하향식 방식과 반대로 지역이 제안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의 정책사업 제안 필요
 - 현재 대선, 지선 등 선거공약, 국책사업발굴, 국가예산사업발굴 등 다양한 목적으로 매년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있음.
 -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제안하는 신규사업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지역 해양자원의 특성,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특화전략 구상
 - 매년 단발적 신규정책사업 발굴을 지양하고, 기존 지역특화정책사업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정책사업의 완성도를 높임.

- **(전라북도 해양수산 투트랙 전략)** 정부사업에 맞추어 공모하는 하향식 사업추진과 지역 여건에 맞는 상향식 사업제안 등을 결합하는 특화전략 구상
 - 하향식 정책사업의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요소를 발굴하여 상향식 정책사업으로 제안하거나, 산·학·연·관 전문가 포럼을 운영하여 트렌드 변화를 예측하고 정부정책을 선도하는 기반 조성

다. 정부와 지자체 해양수산정책업무 대응력 강화

- 전라북도 뿐 아니라 전국 광역지자체 해양수산 담당부서는 해양수산부의 모든 조직업무를 연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해양수산부 등 정부와 전라북도, 관계 시·군의 원활한 업무협력을 위해서는 조직구조에 따른 대응력을 높여야 함.
 - 지자체 업무분장 시 정부조직과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야 하며,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의 업무연계성 향상을 위한 조직 형태 검토가 필요함.
- 정부가 주도하며 지자체가 협력하는 해양수산정책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전라북도는 중개자 역할과 주도적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전라북도 해양수산자원의 최적 활용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유도하고, 관련 기초지자체와 정부의 중개자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함.
 - 조직체계상 대응역량 강화와 기초지자체, 전북도, 정부의 원활한 소통과 정보공유를 유도하여 효율적인 해양수산업무 추진체계를 갖춰야 함.

라. 한정된 조직·인적자원을 보완할 수단 강구

- **(관계자 자발적 참여·지속성)** 해양수산 정책사업은 어촌공간(바다, 내륙어촌 등)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으로 지역주민과 관계자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
 - 어촌공간 지역주민과 관계자,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기간이 도래하여 정책사업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성과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유지, 관리, 개선이 필요함.
 - 어촌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사업에 참여할 민간기업, 어촌주민 등의 자발적 참여와 지속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함.

- **(한정된 행정자원 보완 수단 모색)** 전라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해양항만과로 조직개편이 되어도 행정자원은 여전히 한정되어 있음.
 - 한정된 행정자원으로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원을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
 - 민간기업, 어촌주민 등 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하거나, 지속적인 유지, 관리, 개선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 업무는 반드시 행정이 담당할 필요는 없음.
 - 어촌공동체,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한정된 행정자원을 보완하여 정책사업의 성과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4

장

사례연구

Jeonbuk Institute

-
1. 지역 해양수산조직 운영사례
 2. 지역자원특성화와 임시조직운영사례
 3. 사례연구 시사점

제 4 장 사례연구

1. 지역 해양수산조직 운영사례

가.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는 해양수산물류국 산하 해양수도정책과, 물류정책과, 해운항만과, 수산정책과, 수산유통가공과가 해양수산 업무를 담당
 - 해양수도정책과는 해양수도팀, 해양산업팀, 해양환경팀(부산503호), 해양안전팀 등 4개 팀 27명으로 구성
 - 해양자치권 확보, 해양산업 육성·지원, 해양환경 감시, 사고·안전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물류정책과는 트라이포트기획팀, 물류인프라팀, 물류산업팀 등 3개 팀 14명으로 구성, 트라이포트 구축, 물류 플랫폼,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관리 등을 담당
 - 해운항만과는 항만물류팀, 해운산업팀, 항만재창조팀, 연안개발팀 등 4개 팀 19명으로 구성되어 스마트항만 조성, 환적화물 유치, 해양산업 클러스터, 연안정비 등 수행
 - 수산정책과는 수산정책팀, 수산자원팀, 어업지원팀, 어업지도안전팀(부산201호), 공동어시장TF 등 5개 팀 38명으로 구성
 - 해양수산정책 성과 관리, 수산분야 투자, 어장이용개발, 수산종자방류, 어업인 지원, 사고예방·지도, 별도의 공동어시장 현대화를 위한 TF 운영
 - 수산유통가공과는 수산진흥팀, 수산유통팀, 수산식품팀, 수산협력팀 등 4개 팀 17명이며, 어촌뉴딜, 수산물 유통·소비 촉진, 수산 식품산업 클러스터, 대외교류 등 담당
- 이외에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남항관리사업소, 수산자원연구소, 해양자연사박물관 등을 운영하고 있음.
 -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는 수산물 도매시장, 가공단지 등의 관리를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남항관리사업소는 항만시설, 해양시설 관리를 담당함.
 - 수산자원연구소는 수산종자 생산, 수산생물 종묘, 스마트 양식 등의 연구개발 업무와 수산기술 교육, 수산업 경영인, 귀어귀촌, 어촌정착 등을 지원

〈표 4-1〉 부산광역시 해양수산조직업무체계

부서			담당업무
해양 수산 물류국	해양수도 정책과	해양수도팀(7)	· 정부권한 이양 등 해양자치권 확보관련, 해양관련 교 류협력, 세계해양포럼, KOMSA 남부권센터 유치
		해양산업팀(3)	· STEM빌리지 운영체계 구축 ·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극지연구, 인프라조성
		해양환경팀(4)	· 해양환경 종합계획 수립, 해양폐기물 관리, 해양환경 개선사업, 유해생물 구제, 패류독소 피해예방
		부산503호(7)	· 해양환경정화, 해양환경감시지도단속
		해양안전팀(6)	· 해양사고 총괄보고, 해사안전산업 육성, 국제해사기구 (IMO) 협력·대응사업, 디지털선박 플랫폼 구축
	물류 정책과	트라이포트기획팀(2)	· 트라이포트 구축 로드맵 추진
		물류인프라팀(6)	·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화물차고지 조성
		물류산업팀(6)	· 국제물류주산업 등록·관리·지도, 화물운송선박화 업무
	해운 항만과	항만물류팀(7)	· 스마트 항만 조성, 부산항 신항 관련 업무, 해상특송 장 활성화, GDC 유치, 환적화물 유치 인센티브
		해운산업팀(4)	· 해양항만산업 육성기금 설립, 해운지식서비스산업 육 성, 부산국제선박관리포럼 개최, 해사법원 설립·유치
		항만채창조팀(3)	· 북항 통합개발, 해양산업클러스터
		연안개발팀(5)	· 수영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연안정비사업
	수산 정책과	수산정책팀(5)	· 해양수산창업투자, 수산정책포럼운영, 혁신 성과(BSC) 관리, 수산업 전문 투자조합 육성, 수산분야 감사
		수산자원팀(6)	· 어장이용개발계획 세부지침 수립·승인, 인공어초 시 설사업·관리, 수산종자방류사업 및 방류효과 조사
		어업지원팀(4)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어업인지원사업 추진
		어업지도안전팀(4) 부산201호(14)	·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사업,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 · 관내해역 불법어업 단속, 어선 안전조업 지도
		공동어시장TF(5)	·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설계·시공, 타당성 재조사
		수산진흥팀(6)	· 업무계획 수립 및 보고, 자갈치 수산명소화 사업 추 진, 주요 정책·현안자료 작성, 도시형 어촌뉴딜
	수산유통 가공과	수산유통팀(4)	·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지원, 수산물유통시설 건립, 수산물 소비촉진, 정부비축사업에 관한사항
		수산식품팀(4)	·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부산명품수산물 관리,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 수산물가공업 관련 교육지원
		수산협력팀(3)	· 부산국제수산EXPO, 한일해협연안수도현수산교류
		관리팀(6)	·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관리
직속 기관	국제수산 물유통시 설관리사 업소	시설팀(13)	·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시설, 전산 업무, 항만 시설 등 토목공사·관리
		도매시장운영팀(7)	·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구성, 중도매인 허가·관리
		가공단지운영팀(6)	· 가공단지 입주기업 선정·지원, 공유재산, 하역장 관리
		관리팀(7)	· 항만구역 관리, 항만시설물 유지관리, 항만순찰, 물양 장총괄관리
	남항관리 사업소	선박신고팀(12)	· 항만시설 사용허가, 체납선박관리, 남항 해양오염사고 예방·방제, 유해액체물질 관련 해양시설 관리

부서		담당업무
	수산자원 연구소	관리팀(16)
		· 소각여열 이송시스템·열관로 유지관리, 해수가온 시스템 유지관리, 예산편성, 균형집행 유지관리
		연구개발팀(15)
	기술보급팀(12)	· 수산종자 생산계획 수립·조정, 수산생물 중요생산, 스마트양식 기술개발, 수산자원 조사·평가 관련 업무
		· 수산기술 교육, 수산업경영인 육성, 귀어귀촌 육성, 청년어촌정착 지원,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
해양자연사박물관	관리팀(10)	· 예산편성(결산제외), 업무계획, 성과관리, 시설물 관리
	전시팀(10)	· 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전시품 제작·구입 추진, 이동 박물관(야외전시) 운영

자료: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 (접속일: 2021. 6. 18.)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접속일 기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수를 의미함.

해양수산물류국

부산광역시 1국 5과 19팀 1TF 121명

해양수도정책과	물류정책과	해운항만과	수산정책과	수산유통기공과
해양수도팀(7) 해양산업팀(3) 해양환경팀(4) 부산503호(7) 해양안전팀(6)	트라이포트기획팀(2) 물류인프라팀(6) 물류산업팀(6)	항만물류팀(7) 해운산업팀(4) 항만재창조팀(3) 연안개발팀(5)	수산정책팀(5) 수산자원팀(6) 어업지원팀(4) 어업지도안전팀(4) 부산201호(14) 공동어시장TF(5)	수산진흥팀(6) 수산유통팀(4) 수산식품팀(4) 수산협력팀(3)

자료: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 (접속일: 2021. 6. 18.)

〈그림 4-1〉 부산광역시 해양수산물류국 조직도

- 부산광역시는 “해양수도”를 지향하며 해양수산정책분야의 중요한 업무로 “해양수도정책”업무를 설정
 - 우리나라 최대의 항만이자 세계 2위 환적컨테이너부두를 보유한 부산항과 김해공항을 연계하는 글로벌 물류중심지로 도약하려는 물류산업 지원업무가 특징
 - 전통적인 수산업, 수산식품거점으로 수산자원조성, 생산, 가공, 유통, 식품산업화 등 업무가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음.
- 복합물류산업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물류국 물류정책과에 트라이포트기획팀이 트라이포트 로드맵 구상 등을 추진
 - 긴급한 지역현안으로 가덕도 신공항 이슈가 있어 경제부시장 산하 “신공항추진본부”를 조직하여 신공항과 기존 김해공항 관련 업무를 담당

- 트라이포트는 해상, 항공, 육상 등 물류거점간 연계를 통한 복합물류중심지를 표상하며, 글로벌 물류경쟁력 강화, 부산지역 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조직구조가 특징임.

나.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는 해양항공국 산하 해양항만과, 도시지원과, 해양친수과, 수산과가 해양수산 업무를 담당
 - 해양항만과는 해양기획팀, 해양산업팀, 항만계획팀 등 3개 팀 17명으로 구성되어 정책 사업 평가, 클러스터 지정, 크루즈산업 활성화, 항만개발 지원 등을 담당
 - 도시지원과는 도서정책팀, 도서지원팀, 해양환경팀 등 3개 팀 20명이며 도서지역 개발, 해상교통 접근성, 해양환경 보전·관리 등을 수행
 - 해양친수과는 친수공간계획팀, 친수공간시설팀, 연안관리팀 등 3개 팀 13명으로 구성, 해양친수도시와 공간 조성·시설 관리, 연안 주거지역 지원 등을 담당
 - 수산과는 수산정책팀, 어업지도팀, 수산자원팀 등 3개 팀 25명이며 어항관리·시설정비, 어장관리를 위한 지도·단속, 어업지도선 운영, 별도의 연평 안전조업 TF를 운영
- 지역 수산기술연구개발을 위하여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수산자원연구소는 수산종자 생산·방류, 보호수산생물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수산기술보급, 안전성 조사·분석, 생산관리 등을 담당함.
- 세계적인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물류연계의 강점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해양항공국”을 설치
 - 해운항만과 항공의 협업을 통하여 복합물류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이 강하며, 물류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조직체계로 판단됨.
 - 수산업무는 총 25명의 인력이 담당하며, 전통적인 수산자원조성, 생산, 가공·유통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함.

〈표 4-2〉 인천광역시 해양수산조직업무체계

부서			담당업무
해양 항공국	해양 항만과	해양기획팀(7)	· 의회업무(주요업무보고, 주요예산사업보고), 인천해양수산발전 정책협의회 운영, 재정사업평가
		해양산업팀(5)	· 해양산업육성정책수립,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육성, 크루즈 산업 활성화 추진
		항만계획팀(5)	· 신항, 내항, 남항 개발 관련 자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실시계획 인가, 단계별 집행
	도서 지원과	도서정책팀(6)	· 도서종합개발계획 추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서해 5도 지원 사업
		도서지원팀(4)	· 해상교통 접근성 향상 정책 추진(서해5도 특별법 여객선 손실금 지원 등), 안전사고 대응·지원
		해양환경팀(10)	· 해양환경 보전 종합계획 수립, 연안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보전·관리, 갯벌 등 보전·관리
	해양 친수과	친수공간계획팀(4)	·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해양친수 관련사업 추진현황 조사, 대화협력, 유관기관 협력
		친수공간시설팀(5)	· 해양친수공간 시설 공사, 시설물 정비
		연안관리팀(4)	·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 토지교환 민원 조정
	수산과	수산정책팀(6)	· 어항 관리, 어항시설사업, 지방어항 개발계획 수립, 공유수면·어항 관련 업무, 어촌뉴딜사업
		어업지도팀(12)	· 어업지도선 운영, 어선 안전조업지도, 연평 안전조업 T/F팀 운영, 어선감척 사업
		수산자원팀(7)	· 어장관리(어장정화 정비, 양식어장정화 등), 불법어업권 정비·지도·단속, 해면·내수면 어업면허
직속기관	수산자원 연구소	운영지원팀(7)	· 예산·결산 회계업무, 시설물 관리
		자원조성팀(8)	· 수산종자 생산·방류, 지역 특산품종 양식기술 연구, 어패류양식장 운영 관리
		자원연구팀(9)	· 희귀·보호수산생물 생태연구, 해양환경(양식장 적지 조사 등) 조사, 수산관련기관 협업업무
	수산물 지원센터	수산물 안전관리팀(6)	· 수산물 안전성 조사·분석, 안전한 수산물 생산관리 (HACCP 인증·사후관리)
		수산물기술보급팀(7)	· 수산물기술보급 계획수립·어장이용개발, 수산종자생산 확인·지도, 어업인 전문기술교육 지원

자료: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접속일: 2021. 6. 18.)

주1: 괄호 안의 숫자는 접속일 기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수를 의미함.

주2: 해양수산업무와 무관한 조직은 제외함.

해양항공국

인천광역시 1국 4과 12팀 75명

해양항만과	도서지원과	해양친수과	수산과
해양기획팀(7) 해양산업팀(5) 항만계획팀(5)	도서정책팀(6) 도서지원팀(4) 해양환경팀(10)	친수공간계획팀(4) 친수공간시설팀(5) 연안관리팀(4)	수산정책팀(6) 어업지도팀(12) 수산자원팀(7)

자료: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접속일: 2021. 6. 18.)

주: 해양수산업부와 무관한 조직은 제외

〈그림 4-2〉 인천광역시 해양항공국 조직도

다.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일자리경제국 산하 해양수산기획팀, 해운항만팀, 어업지도팀, 수산기술팀 등 4개 팀 23명으로 구성된 “해양항만수산물과”가 업무를 담당
 - 해양수산기획팀은 어촌뉴딜, 해양수산발전종합계획 등을 담당하고, 해운항만팀은 항만기본계획 수립, 항만물류, 크루즈산업 활성화, 해양안전벨트 업무를 수행
 - 어업지도팀은 불법어업 지도·단속, 수산종자 방류, 수산기술팀은 수산업경영인, 지도자,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당

〈표 4-3〉 울산광역시 해양수산조직업무체계

부서			담당업무
일자리 경제국	해양항만 수산과	해양수산기획팀(6)	· 해양수산발전 종합계획, 지방어항 시설,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 예산, 결산, 각종평가
		해운항만팀(4)	· 항만기본계획, LNG병커링, 북극항로·북방물류, 크루즈·마리나항만, 컨테이너, 해양안전벨트 운영
		어업지도팀(9)	· 불법어업 지도·단속, 수산종자방류,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원산지단속, 어업허가, 어업인보험지원
		수산기술팀(4)	·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어촌지도자협의회 운영, 전문인력 양성,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평가

자료: 울산광역시청 홈페이지 (접속일: 2021. 6. 18.)

주1: 괄호 안의 숫자는 접속일 기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수를 의미함.

주2: 해양수산업부와 무관한 조직은 제외함.

라. 경기도

- 경기도는 농정해양국 산하 해양수산과와 철도항만물류국 산하 물류항만과에서 해양수산 업무를 담당
 - 해양수산과는 해양수산정책팀, 어촌어항팀, 수산자원팀, 수산산업팀, 해양레저관광팀 등 5개 팀 40명으로 구성
 - 어업인 경영 지원, 어항개발, 어촌뉴딜, 불법어업지도·단속, 해양환경 보전, 유통가공, 내수면산업 활성화,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 등 업무를 수행함.
 - 물류항만과는 물류항만정책팀, 항만개발팀 등 2개 팀 16명이며, 항만 정책기획, 물동량 창출, 화물유치 지원, 항만배후단지 관리 등을 담당함.

〈표 4-4〉 경기도 해양수산조직업무체계

부서		담당업무	
농정 해양국	해양 수산과	해양수산정책팀 (16)	· 해양수산정책 기획, 귀어귀촌 활성화, 자율관리어업 육성, 수산직불금, 어업지도선 안전운항
		어촌어항팀(3)	· 어항개발, 어촌뉴딜, 공유수면, 연안과 해양보호구역 관리
		수산자원팀(4)	· 불법어업 지도·단속, 내수면 수산자원관리·조성 등
		수산산업팀(10)	· 해양환경 보전 활용·관리, 수산물 가공유통, 내수면자 원조성사업
		해양레저관광팀 (7)	·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교육사업 추진, 해양안전체험관 추진
철도항만 물류국	물류 항만과	물류항만정책팀 (4)	· 항만정책개발·기획, 평택항 물동량 창출, 평택항 활성화 전략
		항만지원팀(4)	·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제도 운영, 항만배후단지 관리·운영
		물류화물팀(4)	·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물류기본계획 수립
		물류단지팀(4)	· 물류단지계획 승인·변경 관리
직속기관	해양수산 자원연구소	총무팀(12)	· 연구소 행정 종합기획·조정, 예산·결산
		수산물안전팀 (8)	· 수산생물 질병관리, 수산물 안전관리, 시험·연구 보조
		갯벌연구팀(10)	· 해면분야 시험연구사업, 해면여장환경·갯벌 조사·분석, 갯벌 유용패류 등 양식기술개발
		내수면연구TF (12)	· 내수면어업 시험·연구, 내수면 생태환경 조사, 내수면 양식기술지도 사업

자료: 경기도청 홈페이지 (접속일: 2021. 6. 18.)

주1: 괄호 안의 숫자는 접속일 기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수를 의미함.

주2: 해양수산업무와 무관한 조직은 제외함.

- 별도의 사업소로 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무팀, 수산물안전팀, 갯벌연구팀, 내수면연구TF로 구성
 -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수산물 안전·질병관리, 해면어장·갯벌 환경 연구, 내수면어종 시험·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음.
- 과거 농정해양국에 항만물류기능을 수행하였으나 항만물류를 기반으로 철도, 항공물류 등 연계효과를 높이하고자 철도항만물류국에서 물류기능을 담당
 - 농정해양국의 해양수산과는 전통적인 수산업 중심에 마리나, 해양레저, 어촌관광 수요에 대응
 - 물류항만과는 전국 최초 지자체 항만공사인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지방공기업 형태로 물류항만과의 업무를 지원



자료: 경기도청 홈페이지 (접속일: 2021. 6. 18.)
 주: 해양수산업무와 무관한 조직은 제외

〈그림 4-3〉 경기도 농정해양국과 철도항만물류국 조직도

마. 충청남도

- 충청남도는 해양수산물 산하 해양정책과, 해운항만과, 수산자원과, 어촌산업과가 해양수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해양정책과는 해양정책팀, 해양산업팀, 해양레저관광팀, 해양환경팀, 해양생태복원팀 등 5개 팀 25명이며 바이오, 치유, 머드산업 등 해양신산업, 해양레저관광·마리나 항만개발, 해양환경 보전·관리, 연안습지, 갯벌생태계 복원 등을 담당
 - 해운항만과는 항만계획팀, 항만개발팀, 연안관리팀, 섬발전팀 등 19명으로 항만내 여장이용개발, 해운물류활성화, 항만재개발, 해양공간계획·관리, 섬종합개발 등 담당
 - 수산자원과는 수산행정팀, 어업지원팀, 어업지도선운영팀, 수산자원팀, 어항개발팀 등 5개 팀 25명이며, 연근해어업, 어업지도선 관리, 해면양식, 어촌·어항재생 등 수행
 - 어촌산업과는 어촌정책팀, 수산물유통가공팀, 어업산업팀, 내수면산업팀 등 4개 팀 13명이며,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 산업 클러스터, 유통구조개선, 가공식품 지원, 어촌 개발, 내수면산업 활성화 등 업무를 수행함.
- 수산자원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연구개발과, 기술보급과, 민물고기센터, 수산물안전성센터, 태안사무소로 구성
 -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생산현장 시험연구, 종자방류, 어업인 후계자 양성, 기술 보급 등을 수행하고, 별도로 민물고기센터, 수산물안전성센터, 태안사무소가 포함됨.
 - 내수면 시험·연구, 수산물 안전성 검사, 태안지역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을 담당하고 있음.
- 충청남도 해양수산물국은 “해양진도 충남, 환황해권의 새로운 중심지” 비전 실행을 위한 2013년 조직개편 일환으로 신설
 - 해양수산물국은 “대중국 교역 전진기지”, “서해안 신성장동력 창출”, “글로벌 해양생태·관광 메카 도약” 등을 3대 전략목표로 수립
 - 해양신산업 육성, 서해안 유류피해 대책, 당진항과 대신항 중심의 물류거점 경쟁력 강화, 가로림만 갯벌생태 등 충남의 해양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함.

〈표 4-5〉 충청남도 해양수산조직업무체계

부서			담당업무	
해양 수산물국	해양 정책과	해양정책팀(6)	· 해양수산물발전계획, 충청남도 해양수산물 정책협의회 운영, 예산·결산	
		해양산업팀(4)	· 해양수산업 종합계획 추진, 해양바이오산업, 해양치유산업, 머드산업 육성·전략과제 발굴	
		해양레저관광팀(5)	· 해양레저관광·문화·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해양관광시설 개발, 마리나 항만개발·산업 육성	
		해양환경팀(5)	· 해양환경 보전·관리, 해양쓰레기 광역 전처리시설, 서해연안 해양오염물질 발생원 모니터링	
		해양생태복원팀(5)	·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연안습지 보전계획의 수립·시행, 갯벌생태계 복원, 천수만 하구복원	
	해운 항만과	항만계획팀(9)	· 항만구역 내 어장이용개발·어업면허 협의, 항만 글로벌 네트워크 지원, 해운물류 정책	
		항만개발팀(4)	· 항만시설 설계·공사, 항만재개발사업, 신항만건설계획	
		연안관리팀(3)	· 해양공간계획·관리, 연안관리, 공유수면 관리	
		섬발전팀(3)	· 섬 가꾸기 종합계획 수립, 도서종합개발계획 추진	
	수산 자원과	수산행정팀(4)	· 수산업무 기획조정·주요 동향관리, 예산·결산	
		어업지원팀(3)	· 연근해어업 분쟁조정, 공동조업구역 지정·어구수선장 업무, 친환경어구 보급, 어업정책보험 지원	
		어업지도선 운영팀(10)	· 어업지도선 운항·관리, 불법어업 단속업무 추진, 근해어업 허가, 행정처분 총괄	
		수산지원팀(3)	· 해면 증·양식사업 지원, 어업재해 피해복구업무 지원, 친환경 양식어업, 수산종자산업 육성	
		어항개발팀(5)	· 어촌·어항재생사업, 지방어항 건설사업 공사감독	
	어촌 산업과	어촌정책팀(4)	· 해양수산물 창업투자지원센터 운영, 청년어촌정착 지원, 소금산업 육성,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수산물유통가공팀(3)	·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가공식품산업 정책 기획, 수산식품산업발전협의회 운영	
		어업산업팀(3)	· 어촌분야 농산어촌개발사업, 어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어촌특화발전 역량강화 육성계획 수립	
		내수면산업팀(3)	· 내수면 산업 정책 업무 종합 기획, 낚시산업 육성	
직속기 관	수산 자원 연구소	연구 개발과 (12)	행정 지원팀	· 일반사무, 문서접수·배부, 시설 관리
			생산 연구팀	· 생산현장 시험연구 기획, 양식장 모니터링, 종자생산·방류 추진
			갯벌 생태팀	· 갯벌생태 시험연구 기획, 종자생산·방류 추진
	기술 보급과 (10)	인력 육성팀	· 수산업경영인 육성 관리, 어촌지도자 협의회 운영, 어업인후계자 교육	
		기술 보급팀	· 양식어장개발(해면, 내수면) 타당성 조사, 수산단체 육성·지도, 선박의 안전운항·선박수리	
		귀어 학교팀	· 귀어학교 교육 프로그램 구성·운영, TAC제도 운영	

부서				담당업무
	민물고기센터 (10)	자원관리팀		· 사육어종 관리 보조, 주요업무보고서 작성·의회 대응
		시험개발팀		· 내수면 시험·연구사업, 수산자원조성 계획수립·방류효과 조사, 하천 서식어종·생태환경 조사
	수산물안전성센터 (9)	수산물안전팀		· 수산물 안전성 업무 기획·조정, 수산물 안전성 분석장비와 실험실 운영·관리 지원
		질병관리팀		· 수산생물 전염병 예찰협의회 운영, 수산생물 전염병 방역예찰, 조치, 역학조사
	태안사무소 (6)	인력육성팀		· 자율관리어업 육성·활동평가, 수산업경영인 육성, 사후관리
		기술보급팀		· 맞춤형 어업인교육 운영·추진, 연구교습어장 운영, 소득원개발, 연안 관측·어장환경 조사

자료: 충청남도 홈페이지 (접속일: 2021. 6. 18.)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접속일 기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수를 의미함.

해양수산물

충청남도 1국 4과 18팀 82명

해양정책과	해운항만과	수산자원과	어촌산업과
해양정책팀(6) 해양산업팀(4) 해양레저관광팀(5) 해양환경팀(5) 해양생태복원팀(5)	항만계획팀(9) 항만개발팀(4) 연안관리팀(3) 섬발전팀(3)	수산행정팀(4) 어업지원팀(3) 어업지도선운영팀(10) 수산자원팀(3) 어항개발팀(5)	어촌정책팀(4) 수산물유통가공팀(3) 어업산업팀(3) 내수면산업팀(3)

자료: 충청남도청 홈페이지 (접속일: 2021. 6. 18.)

〈그림 4-4〉 충청남도 해양수산물 조직도

- 충청남도 해양수산물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해양정책과”를 중심으로 해양수산업, 해양레저관광, 생태복원, 환경 등에 중요도를 부여함.
-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대응과 갯벌생태자원을 중요한 해양자원으로 인식하여 보전 관리에 정책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해운항만과는 당진항과 대산항, 보령항 등 항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서해안 인근 연안과 섬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함.
- 수산업은 전통적인 자원조성, 생산, 가공, 유통 등 업무를 담당하며 어업지도선 운영을 전담하는 “어업지도선운영팀”이 운영되고 있음.

바. 전라남도

- 전라남도는 해양수산국 산하 해운항만과, 섬해양정책과, 수산자원과, 수산유통 가공과에서 해양수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해운항만과는 해양정책팀, 해운물류팀, 항만개발팀, 완도항관리팀, 해양보전팀, 항만물류팀 등 42명으로 구성되어 항만물류산업 지원, 연안항 개발, 선박 입·출항 관리, 해양보호구역 관리 등 담당
 - 섬해양정책과는 섬정책팀, 섬어촌개발팀, 해양레저팀 등 17명으로 섬 관광지 개발, 공공시설 복구, 해양레저 관광상품 개발 등 업무를 수행함.
 - 수산자원과는 수산정책팀, 양식산업팀, 어선어업팀, 자원조성팀, 어업지도팀 등 51명이며, 어장이용, 수산관계 법령·규제, 양식어장 관리, 근해어업, 내수면 특화사업, 불법어업 지도·단속 등 담당
 - 수산유통가공과는 수산가공팀, 수산유통팀, 수산식품안전팀, 수산물브랜드지원팀 등 14명으로 구성, 수산식품산업 기반 조성, 유통·가공업 경영관리 지원, 수산물 안전 관리, 수산식품 품질인증 등 업무를 수행함.
- 전라남도 해양수산업 세력 규모에 비례하여 본청 해양수산국 구성원만 124명이며,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특성화 기술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여수·광양항, 목포항 중심의 항만물류산업과 완도항 등 어항개발사업을 해운항만과에서 통합 관리함.
 - 13개 시·군 총 2,165개 섬을 보유한 강점을 활용하여 “가고 싶은 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섬을 중심으로 어촌개발, 해양레저 등에 특화함.
-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지원과, 남·서·동부 지부로 운영하고 있음.
 - 공통적으로 수산경영인 육성과 수산기술 보급, 시험연구 개발사업 등을 수행하고, 지역에 따라 별도의 연구소(수산종자연구소, 민물고기연구소 등)가 운영되고 있음.

〈표 4-6〉 전라남도 해양수산조직업무체계

부서			담당업무	
해양 수산물	해운 항만과	해양정책팀(7)	· 해양수산물 기획·조정, 해양수산물발전 종합개발계획 수립, 수산분야 FTA 종합대책 등	
		해운물류팀(3)	· 항만물류산업 육성·지원, 항만 인센티브, 항만 배후단지 활성화 등	
		항만개발팀(5)	· 항만기본계획 업무협약, 지방관리 연안항 종합개발계획 수립, 항만시설 사용허가	
		완도항관리팀(4)	·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취소, 선박 입·출항 신고	
		해양보전팀(10)	·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지원,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종합계획 수립	
		항만물류팀(3)	· 여수·광양항, 목포항 활성화 지원	
	섬해양 정책과	섬정책팀(8)	· 섬 종합개발계획수립, 섬 관광지 개발, 섬 마을기업 육성, 섬 가꾸기 고도화 추진	
		섬어촌개발팀(5)	· 섬 지역 소규모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추진	
		해양레저팀(4)	· 해양레저관광상품 개발·육성, 해양레저스포츠 인력 양성, 지역특화 해양레저 모델개발	
	수산 자원과	수산정책팀(5)	· 전라남도 수산물발전 정책수립·제도개선, 어장이용개발계획 검토·승인, 수산관계 법령, 규제개혁	
		양식산업팀(5)	· 양식어업 종합대책 수립·시행, 양식어장 정리·기술지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어선어업팀(4)	· 근해어업 허가 처분·폐지, 어선어업 지원사업 추진, 어획물 운반업 등록 지도·점검	
		자원조성팀(4)	· 인공어초시설 사업집행, 지도감독, 자율관리어업 육성 추진·관리, 내수면어업 특화사업 추진	
		어업지도팀(5) 전남201호(7) 전남204호(7) 전남207호(7) 전남210호(7)	· 불법어업 근절대책(해면, 내수면) 추진(지도단속) · 어업지도선 전남 201호 운영 · 어업지도선 전남 204호 운영 · 어업지도선 전남 207호 운영 · 어업지도선 전남 210호 운영	
		수산유통 가공과	수산가공팀(4)	· 수산식품육성 정책 개발 등 기획, 수산식품산업 기반(가공단지 등) 조성, 창업투자 지원
			수산유통팀(4)	· 수산 유통업 경영관리 지원, 수산제품 해외시장 개척지원, 수산물 유통시설 물류 환경개선
			수산식품안전팀(4)	·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 수산물안전관리, FDA 지정해역 관리 운영
	수산물브랜드 지원팀(2)		· 수산식품 품질인증 지원, 수출주도형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해양수산물 융·복합 벨트 조성	
직속기관	해양수산 과학원	운영 지원 과 (14)	관리	· 시책발굴, 국고건약사업
			수산경영	· 수산경영인 육성, 청년 영어정착지원
			연구개발	· 시험연구 개발사업 운영·관리, 지식재산권 관리
		남부	완도지원	· 연구기획, 기술보급, 수산질병관리

부서			담당업무
	지부 (43)	강조지원	· 기술보급, 어업인교육
		해남지원	· 기술보급, 김연구
		수산종자연구 구소	· 해조류, 전복류 연구, 기술보급
	동부 지부 (29)	여수지원	· 연구기획, 기술보급, 수산질병관리
		고흥지원	· 기술보급
		장흥지원	· 기술보급
		해양수산 과학관	· 전시관리
		삼거리오류 생태관	· 전시관리
		미래수산 연구소	· 패류, 장어류 종자생산, 미세조류 대량배양
	서부 지부 (39)	목포지원	· 연구기획, 기술보급, 수산질병관리
		영광지원	· 기술보급
		진도지원	· 기술보급
		민물고기 연구소	·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 시험연구
		자원조성 연구소	· 수산 생태자원 관리, 갯벌 연구

자료: 전라남도청 홈페이지 (접속일: 2021. 6. 18.)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접속일 기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수를 의미함.

해양수산국

전라남도 1국 4과 18팀 124명

해운항만과	섬해양정책과	수산자원과	수산유통가공과
해양정책팀(7) 해운물류팀(3) 항만개발팀(5) 완도항관리팀(4) 해양보전팀(10) 항만물류팀(3)	섬정책팀(8) 섬어촌개발팀(5) 해양레저팀(4)	수산정책팀(5) 양식산업팀(5) 어선어업팀(4) 자원조성팀(4) 어업지도팀(5) 전남201호(7) 전남204호(7) 전남207호(7) 전남210호(7)	수산가공팀(4) 수산유통팀(4) 수산식품안전팀(4) 수산물브랜드지원팀(2)

자료: 전라남도청 홈페이지 (접속일: 2021. 6. 18.)

〈그림 4-5〉 전라남도 해양수산국 조직도

사. 경상남도

- 경상남도는 해양수산물 산하 해양항만과, 수산자원과, 섬어촌발전과에서 해양 수산 업무를 담당함.
 - 해양항만과는 해양항만정책팀, 수산물유통팀, 수산물가공팀, 해양보전팀, 항만운영팀, 항만개발팀 등 35명으로 구성됨.
 - 경남형 뉴딜사업 발굴, 수산물 유통, 소비 촉진, 수출지원, 해양쓰레기 처리, 생태 보전, 항만 운영·관리, 항만시설 유지보수 등 업무를 수행함.
 - 수산자원과는 수산정책팀, 스마트양식팀, 자원조성팀, 어업지도팀, 어업지원팀 등 27명이며, 수산자원 관리, 어업진흥 사업 추진, 스마트 양식 기반 조성, 수산종자 방류, 불법어업 지도·단속, 어업인 피해 예방대책 추진 등 담당
 - 섬어촌발전과는 섬발전팀, 섬어촌지원팀, 해양레저팀, 어촌개발팀, 어촌뉴딜팀 등 19명으로 섬어촌 발전, 어항개발, 어촌뉴딜사업 추진,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등 수행
-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 항만관리사업소, 수산안전기술원 등을 운영하여 수산자원관리, 수산물 안전성 검사 등을 지원함.
 - 수산자원연구소는 수산생물 관리, 스마트양식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연구 등을 담당하며, 항만관리사업소는 항만시설과 구역 관리, 선박 지원 업무를 수행함.
 - 수산안전기술원은 수산물 안전성 조사·분석 시설 관리 등의 연구개발 업무와 지역별로 수산기술 보급, 수산업 경영인 교육 등을 지원함.

〈표 4-7〉 경상남도 해양수산조직업무체계

부서			담당업무
해양 수산물국	해양 항만과	해양항만정책팀(7)	· 경남형 뉴딜사업 발굴, 해양수산 관련 기본계획 수립, 수산업경영인 관련 행사 관리·지원
		수산물유통팀(3)	· 수산물 유통정보 분석, 소비촉진 지원, 수산물 직매장·판매장 지원, 수산물 이력제 지원
		수산물가공팀(3)	· 수산물 수출 촉진, 시장개척, 수산물 수출물류 거점센터, 수산물 가공공장 스마트화 지원
		해양보전팀(12)	· 해양쓰레기 처리 및 해양생태계 보전, 해양공간관리 계획 수립·변경, 어장정화선 관리
		항만운영팀(6)	· 항만관리·운영 기획·조정, 항만운영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항로, 항법, 정박지 지정·고시

부서			담당업무
직속기관 /사업본부 /사업소	수산 자원과	항만개발팀(4)	· 항만건설사업 용역, 공사 감독, 항만시설 유지·보수, 항만시설 관리실태 점검
		수산정책팀(4)	· 수산자원관리·어업진흥 시행계획 수립, 업무계획, 의회보고, 자율관리어업 육성
		스마트양식팀(4)	· 스마트양식 기반조성·확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배후부지 조성, 연계사업
		자원조성팀(4)	· 수산종자 방류협의회 운영, 자원조성업무 대외협력
		어업지도팀(11)	· 어업지도, 내수면, 정치성(구획) 업무, 어업질서 확립, 불법어업 지도·단속
		어업지원팀(4)	· 적조, 고수온, 저수온 피해 예방대책 추진, 근해어업 허가처분, 어선등록 관련업무
		섬발전팀(4)	· 섬어촌발전정책 수립·이행, 중앙부처 등 섬어촌발전 관련 동향 관리, 의회대응
		섬어촌지원팀(3)	· 도서종합개발계획 시행,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해양레저팀(3)	· 해양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해양레저 활성화 사업, 마리나항만 조성·관리
		어촌개발팀(4)	· 지방어항 종합계획 수립·시행, 어항개발사업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어항시설의 사용허가
		어촌뉴딜팀(5)	· 어촌뉴딜 300 위업사업 모니터링, 어촌뉴딜300 사업 공모, 일자리창출사업, 대외협력
	수산자원 연구소 (26)	기술 담당	· 관리
			· 수산자원
			· 수산연구
	항만관리 사업소 (14)	민물고기연구센터	
		· 예산·결산, 시설 관리	
		· 관리어장 개발·시험양식, 스마트양식기술 개발	
	수산안전 기술원 (63)	통영	
		거제	
		사천	
		수산관리	
		기술지원	
		수산물안전관리센터	
		마산지원	
		사천지원	
		거제지원	
		고성지원	
		남해지원	

자료: 경상남도청 홈페이지 (접속일: 2021. 6. 18.)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접속일 기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수를 의미함.

해양수산물

경상남도 1국 3과 16팀 81명

해양항만과	수산자원과	섬어촌발전과
해양항만정책팀(7) 수산물유통팀(3) 수산물가공팀(3) 해양보전팀(12) 항만운영팀(6) 항만개발팀(4)	수산정책팀(4) 스마트양식팀(4) 자원조성팀(4) 어업지도팀(11) 어업지원팀(4)	섬발전팀(4) 섬어촌지원팀(3) 해양레저팀(3) 어촌개발팀(4) 어촌뉴딜팀(5)

자료: 경상남도청 홈페이지 (접속일: 2021. 6. 18.)

〈그림 4-6〉 경상남도 해양수산물 조직도

- 과거 경상남도는 농수산물, 건설항만방재국 등 해양수산물과 항만물류 분야가 상이한 부서에서 담당하다가 해양수산물국으로 통합
 - 경상남도는 항만물류 중심의 기능 통합을 위하여 택배 등 육상물류 기능을 분리하여 교통물류과를 신설하였다가, 항만물류과로 통합한 사례가 있음.
 - 물류센터, 물류단지 조성, 생활물류 지원정책 관련 업무가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교통체계, 유통시장 개선 등 타 부서 업무와 겹치는 부분이 많아 명확한 업무 범위 결정에 어려움이 있음.
- 이 문제는 경상남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항공물류, 육상물류를 담당하고, 해양수산부에서 항만물류를 담당하는 체계에 따라 대부분 지자체에서 경험하고 있음.

아. 경상북도

- 경상북도는 2013년 “동해안발전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기존 과 단위에서 국 단위로 승격되었음.
 - 기존의 농수산국과 환경해양산림국에서 추진한 해양수산 기능을 이관시켜 총 4개 과를 운영, 동해안개발과 해양수산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함.
 - 이후 2018년 환동해지역본부로 승격하여 본부장(2급)과 2개의 국(동해안전략산업국, 해양수산국, 종합민원실)으로 구성, 기존의 해양수산 분야와 동해안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에너지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
- 경상북도는 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산하 동해안정책과와 해양수산국 산하 해양수산과, 독도해양정책과, 해양레저관광과가 해양수산 업무를 담당
 - 동해안전략산업국 산하 동해안정책과는 동해안정책팀, 해양산업팀, 해양과학팀 등 14명으로 구성, 동해안권 개발구역 지정, 해양데이터산업 육성, 해양과학기술 연구 개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 등 담당
 - 해양수산국 산하 해양수산과는 수산정책팀, 수산유통팀, 수산자원팀, 어업관리팀 등 29명이며, 수산물 유통가공산업 육성, 어장개발, 수산자원관리, 어선안전, 어업인 지원, 어촌뉴딜사업 등 수행
 - 독도해양정책과는 독도정책팀, 연안관리팀, 해양환경안전팀, 항만개발팀 등 16명으로, 독도관련 사료·학술연구, 연안여객, 공유수면·연안 관리, 도서 지역정화운반선 운영, 항만개발과 물류정책 지원 등을 담당
 - 해양레저관광과는 해양관광정책팀, 해양레포츠팀, 해양경관콘텐츠팀 등 10명이며, 해양레저관광정책, 관광진흥지구, 마리나항 개발, 해양레포츠산업 육성, 동해안해양콘텐츠 관광 명소화 사업, 연안유희공간 관광지 조성 등 수행
- 어업기술센터와 수산자원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업기술센터는 수산경영인 양성, 수산물안전성 검사, 종자생산·시범어장 운영 등 수행
 - 수산자원연구원은 한해자원 어류 종자 생산, 마을어장 자원조성 등과 민물고기 연구센터, 토속어류 산업화센터를 통해 다양한 어종의 시험·연구를 진행

- 산업화 전략TF를 구축하여 내수면수산물식품개발 R&D센터 등 수산식품산업 육성기반조성에 집중하고 있음.

〈표 4-8〉 경상북도 해양수산조직업무체계

부서				담당업무
환 동해 지역 본부	동해안 전략 산업국	동해안 정책과	동해안정책팀(6)	· 동해안 발전 종합계획 수립, 동해안권 개발구역지정, 예산·결산
			해양신산업팀(4)	· 해양 데이터산업 육성·지원, 해양신산업 포커스 그룹운영
			해양과학팀(4)	·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해양과학교육, 인재양성,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육성
	해양 수산물국	해양 수산물과	수산정책팀(6)	· 업무보고, 의회업무, 재정사업 평가
			수산유통팀(7)	· 수산물 유통기공산업 육성 지원, 내수면 관상어비즈니스센터,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
			수산자원팀(4)	· 어장이용개발계획, 수산재해예방, 자율관리어업육성, 수산증양식, 수산자원관리
			어업관리팀(12)	· 어선안전조업, 어선어업지원사업, 낚시어선, 어선어업 분쟁조정, 어촌뉴딜300
		독도 해양 정책과	독도정책팀(6)	· 독도관련 사료수집, 학술연구, 독도 영유권 관련 대외협력
			연안관리팀(3)	· 연안여객, 공유수면매립, 연안관리, 연안침식 실태조사, 연안정비사업 추진
			해양환경안전팀(3)	· 도서지역 정화운반선 운영, 해양환경오염 방제
			항만개발팀(4)	· 포항영일만항 개발사업 및 항만 활성화 지원, 항만물류 정책수립 및 지원
		해양 레저 관광과	해양관광정책팀(3)	· 해양레저관광정책기획,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해양레포츠팀(4)	· 마리나개발, 해양관광, 해양문화축제, 해양레저·스포츠산업 육성
			해양경관 콘텐츠팀(3)	· 동해안해양콘텐츠 관광영소화사업, 연안 유희 공간 국민관광지조성
	어업 기술 센터	어업 기술 지원과 (19)	기획관리팀	· 예산, 명게양식 기술개발, 시설 관리 등
			수산지원팀	· 수산업경영인, 해양수산경영리더양성교육, 산업기능요원, 신지식인 육성관리, 마을어장관리시범사업, 어촌지도자 교육
			수산물안전팀	· 수산물 안전성검사·병성감정 업무 총괄, 배합사료 지원시범사업
		영덕지소 (7)	기획관리팀	· 종자생산, 시험사업
			수산지원팀	· 패류복합양성시험, 실시간 수온관측망 구축시험, 수산재해예방
		울릉지소 (3)	기획관리팀	· 수산업경영인, 어촌지도자협의회, 시범어장운영

부서				담당업무
	수산 자원 연구원	생산과 (26)	행정총괄팀	· 예산·결산, 시설관리
			한해어류연구팀	· 한해어류자원 종자생산·방류, 신품종 시험연구
			미래양식팀	· 미래양식 품종 개발, 어업인 맞춤형 신품종 시험연구, 스마트피서리테크노파크
			자원조성팀	· 마을어장 자원조성 품종 기술개발, 연구기반 시설사업, 수산종자 방류운영협의회
		민물고기 연구센터 (21)	행정지원팀	· 예산·결산, 의회업무, 생태체험관 기획
			자원연구팀	· 어종 시험연구, 종자생산, 자원조성 어종 종자 생산, 하천생태계조사
		토속어류 산업화 센터(22)	행정지원팀	· 예산·결산, 의회업무, 시설 관리
			자원조성팀	· 다슬기 종자생산·사육관리, 메기 종자생산, 하천수·지하수 등 사육용수 관리
			연구개발팀	· 시험연구사업 보고서 작성, 순환여과 시스템 운영, 토속어류 관상어 신품종 개발
			산업화전략TF	· 국비사업(내수면 수산물 식품개발 R&D센터 건립), 낙동강 민물고기 생태환경 Park 조성

자료: 경상북도 홈페이지 (접속일: 2021. 6. 18.)

주: 경상북도는 본청이 아니라 별도의 환동해지역본부가 해양수산업무를 담당함.



자료: 경상북도청 홈페이지 (접속일: 2021. 6. 18.)

〈그림 4-7〉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조직도

자. 강원도

- 강원도는 환동해본부 산하 기획총괄과, 수산정책과, 어업진흥과, 해양항만과가 해양수산 업무를 담당함.
 - 기획총괄과는 총무팀, 정책총괄팀 등 2개 팀 14명으로 구성되어 해양수산정책 개발·기획, 어촌활력 대책 추진, 현안관리 등 업무를 수행함.
 - 수산정책과는 수산개발팀, 어촌어항팀, 연어양식TF, 자원조성팀, 유통가공팀 등이며 연안어장 이용개발계획 수립·지도, 어항기능 고도화 인프라 확충, 어촌관리, 연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수산물신품종개발, 수산물유통·가공 및 안전관리 지원 등 담당
 - 어업진흥과는 어업지원팀, 지도협력팀, 어업인복지팀, 기술인력육성팀 등 32명으로 구성,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 어선 안전조업 지도, 사고예방, 어업인 복지지원, 어촌 지도자 협의회, 청년어업인 육성 등 업무를 수행함.
 - 해양항만과는 연안관리팀, 해양관광팀, 해양레저팀, 항만운영팀, 항만개발팀 등 5개 팀 31명으로 구성되어 연안관리·정비, 해양관광기반조성, 해양레포츠시설관리, 항만 운영, 운송사업 관리, 항만건설·시설 유지보수 등 담당
- 환동해본부는 수산업 진흥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산업 지원 뿐 아니라 어업인 복지에 관심이 많음.
 - 해양수산부의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연어양식을 특성화하기 위하여 “연어양식 TF”를 신설함.
 - 어업인 복지정책 종합계획 수립,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어업인 복지팀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이외에 본부 내 사업소로 수산자원연구원, 내수면지원센터, 한해성수산자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수산자원연구원은 동해안 수산자원 조기회복 조성, 신품종 시험·연구개발, 어·패류 우량종 대량생산·방류, 생산시설 안정적 관리·운영 등을 지원함.
 - 내수면지원센터는 내수면 경제성, 향토어종 생산방류,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고 한해성 수산자원센터는 심층수를 활용한 한해성 수산종자 대량생산·방류, 품종개발 등 지원

〈표 4-9〉 강원도 해양수산물조직업무체계

부서			담당업무
환동해 본부	기획 총괄과	총무팀(10)	· 예산·결산, 의회 대응
		정책총괄팀(4)	· 해양수산물정책 개발·기획, 어촌 활력화 대책 추진, 현안관리
	수산 정책과	수산물개발팀(4)	· 어촌 활력화 대책 추진, 현안관리, 연안어장 이용 개발계획 수립·운영 지도
		어촌어항팀(4)	· 어항기능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어촌정주어항 개발 지원, 어촌어항주변 정비 지원
		연어양식TF(3)	· 연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대서양연어 국내양식 행정 규제 관련 업무
		자원조성팀(3)	· 지역특화·신품종 개발 지원관리, 해양심층수 활용 수산물 특화 이용연구 사업
		유통가공팀(4)	·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지도,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수산물 유통가공 HACCP·식품안전 지원
	어업 진흥과	어업지원팀(4)	·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 면세 유류비 지원 및 지도·점검, 수산정책자금·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지도협력팀(23)	· 어선 안전조업 지도, 해난사고방지대책, 해면 불법 어업 지도 단속
		어업인복지팀(3)	· 어업인 복지정책 종합계획 수립 추진,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기술인력육성팀(2)	· 어촌지도자 협의회 운영, 지도관리, 수산기술 소식지 발간·홍보, 청년어업인 정착 지원
	해양 항만과	연안관리팀(5)	· 연안통합관리계획·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 해양생태계·해양바이오 산업, 연안정비
		해양관광팀(3)	· 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 지원, 어촌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해양관광 프로그램 개발·육성
		해양레저팀(2)	·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조성 사업추진·지원, 해양레포츠 국내외 대회 유치 지원, 어촌체험마을 지원
		항만운영팀(16)	·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개정, 항만운송사업·관련사업 등록·관리
		항만개발팀(5)	· 항만개발 기본계획 수립·추진, 항만건설, 시설 유지보수 관리
	수산물 연구센터 (12)	행정지원	· 동해안 수산물 조리기구 조성, 신품종 시험·연구개발, 어패류 우량종 대량생산·방류, 생산시설 안정적 관리·운영, 노후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어류	
		패조류	
	내수면 자원센터 (19)	행정지원	· 내수면 경제성·향도어종 생산방류, 고유종 시험연구, 내수면 환경개선, 생태복원, 어업 기반시설, 어업활동 지원, 종자생산기술 지도
		내수면사업	
		시험	
	한해성수산물 자원센터 (12)	행정지원	· 심층수를 활용한 한해성 수산종자 대량생산·방류, 고부가가치 수산물 품종 기술개발, 자원조성, 수산물 자생산·산업화 기술개발 연구
		한해성어류	
		한해성패조류	

자료: 강원도청 홈페이지 (접속일: 2021. 6. 18.)

주: 강원도는 환동해지역본부로 운영되며, 수산물자원연구원, 내수면자원센터, 한해성수산물자원센터가 포함

환동해본부

강원도 1본부 4과 15팀 1TF 95명

기획총괄과	수산정책과	어업진흥과	해양항만과
총무팀(10) 정책총괄팀(4)	수산개발팀(4) 어촌어항팀(4) 연어양식TF(3) 자원조성팀(3) 유통가공팀(4)	어업지원팀(4) 지도협력팀(23) 어업인복지팀(3) 기술인력육성팀(2)	연안관리팀(5) 해양관광팀(3) 해양레저팀(2) 항만운영팀(16) 항만개발팀(5)

자료: 강원도청 홈페이지 (접속일: 2021. 6. 18.)

〈그림 4-8〉 강원도 환동해본부 조직도

차.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양수산업무는 해양수산국이 담당하며, 수산정책과, 해양산업과, 해녀문화유산과, 해운항만과 등 4개과가 분담하고 있음.
 - 수산정책과는 수산정책팀, 자원유통팀, 양식산업팀, 어선어업팀 등 4개 팀 30명으로 구성되며, 해양수산 종합계획 수립·추진, 수산자원 관리·점검, 어류종자 매입·방류, 양식수산물 수급안정, 어선어업 안전지도, 불법어업 단속 등을 담당함.
 - 해양산업과는 해양산업팀, 해양관리팀, 크루즈해양레저팀 등 3개 팀 13명이며, 해양산업 R&D 협력, 어항 관리,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해양쓰레기 처리, 크루즈산업 육성·지원 등 업무를 수행함.
 - 해녀문화유산과는 해녀정책팀, 해녀박물관팀 등 19명으로 구성되어 해녀문화유산 정책 기획, 해녀 복지 지원, 해녀박물관 관리 등 담당
 - 해운항만과는 해운항만팀, 항만개발팀, 제주항만관리팀, 서귀포항만관리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연안항 관리, 해운산업 육성, 항만시설 현대화, 허가·정비 등 수행
- 별도의 사업소로 해양수산연구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양수산자원과, 미래양식연구과, 수산종자연구과, 수산물안전과, 광어연구센터로 구성됨.
 - 해양환경 관측, 어선어업 자동화, 양식기술 개발, 품종 배양, 안전성 검사 시스템 운영, 광어 품종 양식, 질병관리 연구 등을 지원함.

〈표 4-10〉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조직업무체계

부서			담당업무
해양 수산물	수산 정책과	수산정책팀(5)	· 예산편성, 결산 운영, 해양수산 관련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의회, FTA 관련 업무
		자원유통팀(5)	· 수산자원관리 시행계획 수립·점검, 어류종자매입방류 사업, 가공산업 지원 육성
		양식산업팀(4)	· 양식산업 육성, 양식수산물의 수급안정대책 수립, 내수면·육상양식어업의 허가 및 관리
		어선어업팀(16)	· 어선어업 경영안정·진흥, 어선어업 안전지도, 안전관리, 불법어업 지도·단속
	해양 산업과	해양산업팀(5)	· 해양산업 정책의 기획·조정, R&D 협력·지원, 지방어항, 정주어항, 소규모어항 관리운영
		해양관리팀(4)	·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해양쓰레기 관련사업 집행,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인가, 연안정비 등
		크루즈해양레저팀(4)	· 크루즈산업 육성·지원, 해중경관지구조성 시설공사, 크루즈 선용품 자원센터 조성
	해녀문화 유산과	해녀정책팀(6)	· 해녀문화유산과 정책 기획, 해녀복지증진, 생업지원
		해녀박물관팀(13)	· 해녀박물관 학예분야 기획, 시설 관리
	해운 항만과	해운항만팀(5)	· 연안항 운영계획 수립·조정, 해운산업 육성·이용자 지원, 해운항만물류 지원
		항만개발팀(9)	· 항만건설사업계획 수립, 하역장비 현대화·자동화, 하역장비 신기술 도입
		제주항만관리팀(9)	· 제주항 항만시설 사용허가, 항만시설 점검 등
		서귀포항만관리팀(9)	· 서귀포항 항만시설 사용허가, 항만시설 점검 등
직속기 관	해양수산 연구원 (40)	해양수산자원과	· 연구원 소관 종합기획, 업무보고 대응, 어업인 교육·기술지도, 연근해 어선어업 조업 자동화 장비 개발, 제주연안 해양환경 관측·모니터링
		미래양식연구과	· 신품종 양식기술 개발 연구, 수정란 보급, 어류자원 조성을 위한 종자생산·방류
		수산종자연구과	· 해면양식 품종 먹이생물 배양, 배양실 운영, 종자생산·양식기법 연구
		수산물안전과	· 안전성검사 운영 시스템 관리,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 품질관리 분야 시약류 등 관리
		광어연구센터	· 광어 여윈증 치료제 개발 연구, 광어 양식현장 암수 판별 현장 지원, 이력관리용 태그 개발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접속일: 2021. 6. 18.)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접속일 기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수를 의미함.

해양수산물

제주특별자치도 1국 4과 13팀 94명

수산정책과	해양산업과	해녀문화유산과	해운항만과
수산정책팀(5) 자원유통팀(5) 양식산업팀(4) 어선어업팀(16)	해양산업팀(5) 해양관리팀(4) 크루즈해양레저팀(4)	해녀정책팀(6) 해녀박물관팀(13)	해운항만팀(5) 항만개발팀(9) 제주항만관리팀(9) 서귀포항만관리팀(9)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접속일: 2021. 6. 18.)

〈그림 4-9〉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물 조직도

- 해양레저관광의 대표격인 크루즈산업 중심지이며, 해녀문화유산을 계승하기 위한 별도 조직이 운영되고 있음.
- 제주 크루즈산업 제2차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25년 국제크루즈선 400항차 유치에 위한 제주 크루즈 준모항화, 연안크루즈 활성화 등을 추진함.
- 제주 특유의 해녀문화를 자원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해녀박물관을 운영하고 해녀 복지증진 등을 지원하고 있음.

카. 충청북도

- 충청북도는 농정국 축수산과에서 해양수산 업무를 담당하며 수산진흥팀 4명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수산진흥팀의 주된 업무는 내수면 자원조성, 양식어업 육성, 어업허가, 불법어업 지도·단속 등임.
- 별도의 사업소로 내수면산업연구소가 운영되며, 내수면산업과와 남부내수면지원과가 연구업무를 분담하고 있음.
- 내수면산업과는 내수면 어종에 관련된 연구,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유치, 질병관리 등을 수행하고, 남부내수면지원과는 관상어 연구개발, 치어생산·방류, 자율관리어업 등을 지원함.

〈표 4-11〉 충청북도 해양수산조직업무체계

부서			담당업무
농정국	축수산과	수산진흥팀(4)	· 내수면 자원조성, 양식어업 육성 · 어업허가, 자율관리, 낚시, 불법어업단속
직속기관	내수면 산업 연구소 (28)	내수면 산업과	내수면 육성팀
			산업단지 운영팀
			연구 지도팀
		남부 내수면 지원과	연구 보급팀
			관상어 육성팀
			· 예산 및 결산, 업무보고, 토종붕어 자어보급, 은어 수정란이식, 인공산란장 효과 조사 ·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유치, 아쿠아리움 전시,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경제성어종 생산·관리 · 수산질병관리원 운영, 폐사어 원인 조사, 수출용관상어 질병 모니터링, 수산생물 방역 관리 · 미꾸라지 종묘생산 연구, 토종붕어 생산보급·기술지도 · 토종민물고기 관상어 연구개발, 치어생산 방류, 자율관리어업

자료: 충청북도청 홈페이지 (접속일: 2021. 6. 18.)

주: 해양수산업무와 무관한 조직은 제외하였음.

2. 지역자원특성화와 임시조직운영사례

가. 지역자원의 국가전략산업화

- 고창군은 어촌뉴딜300사업과 어촌부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창군 어촌뉴딜·종합개발사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
 - 어촌뉴딜300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촌마을의 낙후된 인프라를 개선하고, 마을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어촌공간을 혁신공간으로 재생시키는데 목적이 있는데, 지역별 공모와 선정, 사업 추진과정에 지자체 공무원이 전담하는데 한계가 있음.
 - 고창군 지역의 어촌뉴딜300사업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선정지역을 중심으로 선정 이후의 사업추진과 주민의 역량강화 교육, 마을공동체 사업 등에서 부족한 행정조직 업무를 지원함.
 - 어촌뉴딜300사업 선정과정이 3년간 매년 지속되고 연간 1~2개소씩 선정되어 공모 준비·참여절차보다 선정 후 추진과정의 중요성 인식과 비탄력적인 행정조직 한계를 극복한 사례로 판단됨.
- 생태자원 순천만을 지역 특성화 자원으로 활용하고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전략의 일환으로 순천만보전과를 신설, “순천만관리센터”로 확대하여 국가정원박람회 개최, 대한민국 생태수도 브랜드를 구축함.
 - “순천만보전과”는 순천만의 마스터플랜을 구상하고 이행하는 주도적인 조직으로 순천만관리, 순천만보전, 해양지도, 해양수산, 생태연구 등 업무를 수행함.
 - 초기 단계에 TF를 구성하여 업무에 필요한 기획, 농업, 환경, 토목(기술), 관광 등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여 안정화를 달성하고, 정규 조직을 구성함.
 - 순천만 습지를 통해 얻은 성과를 기반으로 정원박람회 개최와 운영관리를 위한 전담 부서로 정원산업과, 국가정원운영과로 특화시켜 순천시 지역특성과 미래산업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조직체계(순천만관리센터)를 마련함.

- 어촌뉴딜300사업에 대응하여 경상남도는 시·군 관계자, 관계기관 담당자 중심으로 어촌뉴딜300 TF를 구성하여 2018년 15개소가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함.
 - 해양수산부는 인프라가 열악한 어촌을 미래혁신공간으로 도약하기 위한 어촌뉴딜 300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어촌뉴딜300사업이 처음 추진되고 정부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경상남도 어촌뉴딜300 TF는 경상남도 해양수산과 담당자, 시·군 담당자, 경남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특화개발지원센터, 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관련자가 참여함.
 -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TF팀은 해양수산국장의 지휘 하에 지역특화자원을 발굴, 어촌뉴딜300사업 취지에 맞추어 전략을 구상한 결과, 촉박한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전국 70개소 사업지구 중 15개소가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함.
 - 경상남도 어촌뉴딜300TF는 현재 해양수산국 섬어촌발전과의 “어촌뉴딜팀”으로 정규 조직으로 편성됨.

- 해양수산부 스마트양식클러스터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응 TF를 구성, 사업단으로 확대하여 실무조직을 정규조직으로 편성함.
 - 스마트양식클러스터 공모과정에 특수목적법인 구성·참여가 필수조건이었던 2019년 공모대응을 위하여 실무진 중심의 TF를 구성하여 특수목적법인 설치를 주도함.
 - 특수목적법인 (주)AQ가 민간사업자로 참여하여 기존 TF를 사업단으로 확대하여 사업계획을 구상, 선진국의 스마트양식 선도업체 현지 벤치마킹조사 추진
 - 공모선정에 다른 체계적인 계획 이행을 위하여 경상남도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에 “스마트양식팀”이 전담함.

- 강원도는 해양수산부의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연어양식TF”를 운영함.
 - 스마트양식클러스터 공모사업(400억원 규모) 이행을 위한 시범단지 조성과 연어양식 산업 고도화를 전담하기 위한 조직으로 2021년 4월 연어양식TF를 설치함.
 - 지자체가 주도하여 정부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강원도가 연어양식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한시적 조직으로 TF 운영성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무인 자동화 항만 도입을 준비하는 TF를 운영하였고, 한국판뉴딜사업에 반영시키면서 정규조직으로 편성
 - 자동화항만구축을 위한 전담조직이 없었던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무인 자동화 항만 도입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 도입 TF”를 구성하여 한시적 조직을 운영하였음.
 - 한국판 뉴딜사업 10대 과제에 “광양항 자동화 부두 구축사업”이 반영되면서 정규조직(뉴딜사업팀-자동화사업팀)으로 편성됨.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정책에 대응하여 해양수산업 분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협력연구체계를 구축함.
 - 2018년에 “균형발전연구센터”가 최초 설치되었고, 2019년 “지역균형·관광연구실”로 확대, 해양수산업의 지역균형발전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해양수산부의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전담사무관을 배치, 해양수산부와 시·도 협력프로젝트를 개발함.
 -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시·도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과 “시·도 해양수산위원회” 등 해양수산 균형발전에 관한 개정을 검토하고 있음.

- 전라남도는 지역 섬 자원을 생태, 관광자원화하고 활성화 정책을 주도하기 위하여 섬해양정책과를 설치함.
 - “가고싶은 섬 프로젝트” 추진하고, 섬 중심으로 해양레저·여촌관광사업을 발굴, 주도적으로 처리하고 있음.
 - 청산도, 연흥도 등 다양한 섬 특성에 맞는 경관, 체험, 먹거리 등 상품화 지원을 통하여 많은 국민이 찾아오도록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동해안의 해양자원을 통한 에너지산업, 해양신산업 발굴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도는 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정책과를 설치
 -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신산업 발굴을 위하여 해양수산업 조직 외에 동해안전략산업국을 설치하여 동해안정책과에 해양신산업팀과 해양과학팀을 배치
 - 해양신산업팀과 해양과학팀이 동해안정책과에 배치되면서 기존 지역자원, 해양자원

등과 연계한 신개념의 미래해양산업 발굴 체계를 구축

-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해양수산국은 “독도해양정책과”가 운영되어 해양영토 전략 상 거점관리에 협력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은 “해녀문화유산과”를 설치하여 우리나라 전통어업 문화유산을 계승

- 해녀문화유산과는 제주해녀어업문화 강화와 지역어촌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해녀어업 소득안정, 해녀관련 문화재 등재 추진, 해녀문화 세계화 등을 추진
- 국가차원의 중요한 어업문화자산인 해녀어업문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현재 해녀어업 소득안정을 지원하고, 과거 어업문화기록을 문화재화,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우리나라 전통어업문화로 알리는 사업을 주도하고 있음.

나. 현안대응형 조직개편 사례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남도는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인력 양성, 제조업과 ICT 융합, 스타트업 육성, 주력산업 활성화 등 신규 정책사업 수행을 위해 경제혁신추진위원회를 운영함.
 -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는 국책연구소, 한국은행 지역본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테크노파크, 경영자연합회 등 주요 기관, 전문가, 기업인 등 약 40명으로 구성
 - 위원회를 매달 개최하여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자문과 향후 추진해야 할 신규 사업과 정책 방향을 도지사과 관련 국·과장과 논의하였음.
 - 분야별 전문성을 지닌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반영하여 실현가능성 뿐 아니라 정책 실현의 효과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음.
- 경상남도 블록체인 TF는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월 1~2회의 TF 회의를 개최하였지만 전문성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함.
 - 경상남도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통한 통합행정, 도민 편의 제고를 위하여 테크노파크, 교육청, 경찰청, 대학, 대학병원 등 다양한 관계자로 TF를 구성하여 사업발굴, 수행전략 수립 등을 추진하였음.
 - 1년 이상 월 1~2회 TF 회의 결과 다양한 과제와 사업이 발굴되었지만 실제 블록체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적인 전문성 취약으로 소기의 목적 달성에 한계
- 영남권 관문공항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구성한 TF 조직으로 신공항추진단 운영사례가 있음.
 - 대구경북신공항 유치를 위한 정책추진, 논리개발, 대외협력 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신공항추진단은 대구광역시 행정부지사,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대구경북연구원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며 총괄기획부에 대구와 경북에서 각각 2명씩 총 4명으로 구성
 - 정책연구부에는 대구경북연구원과 시민단체, 공무원 2명이 파견되어 신공항 유치를 위한 논리개발, 대외협력을 담당함.
 - 신공항추진단 TF는 인접지역과 신공항 유치전이 과열됨에 따라 조직규모를 확대시켰고, 대구경북신공항 유치를 위한 정책적 여건을 만드는 임무를 수행함.

- 세월호 사고 후 재난대응조직 일원화와 현장 중심, 복합적 재난 대응, 신속한 통제를 목적으로 설치된 국민안전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폐지
- 세월호 사고 후 재난·안전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신설된 국민안전처는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안전행정부 등 다른 기능을 담당했던 3개 부처가 통합됨.
- 전혀 다른 역할을 수행하던 기관의 물리적 통합은 재난·안전 대응 업무에서 융합에 실패하면서 결국 폐지됨.

3. 사례연구 시사점

가. 지역산업 경쟁력 우선순위 반영

- 대부분 지자체는 해양수산업, 항만물류산업, 해양환경보전 등을 주된 범위로 해양수산조직을 통합하고 있음.
 - 해양수산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조직 구성은 유사하며, 해양수산정책의 기초역량은 수산업과 해운항만물류산업 등 지원 업무로 구성됨.
 - 대부분 수산업이 전통적인 해양수산업 육성과 보전을 위하여 조직구조가 크지만, 일부 국가물류거점을 확보한 지자체는 항만물류산업의 구성을 확대하기도 함.

- 일부 물류산업의 실질적 가치 창출을 위하여 항공물류, 육상물류와 통합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있음.
 - 물류의 본질은 시작부터 끝까지 물류 흐름의 원활한 관리와 물류과정에서 비용절감, 이익창출을 도모하므로 항공물류, 육상물류와 원활한 연계가 중요함.
 - 국가거점항만을 보유한 지자체는 해양수산정책업무 수행조직에서 물류업무를 병행하는 형태를 보이기도 함.
 -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해양수산부(해운항만물류)와 국토교통부(항공, 육상물류) 업무편제에 따라 해운항만물류업무는 해양수산, 항공 및 육상물류는 건설교통 등으로 분리

- 지자체 해양수산행정조직의 구성과 주요사업은 기초역량으로 전통적인 수산업 경쟁력과 지속성 강화에 집중
 - 수산기술연구개발과 어촌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역에 특화된 해양수산자원, 연계자원을 활용하거나 지역산업 여건을 고려한 특성화 전략을 수립
 - 미래해양산업 발굴도 지역 해양수산자원을 활용하거나, 해양수산 관련 거점시설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

- 행정조직개편으로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의지를 드러내거나, 미래수산업으로 수산업을 육성 의지 표명
 - 경상남도는 어촌뉴딜300사업 공모를 위하여 지자체 주도의 TF를 조직하여 지역 어촌마을자원의 발굴 및 공모대응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촌뉴딜팀 편성
 -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응하여 TF와 사업단 구성을 통해 공모에 선정된 경상남도는 스마트양식팀 설치를 통하여 지속적인 스마트양식산업 육성 의지를 표출
 - 연어를 중심으로 스마트양식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강원도는 스마트양식클러스터 공모선정 후 중점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어양식 TF”를 신설

나. 정부정책 대응과 지역특화자원 경쟁력 강화

- 해양수산분야의 핵심사업으로 어촌뉴딜300과 스마트양식클러스터 공모사업이 있으며 지자체별 조직개편, 임시조직, 지원조직 구성 등으로 대응
 -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한 수산업, 수산기술연구개발, 어촌복지·소득증대와 직결되는 공모사업으로 판단
 - 적극적인 공모유치와 이행을 통한 지역어촌의 혁신성장공간 도약을 위하여 TF 형태의 임시조직을 구성한 지자체가 공모결과가 좋음.
 - TF형태의 임시조직을 정규조직으로 편성한 지자체가 있으며, 어촌뉴딜사업에 선정된 어촌이 대부분 지역의 어업거점기지이므로 향후 다른 지자체 확산 가능성 높음.
- 탄력적인 현안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 행정조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인으로 구성된 중간지원조직 설치·지원 검토
 - 지자체 조직개편, 인력확충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추진되므로 시급성·탄력성을 요구하는 현안업무와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업무에 어려움이 있음.
 - 긴급하고 한시적인 업무는 TF형태로 대응할 수 있지만, 수년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며 현안대응이 필요한 경우는 현 지자체 조직구조 한계 극복 필요
 - 고창군 어촌뉴딜·종합개발사업지원센터 사례처럼 행정조직의 한계를 민간조직으로 극복하는 대응전략 검토

- 지역 해양자원의 가치발굴과 보전을 위하여 지자체별 관리·보전·개발·이용을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음.
 - 전라남도는 섬 자원을 지역 해양특화자원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충청남도는 갯벌생태,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녀어업자원 등을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함.
 - 바다가 없는 충청북도는 수산진흥팀이 내수면산업에 집중하고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으로 해양과학기술을 접목한 미래해양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에너지 산업의 융·복합을 통하여 지역 자원화를 추진하는 사례를 토대로 전라북도 미래해양신산업 육성전략을 검토할 수 있음.
 - 해양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여 해양수산업과 융·복합을 추진하기 위한 동해안정책과에 해양신산업팀과 해양과학팀을 배치한 경상북도 특화사례의 시사점 도출
 - 전라북도는 탄소중립 2050 선언,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 등 친환경 에너지산업과 해양수산업의 융·복합 전략을 검토할 수 있음.

다. 한계사례

- Task Force 형태의 임시조직은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민간회사에서 도입취지에 맞추어 운영이 되지만 공무원 조직에는 한계가 있음.
 - 공무원 조직의 탄력적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본연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한시적으로 현안대응업무에 참여하는 형태의 TF는 성과도출에 한계가 있음.
 - “허베이스피리트유류사고 대책반”,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등 사례처럼 명확하고 한시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의 임시조직이 아니라면 공무원 조직구조상 성과 도출이 어려움.

- 대부분 지자체에서 다양한 분야의 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TF 운영을 추진하지만 실질적 성과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
 - TF는 본질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구성원이 정해진 기간동안 현안 문제 해결(목표달성)을 위하여 TF업무에만 몰입해야 함.
 - TF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 TF업무가 고유 업무가 되도록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정규조직 편성 전 과도기 단계에서 신중하게 검토
 - 한시적인 현안의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서 TF 조직구성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고유의 해양수산정책업무 추진과 현안문제 대응을 병행해야 함.

- 긴급현안과 현장중심 유기적 업무실현을 목적으로 구성된 TF는 내·외부 전문가, 이해관계자 참여 등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음.
 - 항만산업분야는 소규모 팀 단위에서 모든 업무를 소화할 수 없으므로 내·외부 전문가, 이해관계당사자의 의견청취, 현장중심의 업무추진을 위한 TF가 적합
 - TF는 임시조직이므로 설치 시 사전협의 의무화를 통해 무분별한 임시조직 생성을 예방하고, 비상설기구 형태로 운영하되 필요시 협의 후 정규조직화할 수 있음.
 - 과업종료 시 자동폐지하며, 지속적인 TF운영이 필요한 경우 조직을 유지하거나 정규조직화할 수 있음.

5

장

전라북도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방안

Jeonbuk Institute

-
1. 전라북도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방향
 2. 전라북도 해양수산 특성화 방향
 3. 전라북도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방안

제 5 장 전라북도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방안

1. 전라북도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방향

가. 전라북도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방향 설정

1) 지자체 주도영역

- **(수산업·수산물기술연구개발·어촌복지향상)** 해양수산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의무는 “수산업”, “수산물기술연구개발”, “어촌복지·소득증대”이며, 해당 분야에서 지역해양자원 활용방안에 업무역량을 집중
 - 전통적인 지자체 해양수산정책사업으로 연속적인 업무가 많으며, 지리적 입지, 지역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적정 업무영역 세분
 - 현재 전라북도 해양수산정책조직은 수산업, 수산물기술연구개발, 어촌소득증대 등 목적 달성에 적합하게 설계
- **(공정성·지속성 제고)** 지자체는 해양수산업의 직접 주체가 아니므로 공정하고 지속적인 해양수산 업무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정립 필요
 - 2020년 7월 조직개편은 기존 해양수산정책과의 6개 팀을 수산정책, 해양환경·항만 물류 등 세부 분야에 맞추어 분류한 것으로 판단
 - 공정하고 지속적인 해양수산 업무추진을 위하여 관리, 보전, 개발, 이용 등 목적에 따른 영역 세분화와 미래산업 발굴 등 지속가능한 성장전략 수립 필요
- **(조직구조·인적자원관리)** 전라북도 해양수산 업무추진의 체계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직구조 관리와 적절한 인력을 확충해야 함.
 - 지역 해양수산자원의 적절한 관리, 보전, 개발, 이용을 위한 전략 발굴·제안과 정부 정책 추진방향에 대응하는 지역 자원 활용방안 모색
 -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해양수산 자원 발굴·활용 과정의 공정성을 담보

2) 지역자원을 활용한 정부정책 대응과 미래신산업 발굴

- 해양수산부의 대표적인 지자체 협력사업은 어촌뉴딜300, 일반농산어촌개발,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이 있음.
 - 지역 해양수산 자원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해양수산업, 어촌소득증대 등 맞춤형 지원전략 수립을 위하여 공모방식으로 진행
 - 어촌뉴딜300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정부 공모계획에 맞추어 추진되며,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임시조직형태인 TF 구성, 정규조직으로 편성하는 사례가 있음.
 - 전통적인 해양수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미래신산업과 접점을 높이려는 정부정책 대응력을 향상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대응전략 모색이 필요함.

- 전라북도 해양수산, 어촌여건에 맞추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 강점이 있는 내수면산업, 갯벌생태환경 등 차별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내수면산업 경쟁력이 높은 전라북도가 국가 내수면산업 경쟁력 제고를 선도할 수 있는 거점 인프라 조성, 전문인력양성, 전·후방 산업 육성 등 맞춤형 전략을 검토함.
 - 탄소중립 2050 선언에 맞추어 모든 영역에서 탄소저감 노력이 추진되며, 최근 블루카본으로 주목받는 갯벌자원, 염생식물, 패류 등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음.

- 대표적인 국책사업인 새만금개발과 연계한 해양수산업 발전전략 수립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단계적으로 새만금 부지의 어업적 활용 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하지만,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고, 중국 동안에 위치한 대규모 원전시설 등 수산물 안전성 이슈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새만금 어업적 활용 가치를 부각
 - 새만금신항만,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등을 연계하여 수출주도형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하여, 타 지역 수산업과 연계발전 가능성을 높임.
 - 해양수산업과 새만금 개발사업을 연계할 경우 수산업, 물류산업, 콜드체인산업, 친환경 에너지산업, 레저·관광산업 등 세계 환경 트렌드에 부합하는 미래산업 중심으로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음.

3) 전문성 강화영역의 선정

- **(수산업·어촌소득증대→세분화)** 해양수산자원의 관리·보전·개발·이용을 수산업, 수산기술연구개발, 어촌소득증대로 한정해도 모든 분야 전문성 확보 한계
 - 조직규모가 작은 지자체는 넓은 범위를 알게 담당하며, 상대적으로 조직규모가 큰 지자체는 좁은 범위를 깊게 담당하여 업무 세분화 수준이 높음.
 - 수산업, 수산기술연구개발, 어촌소득증대, 지역 해양자원 등 전문성을 갖춰야 할 영역을 선정하고 점차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 **(전라북도 특성화 전문성 강화)** 전라북도 해양수산자원 특성과 지역산업 여건을 고려하여 특성화 가능 영역 중심으로 전문성을 갖추 필요 있음.
 - 해양수산업 분야 중 경쟁력이 있는 물김, 바지락 생산, 내수면어업, 갯벌생태산업 등 자원 활용, 지속가능성, 전·후방연계산업 등을 고려하여 특성화 요소를 발굴함.
 -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특성화 영역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의견, 전라북도 해양수산 담당자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검토 필요

- **(중장기적 방향성 유지+단기적 현안대응)** 탄력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행정조직 특성상 장기적 조직개편, 인력충원방향과 단기 현안대응 병행 필요
 -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 영역을 선정하고 업무 세분화, 인력 충원 등은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함.
 - 현안문제 대응, 탄력적인 업무 조정에 어려움이 있는 공무원 행정조직의 여건을 고려한 완충방안 모색이 필요함.

나. 해양수산 공무원 인식조사

1) 조사개요

- 2020년 새만금해양수산국 조직개편 후 업무추진 여건과 정책사업 성과 개선에 관한 실무진 의견을 수렴하였음.
 - 조직개편 목적에 맞추어 해양수산분야 전문성 강화, 업무추진의 효율성,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조직개편 성과와 방향성을 탐색함.
- 수산정책과(수산정책팀, 양식가공유통팀, 수산자원팀), 해양항만과(해양환경정책팀, 항만해운팀, 해양레저관광팀) 6개 팀, 1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추진함.
 - 조사내용은 새만금해양수산국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추진 성과, 만족도, 개선필요사항, 전라북도 해양수산 특성화 자원 인식 등으로 구성

2) 주요내용

- **(조직개편 방향성)** 새만금해양수산국 조직개편은 전문성 강화, 이질적 업무 구분 등을 위한 것이며 장기적 관점에서 방향성에 전반적으로 동의함.
 - 현재 새만금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와 해양항만과는 기존 해양수산정책과(농축수산물품국)의 6개 팀이 업무특성에 따라 분리된 형태
 - 새만금해양수산국은 새만금개발과, 새만금수질개선과, 수산정책과, 해양항만과 등으로 구성, 해양수산 현안의 지역사회 노출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위상제고를 체감함.
- **(정부조직 연계성 강화)** 해양수산부의 조직신설 등 정책방향과 연계성을 가지는 방향으로 해양수산 조직개편을 추진
 - 팀 구성은 현재 인력여건과 해양수산부의 조직구조, 관련 법·제도상 지자체의 의무이행을 최적화하는 형태이지만 신설되는 정부조직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 검토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어촌어항재생과”가 설치되었고, 한시적 운영 후 정규조직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라북도 조직개편에 정부조직개편 트렌드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미래신산업 대응역량 강화)** 한국판 뉴딜사업, 탄소중립 2050선언 등 정부정책 추진방향과 트렌드에 부합하는 미래신산업 발굴과 대응역량 강화 필요
 - 해양수산분야의 미래트렌드는 전통산업의 스마트화, 재생에너지, 블루카본, 갯벌생태자원 보전, 바이오산업 등으로 확장되고 있음.
 - 일부 지자체 중 TF, 사업단 등 형태로 전담조직을 편성한 지역에 관련 산업 기반조성 지원이 집중되고 있음.
 - 현재 업무를 중심으로 성과를 개선하는 방향의 조직개편 뿐 아니라 미래신산업 대응역량을 높여 지속 가능한 경쟁력 제고기반 마련 필요

- **(업무분장 및 협력체계 구축)** 현 여건에 맞춘 효율적인 업무분장 결과이지만 해양수산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업무세분화, 부서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 2개 과로 분리되어 부서별로 담당하는 업무 범위가 상대적으로 명확해졌지만 개별 업무영역으로 접근하면 인력충원이 없는 상태의 조직개편 한계가 노출
 - 현행 조직·인력여건을 중심으로 업무분장이 이루어졌으므로 불분명한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공약사업, 국책사업, 국기예산사업, 신규시책 발굴 등 업무에서 수산정책, 해양항만정책 분야로 구체화된 점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인력충원 필요)** 수산정책과와 해양항만과가 신설되었지만 인력충원이 없어서 전문영역 세분화에 어려움이 있음.
 - 부서 행정업무를 기존 인력이 분담하고 있으며, 각종 회의·보고자료, 보도자료 등 행정업무가 이전에 비해 증가하여 업무가 가중되고 있음.
 - 2021년 인력충원이 예정되어 있지만 해양수산 업무의 전문적인 이행을 위한 장기인력확보계획이 필요함.

○ **(기초지자체 협력체계 구축 필요)** 실제 현장·대민업무를 담당하는 시·군 조직과 광역 조직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 현장·대민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시·군 조직은 업무협력 주체가 2개 과로 분리되어 비효율성이 야기될 수 있음.
- 기존 1개 과와 협력했던 업무가 조직개편에 따른 분리로 2개 과와 협의를 해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모든 여건을 고려한 조직개편은 어렵지만 전라북도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사업의 실행 효율성과 유기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도내 부서간 협력방안 모색)** 해양수산 업무와 연계성이 높은 분야와 원활한 융·복합을 위하여 관계 부서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농축수산물품목 소속일 때에 비하여 농업농촌식품산업 관련 부서 간 업무협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견해가 있음.
- 해양레저관광은 관광부서, 항만해운팀은 공항, 철도, 도로를 활용한 물류업무 담당부서, 블루카본, 갯벌생태환경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부서, 재생에너지담당부서 등 전북도내 부서간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2. 전라북도 해양수산 특성화 방향

가. 조사개요 및 결과

1) 조사개요

- 전라북도 해양수산 특성화 방향 설정을 위하여 도내외 해양수산정책전문가, 전라북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특성화 가능 분야를 조사함.
 - 특성화 영역은 전라북도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17), 해양산업육성계획(2017), 내수면 어업육성 및 6차 산업화 계획(2019) 등 언급된 분야를 중심으로 설정하였음.
 - 전문가 자문회의, 지역 해양수산인,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발전방향을 검토함.
- 전라북도 해양수산 특성화 영역은 다음과 같이 5가지 분야로 설정
 - **(내수면산업)** 내수면 어종 후속 가공·유통과 체험·관광산업 육성
 - **(생태관광·체험)** 갯벌생태보전과 관련 연계관광·교육산업 육성
 - **(수산식품산업 육성)** 전통적인 수산식품산업과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를 연계하여 수산식품 수출전략화 추진(새만금신항만 연계)
 - **(해양바이오산업)** 지역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 **(해양치유산업)** 고군산군도, 갯벌, 습지 등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치유산업 육성
- 도내외 해양수산전문가, 전라북도 공무원 등 25명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해양수산 특성화 방향에 대한 동의여부, 전략적 중요도 인식 여부를 조사
 - 특성화 제안 분야에 대한 동의여부와 전략적으로 중요성을 인식하는 정도를 4점 만점으로 평가하였고, 상대적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5개 특성화 분야 외에 검토가 가능한 영역에 대하여 제안 의견을 수렴하였고, 해당 의견을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을 추진

2) 조사결과

- 해양수산 특성화가 필요하지만 수산업, 수산기술연구개발, 어촌소득증대 등 기초역량 강화가 선행되어야 함.
 - 수산식품 가공공장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군 어촌을 중심으로 어시장 활성화, 새만금 개발과 수산업 연계 활용방안 등 검토가 필요
 - 기초역량강화 기반이 조성된 후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성화 발전 전략 추진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 판단

- 새만금 기본계획에 어업적 활용전략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전라북도 해양수산 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새만금 개발 연계전략 필요
 - 새만금 기본계획에 배치되는 않는 범위에서 수산업, 관광, 체험 등을 연계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음.
 - 해양경관과 생태자원으로 유명한 고군산군도, 갯벌생태환경 등을 연계하고, 새만금 산업육성정책과 부합하는 해양수산업 연계전략 모색

- 인접 지자체와 비교할 때 전라북도의 해양수산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하여, 전통적인 수산업 영역에서 경쟁하기 보다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함.
 - 내수면 산업과 기존 해수면 수산물을 활용한 수산식품 유통·가공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음.
 - 어촌체험마을, 고군산군도 등 해양레저·어촌관광, 생태체험 등으로 어업외 소득증대 사업 구상이 필요함.

- 탄소중립 2050 선언에 대응하여 해양수산 분야는 해조류, 패류, 염생식물 등을 활용한 블루카본이 검토되고 있음.
 - 전라북도의 해양생태환경 특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블루카본 정책 주도과 염생식물의 경관개선, 염생식물을 활용한 산업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해양바이오산업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블루카본, 미래해양산업 등 트렌드를 고려하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영역으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함.

- 5가지 특성화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 제안 영역에서 높은 동의수준을 나타남.
 - 내수면 산업(3.4), 갯벌생태보전 등 관광·교육(3.3), 수산식품산업(3.6), 해양바이오 산업(3.2), 해양치유산업(3.4) 등 4점 척도로 측정한 동의여부는 높게 측정됨.
 - 동의여부 인식정도는 수산식품산업(3.6), 내수면 산업과 해양치유산업(3.4), 갯벌생태 보전 관광연계(3.3), 해양바이오산업(3.2) 순으로 나타남.
- 특성화 방향성에 대한 중요성 인식을 조사한 결과 5가지 특성화 방향 모두 3 점 이상 높은 수준의 중요도를 인식하고 있음.
 - 내수면 산업(3.2), 갯벌생태보전 등 연계관광·교육(3.2), 수산식품산업육성(3.4), 해양바이오산업(3.0), 해양치유산업(3.1) 등 4점 척도로 측정한 중요도가 높게 인식됨.
 - 중요도 인식정도는 수산식품산업(3.4), 내수면 산업과 갯벌생태보전 등 관광·교육 (3.2), 해양치유산업(3.1), 해양바이오산업(3.0) 순으로 나타남.

〈표 5-1〉 전라북도 해양수산 특성화 방향 조사결과

특성화요소	동의	중요도
내수면 어종 후속 가공·유통 및 체험·관광산업 육성	3.4	3.2
갯벌생태보전 및 관련 연계관광·교육산업 육성	3.3	3.2
수산식품산업 육성(국가식품클러스터+새만금신항만 연계: 수출전략산업)	3.6	3.4
지역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3.2	3.0
고군산군도, 갯벌, 습지 등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치유산업 육성	3.4	3.1

주: 동의여부, 중요도는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총 25명의 조사결과를 종합한 결과임.

- 전라북도 해양수산 특성화 방향에 대한 조사결과 기존 지역 해양수산발전을 위한 연구결과 도출된 특성화 방향 설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전라북도 공무원과 도내외 해양수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특성화 방향설정의 적절성과 중요성을 조사한 결과 높은 수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 5가지 특성화 방향에 대한 동의인식은 평균 3.4점, 중요도는 평균 3.2점으로 전라북도 해양수산 특성화 방향 설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나. 전문가 자문

- 도내외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신개념 크루즈산업, 새만금연계전략, 농산어촌 소멸문제 대응 등 전라북도가 주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과업을 발굴함.
 - 내수면산업, 갯벌생태보전 연계 관광·교육, 수산식품산업, 해양바이오산업, 해양치유 산업 외에 전라북도 여건에서 주도할 수 있는 특성화 방향에 대한 제안을 요청함.
 - 인접 지자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해양수산업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가 주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산업은 국정과제, 국책사업 등 동향을 고려할 때 후속연계전략 차원에서 선도할 수 있는 제안으로 판단됨.

- **(신개념 크루즈산업)** 광역지자체 협력, 섬 관광 연계모델을 확장하여 전라북도 new성장 관광벨트를 조성하여 국내 순환형 크루즈산업 육성방안 검토
 - 전통적인 크루즈관광의 패턴은 국가 간 이동과 체험이지만, 지역 간 협력을 통하여 국내 순환형 크루즈관광 프로그램을 개발
 - 새만금신항만, 공항마리나 등 지역 내 크루즈부두 조성계획이 있으므로, 해당 부두 시설을 활성화하며 해양크루즈관광트렌드를 주도함.
 - 이를 위해 유관기관 협업,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크루즈산업육성법, 해운법 등 관련 법·제도의 보완을 건의할 수 있음.

- **(새만금 연계전략)** 새만금 기본계획에 의거 단계적 부지매립과 용지개발이 추진되는 새만금 부지의 해양수산업 연계전략 적극 검토 필요
 - 전라북도의 해양수산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거점이 새만금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기본계획에 해양수산업 용지 활용에 제약이 있음.
 - 새만금 부지의 해양수산업 연계가 가능할 경우 광역적 통합과 협력 거점으로 전략적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새만금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산업발전이 가능하므로 탄소중립 2050을 선도하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산양식, 수산식품가공산업 등 확장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

-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연계전략)** 전라북도에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가 있으므로 해당 인프라와 물류여건을 연계한 수산식품수출전략단지 조성 검토
 - 해양수산부의 수산식품정책은 국민 먹거리와 수산식품수출(K-Fish 인증)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에 초점을 맞춤.
 - 전라북도에 위치한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는 농식품가공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수산물 가공산업으로 확장 가능성이 있음.
 - 정부가 주도한 식품산업 발전의 거점이므로 인접 지자체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활용한 식품개발, 수산식품수출 등의 전진기지화 전략 필요
 - 이를 위해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와 물류거점(군산항, 새만금신항만 등)을 연계한 콜드체인 네트워크 구축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국정과제 선도: 농산어촌 과소화해결)** 국토 외곽지역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선제적 전략을 주도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하여 국정과제 수준의 의제를 선도함.
 - 대부분 지자체의 농산어촌은 지역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전라북도 어촌 역시 유사한 실정, “국토 외곽지역의 지역소멸 선제적 대응”을 주도하는 조직체계 선도
 - 현 정부의 농산어촌 소득증대, 정주여건 개선 트렌드를 고려할 때, 향후 농산어촌 지역소멸 대응전략이 국정과제 수준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음.
 - 섬, 연안어촌, 내수면 어촌 등 다양한 해양수산 특성을 보유한 전라북도 여건을 고려하여 대응이 필요함.

- **(수산기술연구개발 특성화)** 지역 해양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산기술연구개발 전문성을 높여 특성화 전략 추진을 지원
 -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의거하여 지역별 수산기술연구, 적합 어종 종자생산·방류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전라북도는 해면·내수면 어·패류, 갑각류, 해조류 등에 강점이 있지만, 지역 환경에 적합한 종자생산, 육종연구역량이 미흡함.
 - 수산기술연구개발을 지역환경, 어종, 자원 등에 맞추어 전문화하여 전라북도 해양수산 특성화 전략 추진의 기술적 지원을 담당하도록 함.

3. 전라북도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방안

가. 전라북도 해양수산 전문성 강화

1) 조사개요

- 전라북도 해양수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만금해양수산국 조직개편 결과를 중심으로 전문성 제고 방안 모색
- 전라북도와 시·군 해양수산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재 조직의 세분화 방향과 전략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의견수렴을 토대로 도내·외 해양수산 전문가 자문과 평가를 통해 전라북도 해양수산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조직구조개편, 인력충원 등 방안을 구상

2) 전라북도 해양수산조직 세분화

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수산정책과 세분영역 설정

- 수산정책과는 현재 수산정책팀, 양식가공유통팀, 수산자원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 7월 조직개편에서 스마트양식팀이 신설
 - 양식가공유통팀이 스마트양식팀과 수산물가공유통팀으로 세분화되며, 수산정책팀과 수산자원팀은 현행 유지
- 수산정책팀은 수산정책과의 정책기획업무를 총괄하고, 수산업진흥, 어촌체험마을 조성·지도, 수산단체 및 어촌계 관리 담당
 - 직무상 기획업무를 담당하므로 국가예산, 신규시책, 국책사업 등 사업발굴 등 업무를 총괄하는 전략 부서의 역할 담당
 - 수산정책과 주무팀으로 양식가공유통팀(스마트양식팀, 수산물가공유통팀), 수산자원팀 등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
- 양식가공유통팀은 수산생물 이식업무, 스마트양식, 수산물공동브랜드, 해면 및 내수면어업, 염전관리, 수산물 이력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등 업무를 담당

- 2021년 조직개편에 스마트양식팀과 수산물가공유통팀으로 세분화되어 수산물 생산과 가공유통으로 전문화 추진
 - 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등 업무가 “과”단위 업무로 설정한 지자체가 많으므로, 지속적인 세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전문가 자문결과 양식가공유통팀을 스마트양식팀, 수산물가공유통팀으로 세분화한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
- 수산물가공유통팀과 유사한 기능으로 내수면산업팀 설치에 대하여 내수면산업에 특화되 수산물 가공유통산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음.
 - 수산식품산업팀 신설은 수산물가공유통팀의 발전모델로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수산식품 수출전략화 등을 선도할 조직체계로 적정성이 있음.
 -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물류 인프라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연계한 수산식품산업 특성화 전략을 위하여 생산, 가공, 유통 등 영역별 전문성 제고 필요
- 수산자원팀은 어촌뉴딜300사업, 바다 숲 조성, 수산자원관리, 어업허가, 총허용어획량 할당, 어선어업지도 등 업무를 담당
- 수산자원팀 명칭은 인공어초설치, 바다숲 조성, 해중림 조성, 수산자원관리,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어획량 할당 등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
 - 해양수산부의 현 정부 중점사업인 어촌뉴딜 300사업을 수산자원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조직개편 과도기적 현상으로 판단, 전문성을 갖춘 팀 편성이 필요
- 현재 수산자원팀의 업무는 단계적으로 수산자원관리업무, 어촌어항재생업무, 어업지도·안전업무 등으로 세분화 필요
- 수산자원관리업무는 수산자원조성과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적정 자원관리를 담당하여 인공어초설치, 바다숲 조성, 수산자원관리 등 담당
 - 어촌어항재생업무는 어촌뉴딜300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전담하며, 어촌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한 어촌 인프라 개선 및 역량강화 등 추진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어촌어항재생과)” 설치 등 어촌뉴딜300사업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지속적인 관리, 사후유지 대응 필요

- 어업지도·안전업무는 수산자원팀에서 담당하는 어선지도업무와 최근 중요성이 급증하는 해양안전업무를 담당
 - 어업지도업무는 어선어업에 특화되며,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관리가 중요하게 부각됨에 따라 어촌어업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조직편성 검토
 -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에 “비상안전담당관”이 각종 안전사고, 비상상황대응을 담당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분야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해양항만과 세분영역 설정

- 해양항만과는 현재 해양환경정책팀, 항만해운팀, 해양레저관광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해양환경정책팀은 해양공간·연안통합관리, 무인도서개발과 주변해역보전관리, 해양환경오염 방지, 해양생태계보전, 어장정화선, 해적생물 구제, 적조예방 등 업무추진
 - 항만해운팀은 군산항 활성화, 새만금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신규항로 개설, 여객선 자원업무, 공유수면관리 등 업무 담당
 - 해양레저관광팀은 해양레저, 해양관광, 섬관광, 고군산군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담당
- 해양환경정책팀은 해양항만과 주무팀으로 기획업무를 전담하며, 해양공간, 해양환경, 어장정화 등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업무를 해양환경정책팀에서 담당하는데 각 분야별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판단
 - 미래해양신산업,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관리와 보전 업무 등을 담당할 수 있는 “해양정책팀”을 설치하여 해양정책, 해양산업, 미래산업 발굴 기획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 해양신산업 발굴과 기존 해양수산업과 스마트기술 융·복합 등을 전담할 수 있는 해양신산업 TF를 구성하여 전라북도 미래 성장동력으로 활용
 - 해양공간계획, 해역이용협의, 해양정보관리 등 해상경계 문제 대응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주무팀에서 담당

- 기존 해양환경정책팀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광범위하므로 “해양환경팀”을 신설하여 해양생태환경보전 업무를 담당
 - 탄소중립 2050선언,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등 사회 전영역에서 친환경, 탈탄소 움직임에 대응하여 전라북도 해양자원을 활용한 적극적 대응 전략의 일환
 - 해양환경팀은 해양환경 관련 업무, 갯벌생태보전, 블루카본 등 해양수산 분야의 생태문명, 탄소중립 2050 지원 업무를 담당

- 항만해운팀은 현재 군산항 활성화와 건설 중인 새만금신항만을 중심으로 전라북도 항만물류정책을 종합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
 - 군산항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고 2040년까지 건설될 새만금신항만의 항만건설 관련 정부업무를 지원하는 역할 주체
 - 항만건설은 국가사무이지만 신항만 건설 과정에서 기존 항만과 연계협력, 지역산업 발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을 건의하고, 원활한 건설이 이행되도록 협력

- 항만을 거점으로 해운물류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해운물류산업팀을 편성하여 전문성 있는 지원과 현안 대응 추진
 - 해운물류산업팀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에 따른 항공물류, 철도 및 도로운송 등 육상 물류와 원활한 연계협력을 지원
 - 전라북도 수출통합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지역업체의 지역물류거점·지역물류업체 이용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해양레저관광팀은 전통적인 해양레저스포츠, 바다·어촌관광에 해양자원을 활용한 치유산업으로 고도화하는 역할을 담당
 - 어촌웰니스관광팀을 편성하는 어촌공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어촌관광, 생태관광, 해양치유산업, 해양레저 등 지역자원 활성화 전략 구상
 - 해양자원이 치유산업으로 활용되는 트렌드와 웰빙, 삶의 질, 건강 등이 중요해지는 환경에 능동적인 대응을 통하여 해양웰니스(wellness)산업을 선도
 - 웰니스(wellness)는 웰빙(well-being)과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로 건강과 행복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

다)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 전문성 강화와 특성화 지원

-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수산연구과, 민물고기연구센터, 수산물안전센터, 어업기술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라북도 수산업 분야의 특성에 맞추어 해면, 내수면 어업기술, 종자 연구개발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수산기술연구개발 트렌드와 본청 행정조직의 개편방향에 맞추어 지역 고유품종 연구개발, 스마트기술 접목 수산기술연구 등 특성화 영역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
- 바지락, 동죽 등 전통적으로 전라북도 수산분야의 강세인 패류양식기술연구, 종자배양·방류 등에 전문성 제고 필요
 - 전라북도 해역에서 대규모 생산되는 패류 종패생산, 방류를 통한 수산업 경쟁력 제고와 변화하는 해양환경에 대응하는 신품종 연구개발 등을 전담
 - 패류양식기술의 전문성 제고는 지역 어민 수익증대에 기여할 것이며, 패류 서식환경 모니터링을 추진하여 지속적인 해양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음.
-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물김 생산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현재 전라북도 고유 해조류 품종연구에 한계가 있음.
 - 현재 타 지역 김 품종을 활용하여 물김을 생산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바다 환경에 적합하지 않아 황백화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전라북도 바다환경에 적합한 해조류 육종연구와 고유품종 보급을 통하여 물김 생산 여가를 지원하고, 지역 수산업 발전에 기여
- 내수면 관련 수산기술연구개발은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수산물로 갑각류가 부각됨에 따라 차별화된 전문성 제고 방향 검토
 - 내수면 어종 연구개발 업무와 고부가가치 수산물로 부각되는 갑각류 연구개발 전문 역량을 제고
 - 갑각류는 수산물 소비 뿐 아니라 관상용, 친환경 생태농업 등에도 활용되어 향후 갑각류 연구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농어업, 치유산업, 6차산업화 등 연계 가능

- 최근 스마트양식산업 육성정책에 뒷받침하여 스마트양식기술의 실증과 후속 사업 지원을 통하여 스마트양식산업 육성 필요
 - 스마트양식실증센터를 조성하여 전략 품종별 스마트양식기술을 테스트하고, 스마트양식 빅데이터를 구축
 - 스마트양식실증결과를 토대로 귀어귀촌, 창업 등 희망자를 대상으로 스마트양식, 창업 교육, 후속 행정절차 등을 지원
- 2020년 신설된 수산물안전센터는 수산물 안전성 검사와 수산물 병성감정팀 신설로 실효성 있는 수산물 안전관리를 담당
 - 수산물안전센터는 관련 법규정과 수산물 안전·소비자 안심 트렌드(나정호·정호중, 2020)에 대응하여, 수산물안전성검사업과 병성감정팀(2021년 7월 신설) 운영
 - 수산생물 질병관리를 위한 수산물 병성감정팀 신설은 체계적인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전문연구사를 확보하여 체계적인 수산물 안전관리 지원
-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 조직이 각 지역별로 분담하였던 어촌지도, 어업기술 교육 업무를 통합하여 데이터 축적, 전문성 강화, 관리 일원화 등 효과 도모
 - 현재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수산연구과, 민물고기연구센터, 수산물안전센터, 어업기술센터)는 지역 어민을 대상으로 기술교육, 어업지도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지역 경계로 분담된 어민 대상 어촌지도, 어업기술교육 업무를 통합하여 관련 데이터 구축, 어촌지도 전문성·효율성 강화 등 효과를 도모

수산연구과	민물고기연구센터	수산물안전센터	어촌지도과
총무팀 생산연구팀 패류연구팀	관리팀 시험개발팀 갑각류연구팀	수산물안전팀 병성감정팀	어촌지도팀 어업기술교육팀
해조류육종연구센터	스마트양식실증센터		
해조류육종연구팀 고유품종 보급팀	실증센터 운영팀 창업지원팀		

〈그림 5-1〉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 전문성 강화·특성화 지원방향 제안

3) 전라북도 해양수산조직개편 단계적 추진

가) 전라북도 해양수산 단계적 조직개편 방향

-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존 조직체계 중심의 세분화 방향을 제시하였지만 정책 조직 여건상 정책사업 수요, 전략적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단계적 추진 필요
 - 수산정책과는 향후 수산정책팀, 수산식품산업팀, 수산물유통팀, 스마트양식팀, 수산자원팀, 어촌어항재생팀, 어촌어업안전팀, 어업지도팀 등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해양항만과는 향후 해양정책팀, 해양환경생태팀, 항만팀, 항만물류산업팀, 어촌웰니스관광팀 등 세분화 필요
- 전라북도 여건과 특성화 영역을 고려한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수산정책과는 현재 조직체계에서 어촌어항재생팀의 정부정책 대응 필요
 - 수산정책팀에서 담당하는 어촌어항재생업무와 어촌뉴딜300사업 등을 통합한 어촌공간재생 관점에서 정부정책과 보조를 맞춰갈 필요가 있음.
 - 어촌뉴딜300사업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수산정책팀)을 통합하여 실질적인 어촌공간재생효과를 제고
- 해양항만과는 현행 해양환경정책팀, 항만해운팀, 해양레저관광팀에서 해양환경정책팀을 해양정책팀, 해양환경생태팀으로 세분화 필요
 - 해양항만과는 해양정책, 해양산업, 미래신산업 등 트렌드를 주도하는 해양정책기획, 신산업 발굴 업무가 시급하고 중요한 업무로 판단
 - 해양수산부 조직구조상 광범위하고, 미래지향적 업무를 담당하고, 탄소중립 2050선언, P4G 서울회의 개최 등 정책적 중요도가 높음.
 - 해양정책과 환경생태를 세분화하여 전문성 있는 정책사업을 구상·추진하도록 조직구조를 개선하고 적절한 업무분장 필요

- 항만해운팀은 현재 인력의 한계로 군산항 활성화, 새만금신항만 건설계획 등을 소수 인력이 담당하는데, 전문성 있는 조직개편과 인력 확충 필요
 - 항만 운영 활성화는 지역산업 연계성, 해운물류산업 지원 등 전문성이 요구되며, 파생적 수요·공급 관계를 고려하여 지역산업 활성화 관련성이 높음.
 -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새만금신항만 건설계획이 군산항 기능과 중복되고, 2022년 새만금신항만 건설계획 재검토 용역이 예정되어 전략적 대응이 중요한 시기
 - 항만건설 과정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담당하는 “항만팀”과 항만운영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인 운영전략을 구상하는 “해운물류산업팀” 세분화 필요
- 어촌웰니스관광팀은 기존 어촌관광과 해양치유산업 등 관광 관련 산업이 휴양과 치유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선제적인 조직개편으로 대응할 수 있음.
 - 코로나19로 전통적인 관광, 체험 문화가 휴식, 치유 문화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전라북도의 자연경관, 생태환경 등이 주목받는 상황을 적극 활용

수산정책과	어촌안전지도과	해양항만과
수산정책팀 수산식품산업팀 수산물유통팀 스마트양식팀 수산자원팀	어촌어항재생팀 어촌어업안전팀 어업지도팀 어촌웰니스관광팀	해양정책팀 해양신산업TF 해양환경생태팀 항만팀 해운물류산업팀

〈그림 5-2〉 전라북도 해양수산 단계적 조직개편 방향 제안

- 해양수산조직개편은 장기적 방향성을 가지고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함.
 - 관련 법·제도에 의하여 지자체의 해양수산발전 의무인 수산업, 수산기술연구개발, 어촌소득증대에 집중할 수 있는 조직구조 형성
 - 지역 해양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신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국가항만물류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발전 연동

나) 단계적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확보

- 전라북도 해양자원, 산업여건 등을 고려한 조직개편 방향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충이 필요함.
 - 공무원 조직특성을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인력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전문관, 인사교류 등)를 활용할 수 있음.
 - 임기제 공무원 채용은 단기간에 인력충원과 전문성 확보의 장점이 있는 반면 기존 공무원 조직과 융합, 협업 등 한계점이 있으므로 상황에 적합한 활용이 필요함.

4) 전라북도 해양수산 공무원 전문성 강화

가) 해양수산 업무담당자 경쟁요인

- 이 연구는 전라북도 새만금해양수산물국 조직개편에 따른 해양수산 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따른 지역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함.
 - 전라북도 해양수산업 경쟁력, 가치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이 연구에서는 해양수산 업무를 추진하는 조직경쟁력 제고를 중간단계로 인식
 - 조직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경쟁력 제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구성원 경쟁역량 결정요인을 도출함.
- 해양수산발전은 “해양수산의 지속 가능성,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의 달성이며, 이를 위한 경쟁역량 강화가 필요함.
 - 해양수산부의 정책목표는 “해양수산 분야의 지속발전 가능성”, “어가소득증대”, “해양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임.
 - 조직 구성원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발굴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경쟁역량을 갖추어야 함.
- 경쟁력은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으나, 현행 법·제도, 해양수산 업무 특성을 고려한 경쟁요소를 설정함.
 - 조직경쟁력은 구성원의 역량과 업무 추진절차의 전문성으로 구성되며, 개인역량은 전문지식과 기술, 직무수행 역량, 경험, 책임성·윤리의식 등으로 구성됨.

-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와 해양수산정책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변화인식”, “경쟁요인도출역량”, “기획”, “현안발굴”, “현안대응”, “지속” 등을 중요 변수로 선정하였음.



〈그림 5-3〉 전라북도 해양수산 경쟁력 강화요소

- “변화인식역량”은 글로벌 트렌드 변화, 사회여건 변화를 인지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따른 예측력을 의미함.
 - 변화인식역량이 중요한 이유는 단기적으로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맞추어 지역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트렌드 변화에 따른 미래를 예측하여 국가정책변화를 선도, 해당 신규 사업의 주도적인 당사자 역할 수행
 -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맞추어 국가정책방향을 선도하는 역량을 보유하면, 미래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주도적 추진주체가 될 수 있음.
- “경쟁역량도출역량”은 타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지역 내 차별화 요인을 발굴하고 특성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함.
 - 현재 전라북도 해양수산 차별화 요소는 내수면어업 강점 고도화, 갯벌생태자원 등이 있으며, 지역 바다, 내수면 등 어촌공간가치를 증대할 수 있어야 함.

- 타 지역과 차별화는 공간, 지역적 경계에 따른 단순 차별화가 아닌 지역 특성화 전략으로 연계하는 핵심요소를 발굴
- “기획역량”은 지역 여건에 맞는 차별적 자원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실제 추진되도록 이끄는 역량을 의미함.
- 기획역량은 세 가지 분야에서의 설득력을 의미하는데, 첫째, “왜 이 사업을 우리 지역이 담당하는 것이 국가발전과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설득”(對정부 설득력)
 - 둘째, “우리 지역이 이 사업을 담당하는 것이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설득”(관계 시·군 설득력)
 - 셋째, “우리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얻게 되는 혜택”을 관련 종사자, 기관, 지역민, 수혜자 등 관계자에게 설득(관계자 설득력)
- “현안발굴역량”은 전라북도 해양수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진단하고 분석하여 객관화하는 역량을 의미함.
- 현안은 이미 추진되는 정책사업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정책사업의 후속관리와 지속적인 개선 차원에서 중요함.
 - 문제현상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 증가함에 따라 정확한 진단과 분석 역량(문제의 원인인식)이 요구됨.
- “현안대응역량”은 전라북도 해양수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적절하게 대응·해결하는 역량을 의미함.
- 바다·내수면 공간은 다양한 요소가 결합될 수 있으며, 현안 발생시 단독해결이 어려운 상황이 많음.
 - 현안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산·학·연·관 전문가 협력·위기대응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 “지속역량”은 이미 추진되는 정책사업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개선하는 역량을 의미함.
- 공무원의 순환근무체계에서 정책사업의 성공적 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추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한정된 조직자원이 전 분야를 담당할 수 없으므로, 행정력의 공백이 발생하는 영역에서 관계기관, 지역민, 수혜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활성화 지속

나) 전라북도 해양수산정책위원회 구성·운영

- 전라북도 해양수산정책위원회(가칭)는 지역 해양수산정책협의체 구축과 해양수산발전을 주도하는 주체로 민간, 행정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
 - 수산, 여촌안전관광, 해양항만 등 분야별 관계자, 전문가, 행정 담당자 등으로 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해양수산발전 중요현안을 자문·건의
 - 단기 긴급현안 발생시 구성되는 TF와 달리 전라북도 해양수산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행정기구 등이 중장기 발전 비전을 수립하고 추진
- 공무원이 담당업무마다 전문성을 갖추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 분야 민간기업,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위원회를 활용
 - 공무원 조직 특성상 순환근무를 하더라도 분야별 현안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안해결, 미래발전전략 수립 지원
 - 해양수산정책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면 실효성이 없고 자원 낭비가 우려되므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되, 민간 전문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검토

다) 조직학습·토론 정례화

- 해양수산 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며, 세계적인 트렌드 변화에 민감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직학습·토론 문화 조성
 - 업무 부담을 고려할 때 장기 학습과정보다 분야별 컬로퀴엄(colloquium), 심포지엄(symposium) 등 전문가 참여 학습과 토론을 정례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
 - 다양한 해양수산분야 전문가와 학습·토론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공무원의 현안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참여 전문가에게 현안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체계적인 조직학습·토론 정례화를 위하여 학습·토론 프로그램 기획, 준비, 진행하는 업무 담당자 필요

라) 전라북도 해양수산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사업참여

-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해양수산 전문인력양성사업에 일부 희망자가 참여하거나 특성화 방향에 맞는 교과과정을 개설
 - 일부 희망자에 한하여 정부 해양수산전문인력양성사업이나 전라북도 산·학·관 커플링사업 등 교육·훈련, 학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 이를 통해 해양수산 전문인력양성사업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현장 네트워크 확장과 개인역량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현재 해양수산 전문인력양성사업 프로그램은 수산전문가과정, 해운항만물류인력양성사업 등에 불과하므로 지역 특성화 방향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마) 전라북도 해양수산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 행정조직구조와 인사이동을 고려할 때 해양수산발전 방향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음.
 - 중간지원조직은 현장과 해양수산 조직 간 원활한 소통과 지속적인 방향성을 유지하는 효용이 있음.
 - 행정조직과 중간지원조직 협력 뿐 아니라 중간지원조직 간 원활한 협력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함.
- 어촌어항재생, 어촌특화개발, 귀어귀촌, 어장관리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중간지원조직을 지역 해양수산 업무에 참여
 - 조직확대, 정규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있는 행정조직 비탄력성의 한계를 단기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현장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집단으로 목적달성을 유도할 수 있음.
 - 과도기적 형태로 행정인력을 일부 파견하여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행정지원 역할을 담당하게 할 수 있음.
- 해양수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하여 매년 공모사업 대응, 신규사업 발굴 등 담당자가 선정된 사업의 종료 후 유지·관리까지 맡는데 한계가 있음.
 - 공모사업 준공 이후 지속적인 관리, 해당 거점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 구상과 활성화

등을 중간지원조직이 담당하게 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높일 수 있음.

- 매년 새로운 사업 발굴 및 공모대응을 해야 하는 정책담당자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전문성 있는 관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나. 전라북도 해양수산 특성화 강화

1) 수출주도형 수산식품산업

-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조성된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를 활용하여 전라북도를 수출주도형 수산식품산업 중심지로 발전
 - 기존 수산물 생산 거점을 중심으로 산업기반이 조성되었다면 전라북도는 전라북도와 서해안 인접지자체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원료로 활용하는 식품가공과 수출을 주도
 - 전라북도를 식품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정부정책과 식품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새만금신항만, 항만경제특구 등 일관성이 높음.
- 내수면산업기반이 뛰어난 전라북도 여건을 고려할 때 궁극적으로 내수면어종의 소비활성화를 위한 식품산업화가 불가피함.
 -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품종을 중심으로 생산·가공·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내수면 어종을 원료로 건강식품, 수산식품 등을 개발
 - 한국 식품의 선호도가 높은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전략적 표적시장을 설정하면 전라북도의 지경학적 입지 강점이 부각될 수 있음.
- 후쿠시마 원전사태, 인접 국가의 원전 시설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 관점에서 “아시아 식량안보기지”로서 전략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
 -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농수산물 안전성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한국산 농수산물의 가치가 향상되었음.
 - 중국 동안에 대규모 원전시설이 구축되어 있어 불가항력적 변수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아시아 지역의 식량안보기지로써 미래 지향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

2) 탄소중립 갯벌생태환경 보전

- 탄소중립 2050 선언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로 해양수산업도 환경오염을 줄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
 - 친환경성을 높이고 미래세대를 위한 수산자원 관리정책에 적극 동참하며, 궁극적으로 어민 인식제고, 적정 관리 등을 유도
 - 해양수산자원을 활용한 탄소중립 2050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갯벌생태자원 활용, 패류, 염생식물 등 블루카본 가치창출 등이 주목
 - 청정 바다자원과 갯벌생태자원을 보유한 전라북도가 블루카본 전략을 주도하여 생태문명 중심지를 지향하는 도정철학과 국정철학을 선도할 수 있음.
- 갯벌생태환경보전과 블루카본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해당 자원을 산업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갯벌생태환경보전은 국제 람사르 협약에 따라 세계적 생태자원으로 가치를 높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체험관광 자원으로 활용
 - 해조류, 패류, 염생식물 등 블루카본 자원을 탄소흡수 본연의 역할과 경관개선, 종자 및 원료활용을 통한 소득증대 등 다각적 활용전략 검토

3) 기초역량강화 + 권역별 특성화 산업 육성

- 해양경관자원과 지역 스토리텔링 요소를 결합하여 권역별 특화자원을 활용한 차별화와 연계전략을 수립
 - 수산업, 수산기술연구개발, 어촌소득증대를 위하여 수산업과 레저·휴양·관광분야에 초점을 맞추되 지역 특화 요소를 부각시키는 방향
 - 예를 들어 군산시는 고군산군도, 수산물유통, 항만연계산업단지, 김제시는 내수면산업과 콜드체인시스템, 부안은 뉴시관광의 메카, 고창은 갯벌생태보전의 중심지 등 지자체가 담당하는 영역과 차별화 육성전략을 병행

- 권역별 특성화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원활한 연계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다양한 체험·관광 수요를 충족, 궁극적으로 어촌소득증대 기여
- 지역별 어항을 중심으로 어시장 문화를 만들고, 체계적인 유통·보관을 위하여 수산 식품거점단지로 종합하여 안정적인 수산인 소득기반 조성
- 각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 또는 수산식품을 수산식품가공단지로 집결, 콜드체인 물류거점에서 국내외 판매를 통하여 수산인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 해양경관자원 차이를 고려한 지역별 체험, 휴양, 레저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여 재방문 빈도를 높이는 전라북도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

4) 농산어촌 지역소멸 의제 발굴 및 협의주도

- 공간으로서 어촌은 농산어촌에 포함되어 도시화, 인구감소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가 심각함.
 - 현 정부에서 농산어촌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농산어촌 생활기반시설 확장을 지원
 -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 300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은 어촌 거주자의 정주여건 개선, 수산업 지원, 소득증대, 어촌공간의 가치창출에 초점을 맞춤.
- 개발 중심의 농산어촌 정책은 향후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전라북도 14개 시·군은 어촌, 농촌, 산촌 등이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지역소멸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 검토가 필요
 - 농산어촌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발굴하고, 실제 적용해 보는 공간으로 전라북도를 실증하여 향후 농산어촌 지역소멸 의제를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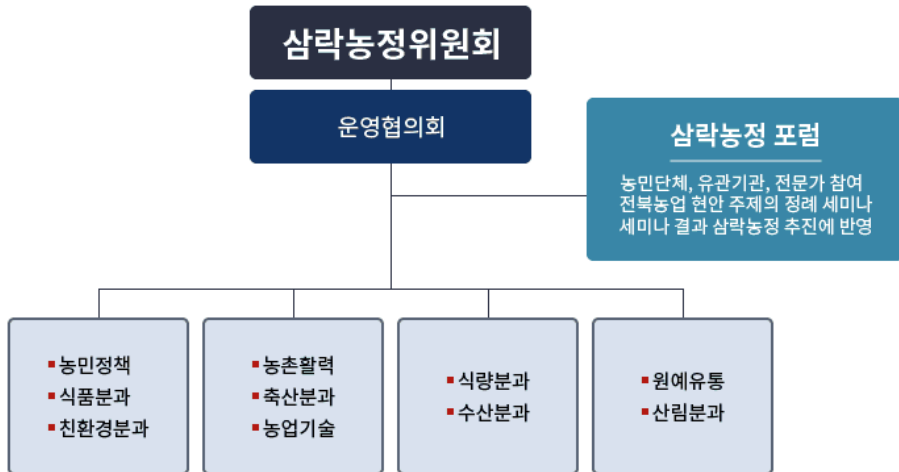
다. 참여 강화

1) 전라북도 해양수산발전포럼 구성·운영

- 전라북도 해양수산발전포럼은 해양수산분야의 민간, 행정, 전문가 그룹이 현안 문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정책포럼을 의미
 - 전라북도 삼각농정위원회가 주관하고, 10개 분과별 관계자가 현안문제 해결방안, 농정 트렌드에 대한 학습·토론기회를 부여하는 삼각농정포럼과 유사한 형태로 구성
 - 수산분과포럼이 운영되고 있지만 해양정책, 해양산업, 해양환경생태, 항만물류산업 등 영역의 논의를 담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 과거 전라북도 해양수산정책협의체, 전라북도 해양수산발전TF 등 다양한 형태로 해양수산분야 민간, 행정, 전문가 그룹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나 한시적으로 운영됨.

농민단체, 소비자단체, 대학 연구소, 도의회, 행정, 품목단체, 농수축협, 유관기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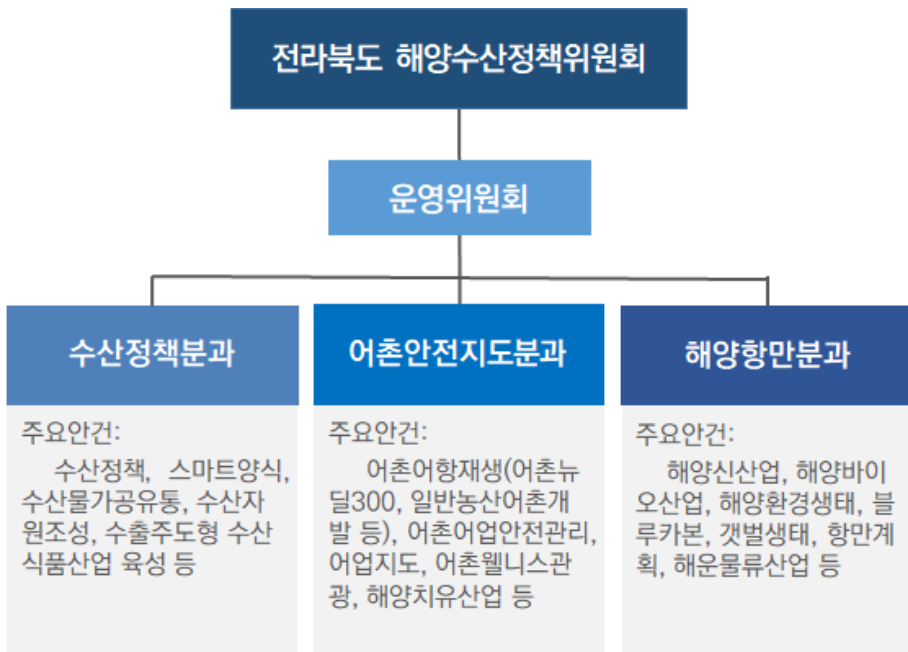
함께 만들어가는 삼각농정 추진체계



자료: 전라북도 홈페이지, jeonbuk.go.kr (접속일: 2021. 6. 26.)

〈그림 5-4〉 전라북도 삼각농정포럼 추진체계

- 전라북도 해양수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안해결방안 모색과 심의·의결을 위한 기구로 앞서 언급한 “전라북도 해양수산업정책위원회”가 포럼을 주관함.
- 분과구성은 수산정책분과, 어촌안전지도분과, 해양항만분과 등 3개 분과로 구성하여 각 분과별 민간, 행정,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보장
 - 수산정책분과는 수산정책 일반, 스마트양식, 수산물유통, 수산자원조성, 수출 주도형 수산식품산업 육성 등을 위한 다양한 현안과 미래 전략 수립 등을 협의
 - 어촌안전지도분과는 어촌뉴딜300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어촌재생의 공모사업의 효율적 이행과 어촌어업안전관리, 어업지도 등 업무와 해양치유산업, 어촌웰니스관광산업, 해양레저스포츠 등 관련 현안과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등 협의
 - 해양항만분과는 해양정책, 해양산업, 해양환경, 갯벌생태, 해양바이오산업, 항만운영계획, 해운물류산업 등 관련 현안과 미래 발전전략 등 협의



〈그림 5-5〉 전라북도 해양수산업발전포럼 구성·운영 제안

- 분과별 정례회의를 연 3회 이상 개최하고, 분과별 중요 현안이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하여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역량을 갖추도록 함.
-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역량은 해양수산공무원 전문성 보완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수요자 만족형 정책현안해결로 전라북도 해양수산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앞서 해양수산 공무원 전문성 강화 방안으로 현안 학습과 토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콜로кви엄, 심포지엄 등을 분과 운영위원이 기획하면 조직 업무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해양수산 지역협력체계 구축

가)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 **(서해안권역 지자체 협력)** 해양수산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 유치에 광역지자체 간 경쟁이 불가피하지만 지역별 특성화 전략을 기반으로 연계 필요
 - 일부 공모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지자체 간 경쟁이 불가피하더라도 지역별 특성화 영역을 중심으로 협력적 경쟁전략(co-opetition)을 추진
 - 전라북도 해양수산 특성화 방향 중 수출 주도형 수산식품산업 육성, 탄소중립 갯벌 생태환경 보전, 농산어촌 지역소멸 대응전략 추진 등은 인접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동목적 달성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음.
 - 서해안권역 지자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거점 가공단지에서 수출용 식품으로 생산하여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지로 수출하는 구조는 타 지역 수산업 종사자의 안정적 판로 확보에 기여할 수 있으며, 국가 식품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
- **(전라북도 기초·광역지자체 협력)** 군산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등 기초지자체와 전라북도 해양수산 조직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필요
 - 전라북도 해양수산정책사업은 대부분 시·군 해양수산조직과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추진되며 현장 중심의 사업관리를 기초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음.
 -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해양수산 현장업무처리와 현안문제 대응에 어려움을 공감하며, 협력적 자세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과거 전라북도 해양수산정책협의체 형태보다는 앞서 언급한 전라북도 해양수산발전포럼이 기초·광역지자체 간 소통, 협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나) 전라북도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물류, 환경, 관광 등)

- 수출입, 물류, 관광 등 타 부서의 고유 업무와 중복되거나 협력이 필요한 해양수산정책사업 성과개선을 위한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
 - 기존 고유업무 담당부서와 업무협력을 위한 임시조직형태의 TF, 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검토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발전포럼 분과별 참여를 요청할 수 있음.
- 분야별 고유사업의 강점에 전라북도 해양수산자원 특성을 결합하는 특성화 전략 고도화 추진
 - 항공물류, 육상물류, 물류단지 등을 담당하는 건설교통국 공항하천과와 새만금신항만, 국제공항 건설 이후 원스톱 물류서비스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검토
 - 어촌웰니스관광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총괄과, 체육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관광, 체육 등 고유업무와 연계협력 필요
 - 갯벌생태, 블루카본 등은 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 자연생태과 등 고유업무와 연계성이 높으며, 생태문명 중심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6

장

결론

Jeonbuk Institute

-
1. 연구요약
 2. 정책제언

제 6 장 결 론

1. 연구요약

- 이 연구는 전라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 조직개편에 따라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됨.
 - 해양수산정책은 관련 법·제도에 의거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지역 별로 유사한 해양수산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전라북도 해양수산 특성화 요인을 발굴하고, 조직개편 취지에 맞는 전문성 강화방향을 제안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음.

- 전라북도 해양수산발전, 타 지역 해양수산발전, 조직경쟁력 등을 중심으로 문헌검토 및 시사점을 도출
 - 전라북도 해양수산발전을 위한 다양한 계획이 수립되었고, “수산물산업”, “해양레저·관광산업”, “해운항만물류산업”, “미래해양산업” 등 선택과 집중 필요
 - 전라북도 해양수산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이 제안되었지만 조직구조의 한계, 인력부족 등으로 실제 이행사업이 부족
 - 해양수산분야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지역보유자원의 특화전략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아이템 선정 경쟁, 지역 해양자원의 미래산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이 추진
 - 조직경쟁력 관련 선행연구에서 타 지자체와 국가예산확보 경쟁원리, 정책경쟁력 요소, 조직경쟁력과 구성원 전문성 제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 전라북도 해양수산업무는 “수산업”, “수산기술연구개발”, “어촌복지증진·소득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음.
 - 정부 해양수산정책 추진방향은 “수산업 경쟁력 강화”, “항만·어항 사회간접자본 확충”, “어촌지역 활력제고”, “해양환경관리 강화”로 귀결
 - 해양수산정책업무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추진하며, 정책사업의 진화·지속성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전라북도 해양수산의 차별적인 특화전략을 설정하고 한정된 조직·인적자원을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함.
 - 기존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고도화 전략, 바다자원의 유사성과 모방 용이성 대응전략, 전라북도 해양수산 브랜드정책사업 개발 등이 필요
 - 정책사업의 성과는 관계자 자발적 참여, 지속성이 관건이며, 한정된 행정자원 보완 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사례연구 시사점을 도출한 결과 지역 여건에 따라 조직구조에 차이가 있으며, 조직구조의 경직성을 탈피하기 위한 임시조직, 지원조직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지역산업 경쟁력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대부분 지자체는 해양수산업, 항만물류산업, 해양환경보전 등을 주된 범위로 해양수산조직을 통합하고 있음.
 - 정부정책에 대응하고, 지역특화자원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 임시조직, 지원조직 구성 등 다양하게 대응
 - 다양한 분야의 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TF 설치·운동을 추진하지만 실질적 성과달성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전라북도가 주도하는 해양수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안으로 “전문성 강화”, “특성화 강화”, “참여 강화” 등 3가지 추진전략을 제안
 -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전라북도 해양수산조직 세분화”, “전라북도 해양수산조직개편 단계적 추진”, “전라북도 해양수산 공무원 전문성 강화” 등이 필요
 - “수출주도 수산식품산업”, “탄소중립 갯벌생태환경 보전”, “기초역량강화 + 권역별 특성화 산업”, “농산어촌 지역소멸 대응전략 주도” 등을 특성화 강화방향으로 제안
 - 참여 강화를 위하여 “전라북도 해양수산발전포럼 운영”과 “해양수산 지역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였음.



〈그림 6-1〉 전라북도 해양수산 경쟁력 강화 전략 제안

2. 정책제언

가. 해양수산 조직개편 방향성 유지

- 전라북도 해양수산조직개편은 새만금해양수산물 수산정책과, 해양항만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세분화가 필요함.
 - 조직개편에 따라 정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성과가 있었으며, 업무분장에 따라 넓고 얇은 업무에서 좁고 깊은 업무로 전환 단계에 있음.
 - 이 연구에서 업무영역별 전문성을 구성한 결과 수산정책과 업무는 수산정책, 수산식품산업, 수산물 유통, 스마트양식, 수산자원조성·관리 등으로 세분화 가능
 - 중장기적으로 “수출주도형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성장동력이자 국가 해양수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해양항만과 업무는 해양정책(미래신산업 발굴), 해양환경생태, 항만건설·계획지원, 해운물류산업 지원업무 등으로 구성
 - 농산어촌 마을소멸 예방, 삶의 질 제고 관점에서 어촌어항재생(어촌뉴딜300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어촌어업안전관리, 어업지도, 어촌웰니스관광 등 업무는 별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별도의 전담부서 편성을 고려
- 광범위한 해양수산정책업무에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전라북도 해양수산 특성화에 부합하는 방향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연구결과 수출 주도형 수산식품산업 육성, 친환경 갯벌생태환경 보전, 해양수산분야 기초역량 강화 기반 권역별 특성화 산업 육성, 농산어촌 지역소멸 대응전략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
 - 전라북도 해양수산 특성화 방향은 트렌드 변화에 따른 변동성이 크지 않으므로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준비와 이행이 요구
- 중장기적으로 전문성과 특성화 방향에 부합하는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적절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업무 추진의 동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수산업, 해양산업, 항만물류, 어촌웰니스관광 등 각 분야별 전문가, 해양수산업 종사자 등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 사업을 추진

- 정책 부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해안 인근 광역지자체, 협력가능 지자체와 연계전략을 수립하고, 전라북도 기초지자체와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나. 조직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단기 대응

- 조직개편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되, 긴급 현안과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단기 대응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조직개편을 통한 전라북도 해양수산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의 안정적인 변화와 대응이 필요
 -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추진과 함께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기회를 마련해야 하며, 업무기중을 예방하기 위하여 민간, 중간지원 조직 등의 협력이 필요
- 전라북도 해양수산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야별 민간 전문가, 해양수산업 종사자 등이 학습·토론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전라북도 해양수산정책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하며, 실질적인 현안 대응과 정부 정책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설계
 - 장기적 관점의 조직개편과 인력총원계획에 보조를 맞추어 단기적인 업무협조, 현장 업무지원 등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 부여
 - 순환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 전문적인 현안이슈를 학습·토론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와 조직 구성원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전라북도 해양수산 산·학·연·관 관계자가 참여하는 해양수산발전포럼을 기획·운영하여 현안대응과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 해양수산정책업무 특성상 현장대응업무가 빈번한 상황에서 관계 시·군과 원활한 소통과 협력방안을 모색
 - 전문성을 지닌 해양수산직 공무원 간 단기 인사교류, 기초·광역 지자체 간 TF 조직 구성, 현안 관련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하여 협력적 업무추진 도모
 - 중요 현안에 대한 정기적 소통 기회를 마련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과 진행경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정책업무 추진과 완료 사업에 대한 후속관리, 기반시설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활용 검토
 - 어촌뉴딜300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낙후된 어촌마을 인프라 개선사업은 실제 사업추진과 이행과정보다 사후관리, 활성화전략 추진 등이 중요
 - 담당 공무원은 매년 새로운 현장 발굴, 기획, 공모 등에 대응해야 하므로 지속적인 관리, 활성화 업무에 몰입하기 어려움.
 - “고창군 어촌뉴딜·종합개발사업지원센터”와 같이 현장 활동가로 중간지원조직으로 구성하여 사후관리, 활성화, 주민 역량강화 등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함.

다. 전라북도 해양수산 특성화 정책믹스 개발

- 이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해양수산 특성화 방향을 제안하였고, 지자체의 현장 맞춤형 개발전략을 상향식(bottom-up) 제안해야 할 것으로 판단
 - 우리나라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에 근거하여 대부분 업무를 정부가 주도하고, 일부 영역에서 지자체의 참여가 규정되는 여건을 고려
 - 이 연구에서 제안한 특성화 전략이 추진되어도 최종 결정은 정부가 내리며, 적합한 예산을 확보하거나 타 지자체와 경쟁 공모할 가능성이 있음.
- 전라북도 해양수산조직개편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특성화 가능 영역을 중심으로 자체 연구개발, 신규사업 발굴 등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정부 예산 확보로 추진여부가 결정되겠지만 현재 전라북도의 여건을 고려할 때 해양수산업 단독 발전보다 관련 산업과 융·복합 발전이 필요
 - 해양수산 특성화 방향에 부합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국가사업화를 위한 전략개발, 트렌드 분석, 연구개발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수출주도형 수산물식품산업 육성, 탄소중립 갯벌생태환경보전, 기초역량강화와 권역별 특성화산업 연계발전, 농산어촌 지역소멸 대응전략 주도 등은 현재 중요성보다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영역으로 미래지향적 발전전략 수립 필요

- 해양수산 하향식 정책사업과 전라북도 상향식 제안사업의 비중을 점차 늘려 궁극적으로 20% 수준까지 높일 것을 제안
 - 수산업, 수산기술연구개발, 어촌소득증대 등 보편적인 해양수산정책업무를 유지하면서, 점차 전라북도 여건에 맞는 맞춤형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전략을 추진
 - 전라북도 특성화 사업에 부합하는 해양수산업 발전으로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 유사 산업간 클러스터 효과 등 장기적으로 육성할 가치가 있음.

라. 전라북도 해양수산 특성화 지원역량 강화

- 전라북도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특성화 분야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역량 강화가 필요
 - 조직개편과 인력확충 계획, 민간·중간지원 조직 활용 등을 지원하고 타 지자체, 국가 간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성화 분야 전문성 구축이 필요
 - 수출주도형 수산식품산업, 탄소중립 갯벌생태환경 보전, 권역별 특성화 산업육성, 농산어촌 지역소멸 대응전략 등을 주도하기 위하여 기술경쟁역량 강화 필요
- 전라북도 해양수산 조직개편, 세분화와 수산기술연구개발의 특성화 역량 강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 민물고기, 갑각류, 해조류, 패류 등에 경쟁력이 있지만 고유품종에 대한 연구, 사업화 기술개발 등에 탁월한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음.
 - 전라북도 해양수산 조직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서식환경에 적합한 수산종자, 생산기술 등 연구개발 역량을 높여야 함.
- 수산업 중심지에 조성되었던 수산식품가공단지 조성·운영사업과 차별화하는 수출주도형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세부역량강화 필요
 - 농촌진흥청, 국가식품클러스터, 광역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농식품 분야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반면 수산물을 활용한 식품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이 전무함.
 - “전라북도 수산식품 연구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및 서해권역 수산물의 성분분석, 가정간편식, 밀키트 등 소비자 선호에 맞는 제품 개발 지원

마. 전라북도 해양수산 브랜드 사업 구상

- 조직구조개선과 특성화 방향에 따른 전문성 강화가 체계적으로 추진되면 전라북도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
 - 전문성 강화는 업무의 세분화를 의미하며, 좁은 영역의 깊이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여 정책사업성고를 달성해야 함.
 -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업무영역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세분화가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각 전문성을 연계하여 최적의 조합을 만들어야 함.

- 분야별 전문성 강화와 연계를 통하여 “전라북도 해양수산 브랜드 사업”을 구상할 수 있음.
 - 해양수산발전포럼의 분과별 핵심 의제를 결합한 통합 분과 운영으로 “전라북도 해양수산 브랜드 사업”을 구상함.
 - “전라북도 해양수산 브랜드 사업”은 분과별 핵심의제가 결합하여 현장 수요자 맞춤, 트렌드 대응, 미래 지속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됨.
 - 각 분과별 핵심 의제를 연계하는 통합분과 구성·운영은 “전라북도 해양수산정책위원회”의 운영위원회가 담당함.

- “전라북도 해양수산정책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산·학·연·관 협의체로 중요 현안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담당하며, 참여한 이해관계를 조정
 - 조직 경쟁력 관점에서 부서 간 업무조율과 협의를 거칠 수 있지만, 실질적 효과 제고를 위해서 중요 사업, 현안에 대한 심의·자문 기능이 중요
 - 분야별 전문성을 토대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전라북도 해양수산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이 중요하며, 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중요하게 반영하도록 함.

참고문헌

참고문헌

- 강동준, 김운수, 조혜정, 손은채, 이명화, 사경은 (2019). 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 중
합계획 수립 연구. 인천연구원.
- 강동준, 이명화 (2017). 공항만 도시 인천; 컨테이너 화물 처리에 따른 인천항의 지
역기여도 분석. 인천연구원.
- 강동준, 이명화 (2018). 수도권 거점 소형(레저) 선박 검사센터 조성 기초연구. 인천
연구원.
- 강동준, 이명화 (2019). 인천시 물류 스타트업 육성방안 연구. 인천연구원.
-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수산물 생산해역 오염원 등 안전관리 개선방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강마야, 여민수, 박경철, 김양중, 김종화, 김정하 (2015). 한중 FTA 농림수산물야
대응방안 연구. 충남연구원.
- 강원발전연구원 (2016). 강원도 해양레저관광발전 마스터플랜 연구. 강원도.
- 광주전남연구원 (2016). 전남 해양수산 융복합 벨트 정책과제 구체화. 전라남도.
-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 전라북도 연안 수산자원조사 연구용역. 전라북도.
-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 환경친화적 수산화지방산 생산 자생 미생물자원 발
굴-3차 년도.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8). 해양관광진흥지구 개발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 연구. 국
토교통부.
- 권영현 (2015). 충남 수산물 공동브랜드 추진방안에 대한 방향 설정. 충남연구원.
- 권혁준 (2016). 경북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연구. 대구경북연구원.
- 권혁준 (2017). 경북 수산자원조성 첨단기술 적용을 위한 기초 연구. 대구경북연구원.
- 권혁준 (2018). 경상북도 해양바이오 신소재산업 육성 방안. 대구경북연구원.
- 경남연구원 (2019). 남해안 해양관광특별권역 활성화 기반 구축 계획. 경상남도.
-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 얼음막 처리한 냉동수산물의 냉동전후 중량차이 연
구.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제경영원 (2017). 해양수산 ODA 사업의 체계적인 확대를 위한 협력모델 개발.
해양수산부.
- 기윤환 (2017). 인천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구상. 인천연구원.

- 기윤환, 김주희 (2017). 인천해안지역 친수공간 접근성 확보 방안. 인천연구원.
- 김경태, 이환범 (2020). 광역자치단체의 정보화 역량과 조직경쟁력 간의 영향관계 분석: 커뮤니케이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32(4), 797-823.
- 김경태, 이인배, 권미정 (2018). 충남의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충남연구원.
- 김경태 (2015a). 영목항 나들목 주변 해양관광거점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충남연구원.
- 김경태 (2015b). 충남 마리나항만 개발 기본구상 및 활성화 대책. 충남연구원.
- 김경태 (2015c). 해양레포츠 대회 실태 조사 및 개최방향 수립. 충남연구원.
- 김대진, 허성욱 (2015). 조직문화 격차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공관리학보, 29(3), 1-28.
- 김동주 (2018). 전남 해양공간계획 도입방안 연구. 광주전남연구원.
- 김석중 (2017). 속초해양산업단지 종합보세구역 발전방안. 강원연구원.
- 김선봉 (2018). 수입수산물(갑각류)의 관능검사 기준 개선 및 검사 적용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 김성국, 이성철, 장현정 (2015). 해양문화콘텐츠 중심도시 부산의 가능성. 부산발전연구원.
- 김성우 (2017). 2016년도 환경관리해역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평가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 김용현 (2016). 경북의 미래와 지역발전전략. 대구경북연구원.
- 김운수, 강동준, 이명화 (2018). 인천점점·도약을 위한 제언: 해양항공물류 분야. 인천연구원.
- 김운수 (2015a). 인천신항 항로중심으로 선박대형화에 대응해야. 인천발전연구원.
- 김운수 (2015b). 한중FTA체결에 따른 인천항 물동량 영향분석과 대응방안. 인천발전연구원.
- 김운수, 이명화 (2016). 인천시 해양레저산업 육성계획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 김운수, 이명화 (2018a). 연안여객 선사 및 항로의 운영효율성 분석 연구. 인천연구원.
- 김운수, 이명화 (2018b). 인천시 수산업 실태분석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인천연구원.
- 김운수, 이명화 (2019).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인천연구원.

- 김정하 (2017). 삼척시 연안 생태환경 모니터링 및 수산자원 복원 모델화 사업. 삼척시.
- 김종화 (2016). 충남 수산물 유통·가공·수출산업 발전방안 연구. 충남연구원.
- 김종화, 김진영 (2017). 충청남도 해양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충남연구원.
- 김종화, 목소리 (2018). 충남 신해양도시 조성을 위한 탐색적 연구. 충남연구원.
- 김종화 (2019). 북한 수산업 현황 및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충남연구원.
- 김진근 (2015). 해양플랜트기자재 동반 R&D사업 제안. 경남발전연구원.
- 김진근, 이정수 (2015). 불황기 조선해양산업 정책방향. 경남발전연구원.
- 김진근, 백절기, 하연철, 이정수 (2016).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구성에 따른 해양플랜트 기술인력 확보 방안. 경남발전연구원.
- 김진영 (2017). 충청남도 해양수산의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 충남연구원.
- 김진영 (2018). 충청남도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충남연구원.
- 김진영, 채동렬 (2015). 경상남도 수산업의 기후변화 적응현황과 대응방안. 경남발전연구원.
- 김창수, 윤진현 (2016). 인천시 해양설화의 콘텐츠화 방안연구. 인천발전연구원.
- 김창수, 홍승연 (2017). 인천 개항장 도시서사자원 활용방안. 인천발전연구원.
- 김충재 (2016). 강원도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강원연구원.
- 김충재 (2017). 강원도 수산업의 기후변화 적응과 대응 방안. 강원연구원.
- 김충재, 박재형 (2018). 강원도 동해안의 해양헬스케어 추진 방향. 강원연구원.
- 김충재, 전만식 (2018). 강원도 내수면 수산자원의 다목적 활용을 위한 기초 연구. 강원연구원.
- 김태만, 강병관, 권경선 (2019). 해양인문학진흥센터 조성 구상 연구. 부산연구원.
- 김태우, 정재호 (2020). 직무적합성과 경력정체성이 신규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조직문화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2(5), 79-104.
- 김태윤 (2015). 해양국립공원 조성을 위한 기초 연구. 제주연구원.
- 김현재, 김성중 (2020). 공무원의 환경 적합성이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8), 559-571.
- 김형철 (2019).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활성화 방향. 광주전남연구원.
- 김형철, 임형빈, 김정연 (2015). 충청남도 SOC 분야별 현황 수준 검토 및 시사점. 충남연구원.

나정호, 김형오, 오병록, 이대성, 고연경 (2017). 전라북도 해양산업 육성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나정호, 오병록, 고연경 (2018).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나정호, 조승현, 고연경, 김수용 (2018). 군산항 물동량 증대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나정호, 조승현, 정미선, 정호중 (2019). 군산항 벌크화물 연계산업 육성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나정호, 조승현, 정미선, 이병훈 (2019). 전라북도 수산식품산업 발전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나정호, 정호중 (2020). 전라북도 수산물 안전과 수산업의 지속발전.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216. 1-12.

남양엔지니어링 (2018).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안산시.

넥스트아이앤아이 (2019). 해양수산 R&D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해양수산부.

대구경북연구원 (2015). 한·중 FTA에 따른 지역 농수산업 부문의 영향과 대응전략. 경상북도.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 경북 향만 100년 기념사업 기본구상 연구용역. 경상북도.

더비엔아이 (2016). 해양수산 일자리 동향 파악 및 고용 활성화 연구. 해양수산부.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체계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문순덕, 김석윤 (2018). 제주해양문화자원 활용 방안 연구. 제주연구원.

박경옥, 우석봉, 지창환 (2019). 부산지역 체험형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 부산연구원.

박병주 (2016). 경남 향만의 특성화 강화 방안. 경남연구원.

박영제, 정충훈, 조철, 정의영, 김우중 (2017). 기후변화에 따른 충청남도 수산업 실태 및 대응 방안. 충남연구원.

박은옥 (2019). 어장환경 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감축 최소화 방안. 광주전남연구원.

박창순, 김성중 (2020). 소방공무원 조직문화 프로파일 연구. GRI 연구논총, 22(4), 41-70.

변일용, 이주영, 정현욱, 권태목, 김승길 (2019).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방안 기초연구. 울산발전연구원.

보험개발원 (2019).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손해를 개선방안 연구. 기획재정부.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 수입수산물(연체류)의 과학적 관능검사 기준개발 및 검사적용에 관한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제1차 부산수산업·어촌발전계획. 부산광역시.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을 위한 정책 전환 방향 연구.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a). 수산물 안전관리 효율화 방안. 해양수산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b).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개선방안 마련 연구. 해양수산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수입수산물 유사어종(갑각류) 과학적 판별법 개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2020). 스마트 해상물류 구축을 위한 선박항만육상 간 서비스 연계 효율화 방안 연구. 해양수산부.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 군산항 근대 항만역사관 건립 타당성조사용역. 해양수산부.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 수입수산물 유사어종 과학적 판별법 개발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 수입수산물 유사어종(이매패류) 과학적 판별법 개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실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및 제도화 방안 정책연구용역. 해양수산부.

식품안전정보원 (2018). 농수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신동호 (2016). 천북수산물식품거점단지 조성사업 가공분야 활성화방안. 충남연구원.

신우석, 임지운, 윤영관 (2018). 대천항 퇴적물의 유기물 및 중금속 분포 특성. 한국수처리학회지, 26(6), 1-9.

신우석, 이상신, 김종범, 황은영, 윤수향, 김아람 (2020). 충남 온실가스 감축역량 강화를 위한 해양연안 부문 적용확대 방안. 충남연구원.

신우석, 윤영관 (2018). 충청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추진연구. 충남연구원.

심진범, 김지선 (2017). 인천시 섬 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실태 분석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아쿠아인터내셔널 (2016). 해외수산물 인증제도 국내 적용방안 연구. 해양수산부.

안경아 (2018). 제주특별자치도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 방안. 제주연구원.

안영철 (2017). 부산시 해양조선 산업지도를 통한 정책연구. 부산발전연구원.

양진우 (2020). 동북아해양수도 비전 및 전략. 부산연구원.

영산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 해운대구 해양레저 상품개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에스디엠엔지니어링 (2016). 해양수산분야 자연재난 피해 통계자료 구축방안 연구. 해양수산부.

에스디엠엔지니어링 (2017). 해양수산분야 재난관리 효율화를 위한 기획연구. 해양수산부.

웍스 (2019). 양식수산물 전략품목 육성사업 추진체계 개선방안 마련 연구. 해양수산부.

윤종주, 윤영관 (2017).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 모델 개발. 충남연구원.

윤하연, 강동준 (2019). 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관리방안 연구. 인천연구원.

윤혜영, 정민선 (2020). 인천형 시민참여 항만재생 프레임 구축방향 연구. 인천연구원.

이동형 (2018). 경북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대구경북연구원.

이상훈, 지우석, 이수진, 조성한 (2019). 가평군 산악·수상관광 활성화 방안. 경기연구원.

이선영, 강민주 (2015). 부산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방안. 부산발전연구원.

이선영, 강민주 (2016). 부산 수산업 미래전문인력 양성 방안. 부산발전연구원.

이선영, 금성근 (2019). 서부산권 수산업의 6차산업화방안 연구. 부산연구원.

이인배 (2016). 대천-원산도-태안간 국도77호선 개통에 따른 해양관광활성화 방안. 충남연구원.

이해중, 김문중 (2017). 조직문화와 팀 학습행동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 문화산업연구, 17(4), 201-213.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위한 조직 역량제고 방안. 해양수산부.

인천발전연구원 (2016). 인천 내항·개항장 일대 현안 진단 및 공간 재생 전략. 인천발전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2017a). 도서지역 해상교통 접근성 향상방안 연구. 인천광역시.

인천발전연구원 (2017b). 항만 역세권 연계 도시재생 활성화방안(I). 국토연구원.

장정재, 이선영 (2015). 부산 수산업의 중국시장 진출 확대방안. 부산발전연구원.

- 장정재, 허윤수 (2016). 중국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성과와 부산의 대응방안. 부산발전연구원.
- 장하용. (2017). 해양분야 국제기구 부산 유치 전략 마련. 부산발전연구원.
- 장하용, 허윤수, 이정훈 (2020). 부산 스마트 항만(Smart Port) 연관산업 육성방안 연구. 부산연구원.
-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 수입수산물 유사어종(복어류) 과학적 판별법 개발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 전북경제연구원 (2017). 전주 농수산물 도매시장 활성화방안 및 시설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 전주시.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방향정립 용역. 전주시.
- 전북연구원. (2017). 전라북도 해양수산 지역현안문제 발굴. 전북씨그랜드센터.
- 전북연구원. (2020a).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방안 연구. 군산시.
- 전북연구원. (2020b). 군산항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정원조 (2018). 울산형 양식산업 육성 방안 연구. 울산연구원.
- 정원조 (2019). 재해안전항만 구축 방안 연구:울산 해양오염사고 대응 매뉴얼 개선. 울산연구원.
- 정종관 (2015). 격렬비열도와 인근유무인도서의 자연생태환경을 연계활용한 해양자원화 방안. 충남연구원.
- 조문석 (2013). 조직문화와 의사소통이 인지된 조직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직학회보, 10(3), 89-117.
-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 여수시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여수시.
-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 전남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전라남도.
- 조우정, 최의열 (2016). 해양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수요분석 및 수요자 중심의 정책 연구. 부산발전연구원.
- 조응래, 박충훈 (2019). 평택·당진항 발전협력체계 구축 방안. 경기연구원.
- 조응래, 이수행 (2018). 평택항 물류 활성화 방안. 경기연구원.
- 좌민석, 한석중 (2017). 제주지역수산업의 6차산업화를 위한 기초연구. 제주연구원.
- 좌민석 (2018a). 북한 수산업의 실태와 제주·북한 수산분야 협력방안. 제주연구원.
- 좌민석 (2018b). 제주도 해양치유산업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 제주연구원.
- 좌민석, 박상우 (2018). 제주지역 품질위생형 수산물 산지위판장 조성방안 연구. 제주연구원.

좌민석, 김지현 (2019). 2019년 수산물 유통 관측 조사 용역. 제주연구원.

좌민석, 조성환 (2019). 추자도 수산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방안 연구. 제주연구원.

좌민석 (2020). 코로나19에 따른 제주 수산업의 동향과 수산물 소비촉진 방안. 제주연구원.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서산시 천수만 지역 해양관광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서산시.

지방공기업평가원 (2016). (가칭)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제주특별자치도.

지우석, 박경철 (2018).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방안 마련 연구. 경기연구원.

지창환, 허윤수 (2020). 부산시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대응방안: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중심으로. 부산연구원.

채동렬, 김도형, 감지혜 (2016). 경남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과 과제. 경남연구원.

채동렬 (2015). 어촌관광단지 및 해양낚시공원 활성화 방안. 경남연구원.

채동렬 (2018). 경남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촌문화콘텐츠 발굴 및 활용방안. 경남연구원.

채동렬, 감지혜 (2016). 해양항노화-웰니스 융·복합산업 육성방안. 경남연구원.

채동렬, 손희곤 (2017). 경남 수산가공산업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과제 도출. 경남연구원.

채동렬, 이우신 (2016).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경남 양식산업 선진화 방향. 경남연구원.

채동렬, 함미경 (2017). 미래 식량안보 대응을 위한 수산업의 역할과 경남의 대응전략. 경남연구원.

최도석, 오동하, 허윤수 (2016). 부산 해양공간 개발 기본구상. 부산연구원.

최도석, 엄혜민 (2015). 부산지역 해양낚시레저파크 조성 방안. 부산연구원.

최병국, 김영률, 양주영 (2015). 국제여객터미널·송도신항 개발에 따른 인천서부 교통인프라 증대방안. 인천연구원.

최영근 (2019). 제주형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 제주연구원.

최용환 (2020).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방안- 인사제도 개선방안-. 충북연구원 연구보고서, 1-90.

최윤찬, 김도관, 황영순, 지창환 (2017). 부산 조선/해양기자재 산업 사업다각화 및

-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부산발전연구원.
- 최태림 (2017). 공항만 도시 인천: 공항과 항만의 재정기여 분석. 인천연구원.
- 충남연구원 (2017). 보령시 해양항만 발전 기본계획(2017~2030). 보령시.
- 충남연구원 (2018). 서천군 해양산업 발전 기본계획. 서천군.
- 충남연구원 (2020). 해양오염물질 발생원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수립 연구용역(2차년도). 충청남도.
- 충북연구원 (2020). 넥스트 노멀 시대, 충북의 대응전략. 충북연구원.
- 통일농수산 (2020). 평화시대 지속가능한 남북농림수산업협력 방향 설정 연구.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 표준미, 신성호 (2018). 권력거리, 성과측정시스템의 이용, 그리고 조직역량 간의 관계. 관리회계연구, 18(2), 249-279.
- 푸드윌텍 (2016). 수입수산물 선진관리체계 기반구축 방안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 한국경제개발연구원 (2018). 부산해양관광진흥 실행계획. 부산광역시.
- 한국관광개발연구원 (2016). 새만금 해양레저 선도사업 추진방안 연구. 새만금개발청.
- 한국교통연구원 (2015). 항만배후도로 지원기준 정비 연구. 해양수산부.
- 한국기계연구원 (2020). 전북형 첨단 스마트 양식 시스템 구축. 전라북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세종형 공공 농축수산물 복합유통단지 기본방향 및 타당성조사. 세종특별자치시.
- 한국농협 (2016). 수산업기술센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 태안군.
- 한국도시재생기술연구원 (2019). 부안군 해양관광 발전계획 수립 용역. 부안군.
- 한국법제연구원 (2016). 항만법령 체계정비 방안 연구용역. 해양수산부.
- 한국법제연구원 (2019a). 수산물 안전성조사 효율화 방안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 한국법제연구원 (2019b). 항만법령 전부개정 방안 연구. 해양수산부.
- 한국산업관계연구원 (2017). 청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청주시.
- 한국산업관계연구원 (2018). 공항만 상시출입자(차량) 검색업무 위탁방안 및 위탁운영비 산출을 위한 타당성 연구. 관세청.
- 한국산업정책연구원 (2017). 국민체육 해양레저스포츠 테마파크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여주시.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017). 농축수산물 생산자 위생관리 교육훈련 효율화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연안환경생태연구소 (2017). 자율관리어업이 수산자원회복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해양수산부.

한국정치학회 (2017). 국내외 정치지형 변화에 따른 해양수산 정책방향 설정 연구. 해양수산부.

한국종합물류연구원 (2018). 전라북도 항만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 전라북도.

한국항만기술단 (2019). 항만건설공사 작업일수 산정방식 개선 연구. 해양수산부.

한국항만운송노동연구원 (2019). 스마트 항만 육성방안 연구. 해양수산부.

한국항만협회 (2016). 마리아항만시설 안전점검 지침 연구.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16). 안산시 연안 수산자원 서식 및 생태환경 실태조사 용역. 안산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5a). 동북아 항만간 협력관계 촉진방안 연구용역.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5b). 수산기자재산업 실태조사 및 육성방안 연구.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5c). 수산업 구조개선 방안. 기획재정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5d).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중장기발전방향 및 지원금액 산정기준 연구.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5e). 해양수산 등록규제 적정성 검토용역.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6a). 16년도 해양수산부 규제비용 총량제 비용편익분석.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6b). 대중국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진입 절차 대응방안.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6c). 수산물 정부비축사업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7a). 권역별 수산물 수출가공단지 조성을 통한 수출가공산업 육성 방안 마련.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7b). 전라북도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전라북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7c). 전라남도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 전라남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8). 저변확대를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9a). 동북아 항만간 협력관계 촉진 방안 연구용역.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9b).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9c). 수산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 방안 연구.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9d). 전라북도 해양수산발전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전라북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9e). 전라북도 내수면 어업육성 및 6차 산업화 계획 수립 용역. 전라북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9f).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실태조사 및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9g). 항만인프라 경쟁력 수준 평가 및 개발 기준 마련연구.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9h). 해상풍력 사업의 해양수산 분야 영향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 연구.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9i). 해양수산 수소경제 기술 활성화방안 연구.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9j). 해양수산 미래전략 수립 연구용역(해양수산 스마트화를 중심으로).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9k). 해양수산백서(2017~2018) 발간 연구용역.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9l). 해운항만물류전문인력 양성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원 (2017). 국제 항만기술 연구동향조사 및 기술정보 구축 용역.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정책학회 (2018a). 충남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충청남도.

한국해양정책학회 (2018b). 해양수산 주요정책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 연구. 해양수산부.

한국행정학회 (2017a). 서천군 해양수산분야 조직강화를 위한 조직설계 연구. 서천군.

한국행정학회 (2017b). 중앙과 지방간 항만관리 역할분담 연구. 해양수산부.

한국행정학회 (2017c). 해양수산 행정권한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체계 연구. 해양수산부.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 (2020).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방안수립 연구용역.

대전광역시.

- 한승철 (2018). 제주 농수산물식품의 ASEAN 수출시장 동향 및 시사점. 제주연구원.
- 한승철, 한병우 (2017). 청정 제주 수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조사 연구. 제주연구원.
- 허강준, 박배근, 신기욱 (2017). 수산물 유래 인수공통 위해요소 안전관리 방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허윤수, 김상구, 최성두, 이광남 (2018).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중앙권한 지방이양에 관한 연구. 부산연구원.
- 허윤수, 이선영, 지창환, 남종오, 박광서, 박세현 (2019). 해양신산업 육성전략: 동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부산연구원.
- 허윤수 (2015). 부산 해양산업 클러스터 기업 유치 방안. 부산연구원.
- 해양환경관리공단 (2017). 해양수산부문 기후변화대응체계 기반 구축 연구. 해양수산부.
- 해양환경공단 (2019). 항만배출원 관리기준 마련 및 정책 활용 방안 연구. 해양수산부.
-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각국의 관리제도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
- 홍순욱, 조근태 (2009). 조직역량과 조직성과: 한국과 미국 제조업 R&D 조직의 비교연구. 기술혁신학회지, 12(4), 740-767.
- 황진호 (2015). 국가 미래성장동력 육성계획에 따른 울산 지역산업 발전 방향. 울산연구원.
- 황희정 (2017). 강화갯벌 에코 프로젝트: 갯벌이 살아나는 관광. 인천연구원.
- Michael E. Porter (1985). Competitive Advantage. The Free Press.

정책연구 2021-04

전라북도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

발 행 인 | 권 혁 남

발 행 일 | 2021년 7월 30일

발 행 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326-1 9352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